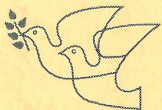


2011년도
제15차 정기 총회 자료집
(제16차 총회)

일시 : 2011년 1월 21일(금) 오후6시

장소 :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11년도
제15차 정기 총회 자료집
(제16차 총회)

일시 : 2011년 1월 21일(금) 오후6시

장소 : 여성미래센터 히스토리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자료집 목차

| | |
|------------------------|-----|
| ■ 정기총회 순서 | 2 |
| ■ 제14차 정기(제15차)총회 회의록 | 5 |
| ■ 2010 감사보고, 회계보고 | 9 |
| ■ 2010 사업보고 및 평가 | 13 |
| 1. 총괄평가 | 15 |
| 2. 사업보고 및 평가 | 19 |
| 1) 한반도평화센터 | 26 |
| 2) 갈등해결센터 | 28 |
| 3) 일상평화센터 | 44 |
| 4) 위원회(정책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 46 |
| 5) 연대사업 | 61 |
| 6) 협력사업 | 74 |
| 7)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76 |
| ■ 2011 사업계획안 | 81 |
| 1. 사업방향 | 83 |
| 2. 사업계획 | 84 |
| 1) 조직사업 | 84 |
| 2) 평화-통일사업 | 87 |
| 3) 갈등해결센터사업 | 88 |
| 4) 정보-홍보사업 | 92 |
| 5) 회원사업 | 92 |
| 6) 재정사업 | 92 |
| 7) 창립15주년기념 준비사업 | 93 |
| 8) 연대 및 협력사업 | 93 |
| ■ 부록 | 95 |
| 2010년 결산 및 2011년 예산안 | 97 |
| 공동대표 및 임원 인선안 | 100 |
| 평화여성회 정관 | 102 |
| 평화여성회 조직 현황 | 109 |
| 2010 설명서 목록 | 110 |
| 2010 설명서 | 112 |
| 여성평화뉴스레터 목차 | 211 |

정기총회 순서

I 부 회원등록 및 식사 나눔, 인사나누기 (오후 6:00 ~ 오후 6:30)

II부 본회의 (오후 6:30 ~ 오후 8:30)

1. 개회선언
2. 대표인사
3. 격려사
4. 서기임명
5. 성수보고
6. 회순채택
7. 전차회의록 승인
8. 2010년 감사보고
9. 2010년 사업보고와 승인
10. 2010년 결산보고와 승인
11. 공동대표 및 임원선출
12. 2011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13. 2011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14. 기타도의
15. 모범회원상 수여
16. 회의록 받음
17. 폐회

III부 신규 임원 아·취임식 (오후 8:30 ~ 오후 9:00)

전 회의록 승인



제14차 정기(제15차)총회 회의록

□ 서기 : 여혜숙, 김선혜

1. 일시 : 2010년 1월 20일(수) 오후 6시 - 오후8시 36분

2. 장소 : 여성플라자 아트갤러리 5

3. 주요내용

1) 개최선언 : 조영희 의장이 오후 5시 개최 선언을 하고, 정기총회를 시작하다.

2) 윤수경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다.

3)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격려인사를 하다.

4) 서기임명 : 조영희 의장이 여혜숙, 김선혜 회원을 총회 공동서기로 임명하다.

5) 성수보고 : 최은영 총무가 제14차 정기회원 157명 참석 27명, 위임 59명 총 86명으로 과반수임을 보고하고, 조영희 의장이 정관에 의거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다.

6) 회순채택 : 조영희 의장이 자료집의 회순을 낭독하고 그대로 받기로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7) 전차회의록 승인 : 최은영 총무(제14차 임시총회 서기)가 제14차 (임시)총회 회의록을 낭독하고, 이의 없이 그대로 받기로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8) 감사보고 : 진선미 사업감사가 자료를 토대로 2009년도 사업 감사결과를 보고하다. 한국연 회계감사가 사정상 불참하여, 박수선 갈등해결센터 소장이 자료대로 대독하여 보고하다.

9) 안건논의 :

안건1. 2009년도 사업보고 및 승인 :총회 자료집 3쪽부터 67쪽을 토대로 박수선 갈등해결센터소장이 요약 보고하다. 정경란 회원이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준비회의 중 미국에서 열린 준비회의가 누락되었음을 지적하여 보완하기로 하고, 17쪽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자문위원 명단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추후 확인하여 정리하기로 한 후, 홍승희 회원이 동의하고, 이덕경 회원이 제정하고 모두 동의하여 승인하다.

안건2. 2009년도 결산보고 및 승인 : 최은영 총무가 2009년도 결산보고를 자료와 별지를 토대로 보고하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김영리 원장이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회계보고 제정현황 중 총수입 금액이 잘못 표기되었음을 지적하고 3,241,838로 정

정할 것을 요청하다. 김영진 회원이 수정내용까지 포함해서 받기로 동의하고 이권명희 회원이 재청하고 모두 동의하여 승인하다.

안건3. 정관개정 : 윤수경 대표가 자료집 85쪽을 토대로 정관개정안을 설명하다. 박수선 회원이 개정안 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조영희 의장이 본인이 회원으로 활동할 의지가 없음을 표하는 등의 것임을 설명하고, 안향숙 회원이 동의하고 홍승희 회원이 재청하고 모두 자료대로 받기로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7시 35분 조영희 의장이 공천위원회회를 위해 정회선언을 하다.

7시 46분 조영희 의장이 회의 속개선언을 하다.

안건4. 임원선출 : 홍승희 공천위원장이 정현백 이사장 외 12명의 이사와 한국염회계감사 후보를 임원선출안으로 정리하였음을 보고하고, 이현숙 회원이 동의하고 최만진경 회원이 재청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다.

안건5. 여성미래센터 임주계획 보고 및 승인 : 조영희 의장이 여성미래센터 마련 경과를 보고한 후, 본회 사무실을 여성미래센터로 이전할 계획을 보고하고 모두 동의하다. 사무실 이전을 위한 모금계획안에 대해 박유희 회원이 동의하고 박수선 회원이 재청하여 모두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안건6. 2010년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 : 홍승희 한반도평화센터 소장이 자료집 68쪽에서 81쪽을 토대로 사업계획안을 요약보고하고, 모두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안건7. 2010년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 조영희 의장이 자료를 토대로 예산안을 보고하다. 박수선 회원이 예산항목 가운데 특별회계 2의 여성재단 활동가연수는 개인에 대한 지원이므로 본재정에 적절하지 않으니 별 것과 아름다운재단 수입내역은 2009년 이월금임을 표시할 것을 제안하여, 박수선 회원의 제안과 오타 수정을 포함하여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김정아 회원이 동의하고 안향숙 회원이 재청하고 모두 동의하여 승인하다.

10) 모범회원상 : 김영진 회원에게 모범회원상을, 후원단체 새길교회에 감사장을 수여하다.

11) 회의록 발송 : 김선훈 서기가 회의록을 낭독하고 모두 박수로 받기로 하다.

12) 폐회 : 조영희 의장이 오후 8시 36분 폐회를 선언하다.

2010년 감사보고

2010년 평화여성회 사업감사 보고

2010년 사업 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먼저 편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인명이 상실되는 그야말로 전쟁의 공포가 엄습해오는 비상사국으로 일관한 2010년 한 해 동안 가장 비평화적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낸 평화여성회 여러분의 노력에 대하여 깊은 존경을 표함과 아울러 각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 안의 힘겨움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 사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의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측면에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은 비상사국상황인지라 그때그때 위기상황마다 독자적으로 혹은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긴급히 대응해왔으나 한반도평화센터의 '사실상 사업의 연대 진행을 포기하고 논의를 접었다'라는 자체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 계획하였던 사업들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사업방향의 전환을 모색하고 그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2010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 정권의 대북정책의 방향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추진하였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둘째,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의 면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2010동북아여성평화회의가 개최되어 다양한 언론을 통하여 그 위치와 의미 및 내용이 시민사회에 전달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3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개최됨으로서 국제여성평화

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평화글로벌리더십을 발굴하고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면, 자체 평가에 나와 있듯이 국내에서 운동의 기반이 축적되어 자연스레 국제적으로 운동이 확산되는 방향이 아니라서 이 국제회의의 성과가 국내적으로 정착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상존해 온 열악한 재정문제 또한 여전히 드리났다고 할 것입니다. 그 필요성이나 효과라는 면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지지와 동참을 얻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필요해보입니다.

셋째, 갈등해결센터의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하여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래조성교육이 전년에 비하여 여러 학교로 확산되었고, 교육의 대상이 학생, 교사, 일반인,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 흥미로웠습니다. 더욱이 가정법원에서 소년법 개정에 따른 화해권고제도를 시행하는데 정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의 조정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시대적 상황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봅니다. 직업적 특성상 더욱 관심이 가는 영역이라서 좀더 특화되고 전문화되어 사회적 변화 흐름을 주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대상을 확대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대중화해서 전파해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넷째, 일상평화센터의 사업방향을 보면 일상에서 비평화적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읽어내기, 삶에서 평화를 만드는 다각적 방법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자체평가를 살펴보면 일상평화센터야말로 일상 속에서 비평화, 반평화 문제를 발굴하고 이슈화하고 회원들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을 마련하기 적절한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무국 역량을 보완하거나 구조의 변화를 통해 일상 속의 평화문화 형성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센터나 사업에 비하여 소극적인 모습이나 반드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하듯이 현 정권의 남은 임기동안 보다

면밀히 사업방향을 검토하여 정말 중요한 일상평화운동, 평화적 갈등해결문화의 확산 등에 더욱 집중하는 기간으로 삼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한반도평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또한 멈추지 말아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일상 속에서 개인에게 좀 더 구체화되고 내면화된다면 얼어붙어 온 완전히 부서질 것만 같은 남북관계에서 지향되어야 할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상 평화여성회 사업 감사 보고를 마칩니다.

2010. 1.

감 사 전 선 미

감 사 보 고 서

평화롭탄드는여성회 귀하

2010년 평화롭탄드는여성회 회계감사를 한 결과 회계장부(역설문서), 수입,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잘 구비되었고, 통장과도 일치함으로 이상이 없음을 보고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합니다.

1. 일반회계에 관성되어있는 퇴직금 지정을 독립 기금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2. 회계권의상 기호화한 항목계정은 역설작업에서 사용하고 보관용 금전출납회계문서를 위해서는 관·항·목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는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4. 감사를 위한 회계처리, 예산편성은 전년도 감사 지적을 참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7일 (월)

감사 한국 염 (서명)



2010년 사업보고 및 평가

- I. 2010년 사업 총평
- II. 2010년 사업보고



2010년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업보고 및 평가

I. 총괄평가

2010년, 평화여성회는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앞당기기 위한 여성평화운동, 정책역량과 회원의 활성화를 통해 조직을 강화하고, 대중과 결합하며 나아가는 여성평화운동, 민생·민주·남북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여성평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0년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에 있던 남북관계가 과단나고, 한반도 평화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위기의 한해였다. 전안함 침몰을 계기로 정부는 5·24조치를 발표하면서 남북교역중단선언을 발표하고, 압박을 통한 북한다루기를 고집하면서 PSI 훈련 주도적 참여를 권정하였다. 또한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자 서해에서의 대대적인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전개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의 현학은 여지없이 부수어지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제재와 압박, 힘의 논리에 따르는 상호 비방과 군사적 대결이 넘쳐나는 공포의 한해였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동북아평화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평화여성회는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대화협력을 주장하는 성명서 발표 등 여성평화의 관점에서 긴급한 상황에 대해 대응을 하고자 노력했다. 정부가 방어전략을 넘어 적극적인 억제정책으로 군사전략을 전환하는 군사적 경쟁구도로 전환하는 것을 지적하고,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치달아가는 군사적 도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결과 충돌에 저항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북아일랜드 여성을 초청하여 동북아여성평화회의(제3차)를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체제의 형성과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였으며, 평화형성과정에서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대결과 경쟁의 군사문화가 아닌 대화와 협력의 평화문화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회의 이후의 후속작업으로 대정부 공개질의 등을 전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형성과정에서의 여성의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

하고 UNSCR 1325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6-15공동선언 10주년, UN세계평화의날 기념행사 등 각각의 제기마다 회원들의 참여를 조직하여 행사를 배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여성평화운동의 실천적 과제를 제시했다. 비록 여성평화운동의 공간은 현재 상황이라 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으나 부족함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갈등해결센터는 도래증자와 청소년캠프, 지역의 갈등조정과 갈등분석, 회복적 사법조정 등의 참여, 도래조정, 평화커뮤니티사업, 교재발간과 동영상제작 등 평화교육 분야를 확산시킴으로서 상생하는 소통과 평화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5년여 준비하던 평화여성회 사무실을 여성·인권·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과제로 하는 다른 여성단체들과 함께 생활하는 여성미래센터에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사무공간과 회원들의 크고 작은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을 마련하였다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0년 사업방향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평화여성회는 친안함 침묵, 연평도 피격, 서해안에서의 군사훈련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기를 불러오는 상황마다 긴급한 대응을 독자적으로 혹은 제 시민·사회·평화단체와 연대하여 전개하였다. 특히 연평도 피격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평화여성회가 가장 먼저 무력충돌 중단, 대화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여성평화운동 전역의 서명을 받아내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여성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는 실천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등 악화일로로 남북관계로 인한 긴급한 현안 대응은 충분하지 못하였고, 연대사업의 영역에서 여성평화운동 영역에 요청되는 역할을 충분히 전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남북관계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은 여성부의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군사전략의 변화에 대한 의견제시, 남북교류에서의 여성의 배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을 제외하고는 부족하였다.

국내 최초의 여성평화운동 전문단체로서의 본회의 자부심과 소명에 부응하는 역할의 이행에 내기 위한 주체의 선정과 이행, 남북여성교류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운동을 전개하는 조직으로서의 전망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안모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2. 여성평화운동의 장기 전망 마련과 역량강화

운영위원회의 정책적 개척, 법인행정의 정리 등 조직운영상의 안정성이 높아졌고, 여성미래센터로 입주하여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 갈등해결센터의 사무공간이 통합 운영되고 회원들의 크고 작은 모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사무국이 활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3·8여성대회, 5·24군속의날, 6·15공동선언 기념, 정대협 수모시위, 사무실 이주기금 모금 등 시기별 여성평화운동 이슈나 과제에 따른 사업을 전개할 때마다, 회원들을 조직하여 참여의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으로 갈등해결센터는 갈등해결교육의 지속적 전개로 갈등해결 영역에서 평화여성회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평화교육·대안교육의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여성과 평화』 5호를 발간함으로써 여성평화운동 이론적 모색을 도모하여 조직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반면에 근거산점 이슈의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는 연구원의 활동을 직렬히 이끌어내지 못하여 근거산점 부활 시기에 필요한 적절한 대응을 해내지 못했고, 평화공존을 위한 직접행동이 필요한 시기에 갈등해결 영역의 철학과 이론을 여성평화운동의 현장으로 결목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실무자의 보강으로 법인행정, 회계업무 등에서 안정을 회복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실무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향후 조직과 여성평화운동 역량의 재정비를 통해 여성평화운동의 의제에 대한 집중과 선택으로 나아가 지속가능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민주주의 균형 회복을 위한 활동

현 정부 들어 민주주의의 역행,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시민운동 일반의 활동공간 확보가 한계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

단체로서 6·2지방선거를 계기로 하는 신거연합, 유권자운동에 함께 결합하는 등 여성단체, 시민단체, 평화단체 등과 연대하여 보수화하는 정부의 반평화적·반인권적 정책에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4대강 공사를 중단하는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와 과행 운영에 대응하는 공동행동, G20 공동대응, 천안함·연평도를 계기로 하는 군사적 긴장과 대결 고조에 저항하는 여성계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2010 지방선거 시기에 MB정부의 중간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전체 회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주거지병로 진행되는 유권자운동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의 승리를 이끌어 내는데 동참하였다.

II. 사업보고 및 평가

I. 회의 및 사무행정

1-1 회의

1-1-1 총회

- 1) 역할 :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구성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사업내용

(1) 2010년 정기총회

- 일시 : 2010. 1/20(수), P6~8.
- 장소 : 여성플라자 아트갤러리
- 참석 : 회원 157명 김미경 회원 등 총 86명 (위임 포함)
- 내용 : 2009년도 사업보고 및 승인, 2009년도 결산보고 및 승인, 정관개정, 임원선출, 여성미래센터 입주계획 보고 및 승인, 2010년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 2010년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등

(2) 2011년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 가. 역할 : 정기총회 준비, 설치-운영 기간 중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대행
- 나. 구성 : 총회전 마지막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사무국 실무활동가 등으로 선출

김신광(총무), 김선혜(갈등해결센터 사회갈등분석팀장), 김영진(갈등해결센터 청소년교육팀장), 김정수(국제협력위원장), 박수선(갈등해결센터 소장), 여혜숙(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윤수경(공동대표), 이권명희(전 일상평화

센터 소장), 정경관(정책위원장), 조영주(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조영희(위원장, 상임대표), 최안진경(한반도평화센터 세미나 팀장), 홍승희(한반도평화센터 소장) 총 13명

다. 내용

가) 준비소위원회 : 11/18(목), A10:20-12:00

- 내용 : 정기총회 일정 점검, 정기총회 상정 의제의 범주 점검, 회차별 의제 배분, 총회준비위원회의 진행 방법 등

나) 준비위원회 : 12/1(수), 12/13(수), 12/29(수), 2011/1/10(월)

○ 내용

- 1차 : 운영위원회 위임안건(3/4분기 결산 및 자산-부채 현황점검, 추경 예산안 검토, 재규정 검토 계획, 회원 명단 점검 등), 준비위원회 회차별 의제확인, 평가계획안 논의 등
- 2차 : 총회 참석자 인원점검, 전차회의 이월안건(총괄평가 초안 검토, 논점 평가토론, 송년모임 기획안 검토 등)
- 3차 : 규정소위 보고 점검, 공동대표 및 임원 인선안, 사업 및 조직 평가, 2011년 사업방향 및 사업계획 복식부기 도입안 등 검토 및 논의
- 4차 : 2010 사업보고 및 평가, 2010년 예결산 보고서, 2011년 사업계획, 2011년 예결산계획안, 공동대표 및 임원인선안, 이사회 부의안건, 총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등 검토 및 논의, 총회준비팀 구성 등

다) 인선위원회 : 12/29(금), 15:30-6:30

- 내용 : 공동대표 및 임원 인선안 마련

1-1-2 이사회

- 1) 역할 :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재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와 이사, 이사 중에 호선한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 이사장 : 정현백

- 이사 : 강승원, 김성은, 김열리, 김진희, 김지영, 박유희, 심영희, 윤수경
(공동대표), 전은주, 정경심, 조영희(공동대표), 한정숙

3) 사업내용

(1) 1차 정기이사회

- 일시 및 장소 : 1/15(금) P6:30-9:30, 평화여성회 회의실
- 내용 : 학원현황 점검 및 심의, 사무실 이전계획 심의, 정관계정안 심의, 제 14차 정기총회 프로그램 및 안전 심의 등

(2) 2차 정기이사회

- 일시 및 장소 : 7/9(금) P6:30-9:00,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 내용 : 상반기 사업 및 결산보고, 개정정관 등기 진행 관련, 기금사용 관련 심의 등

(3) 3차 임시이사회

- 일시 및 장소 : 12/2(목), 정오, 신촌
- 내용 : 추정예산안 심의, 인선위원회 위원 선출 및 구성 승인 등

1-1-3 운영위원회

- 1) 역할 :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각 센터 및 위원회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부설기구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 조영희(위원장, 상임대표), 윤수경(공동대표), 홍승희(한반도평화센터 소장), 최안진경(한반도평화센터 세미나 팀장), 박수선(갈등해결센터 소장), 김영진(갈등해결센터 청소년교육팀장), 여혜숙(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정경란(정책위원장), 김정수(국제협력위원장), 김열리(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조영주(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총11명

3) 사업내용

- (1) 제1차 : 2/8(월) A10:30-P1:30 총회록 점검, 사업보고,
- (2) 제2차 : 3/8(월) A11-P1:30 재규정검토, HUCA독일관련, 연대사업관련 등
- (3) 제3차 : 4/12(월) A11- 여성미래센터 임주관련, 비핵화 회의체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 건담회 및 평화군속박람회, 사업계획 점검 및 논의 등

- (4) 제4차 : 5/10(월) A11~A12:40 동북아여성평화회의 프로그램(안)검토 및 제정의 의, 미래센터 입주기금 마련논의, 정책위원장 선임, 평화음악회(기금마련) 준비위원구성 등
- (5) 제5차 : 5/27(목) P4~5:30 침안합 관련 정세현황 공유 및 대책논의
- (6) 제6차 : 6/7(월) A11:20~P2 미래센터 입주서 공간 배치논의 등
- (7) 제7차 : 7/5(월) A11 상반기 사업 및 회계결산안 점검, 장수기금 정산안 점검, 사무실 거소식 진행계획안 점검 등
- (8) 제8차 : 8/9(월) P1 ~P3 결산보고, 여성미래센터 입주기금정산보고, 법인등기 진행경과보고, 사업계획안심의, 법인등기관련 처리방안 논의,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검토, 하반기 후원행사 기획안 검토, 회원회비 납부현황점검 및 검토, 2010 LUN세계평화회의날 기념식 평화의 전사회 기획 검토 등
- (9) 제9차 : 9/13(월) A11~P1:30 각 센터별 사업(갈등해결센터, 웰진팀,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연대사업) 보고 등
- (10) 제10차 : 10/11(일) A11:10~P2 통일부 매뉴얼 기반 법인실무 강의, 법인등기업무완료보고,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진행경과 보고, 2011년 총회 일정 확정, 총준위 1-3차 일정확인 등
- (11) 제11차 : 11/8(월) A11:30~P3:15 총준위원 확정, 인선위원확정, HUCA대체 프로그램논의, 추경예산안, 제규정 검토, 매일랑리스트 관리방안 논의,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평가 등

1-14 주간회의

- 1) 역할 :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
- 2) 구성 :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
 - 위원 : 김선량 총무(7월-현재), 최은영 총무(1월 - 7월), 오영주 정보담당 활동가, 윤수경 공동대표, 정경란 정책위원장, 조영희 상임대표
- 3) 내용 : 매주 월요일 오전 (운영위원회 개최일 제외), 1/18, 1/25, 2/1, 2/22, 3/22, 3/29, 4/5, 4/19, 4/26, 5/3, 5/17, 5/31, 6/14, 6/21, 7/12, 8/9, 8/23, 8/30, 9/6, 9/27, 10/11, 10/15, 10/22, 11/15, 11/22, 12/6, 12/13, 12/20, 12/27, 2011/1/3, 2011/1/17

1-1-5 평가

- 1) 총회 : 총회를 통해 전체회원의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되었다. 특히 정관계정 과제를 수행하면서 오랜만에 참여하는 회원들과 본회의 이전 활동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변화된 환경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공감을 높이게 되었다. 다른 한편, 사전 준비과정에서 다른 안건을 새삼스레 제기하는 등 조직 내 소통부족의 현상들이 드러나기도 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긴밀히 하는 방법을 찾아 조율할 수 있는 사안들을 정리해내고 총회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2) 운영위원회 :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원들도 책임감 있게 참여하였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일례로 평화여성회 실무 집행단위가 충분한 역할을 갖추지 못하여 실무 논의를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 사업보고와 실무 진행상의 현안 논의에 집중되고 전체 사업방향 등 정책적 측면의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본회의 부실기구, 선택간의 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함으로써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풍부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3) 주간회의 : 주단위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진행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게 공유가 이루어졌고, 조직의 일정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분담하였다. 그러나 회의를 가급적 간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회의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업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1-2 범인·행정

1-2-1 감사

- 1) 역할 : 본회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 2) 구성
 - (1) 사업감사 : 진선미 변호사
 - (2) 회계감사 : 한국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3) 내용
 - (1) 사업감사 : 2011년 1월 10일 ~ 18일 대상 : 2010년 사업년도 사업 일제
 - (2) 회계감사 : 2011년 1월 17일 ~ 18일 대상 : 2010년 사업년도 재정 일제
- 4) 결과 : 감사보고서 참조

1-2-2 법인사무

1) 목표

- (1) 본회 법인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이행한다.
- (2) 여성평화운동의 안정적 추진과 실현,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2) 내용

(1) 법인등기

- 가. 등기업무 : 개정정관, 선임이사 등기 및 사임이사 삭제, 이사장 주소변경, 주 사무소 주소변경 및 관련서류 변경
 - 등기이사 : 정현배(이사장), 김지영, 박유희, 심영희, 윤수경, 권은주, 조영희 등7인
 - 변경서류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위탁업체 : 다름 법무사 사무실 (담당 : 김기현 법무사)

(2)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 관련

- 가. 재지정 신청 관련 서류 제출 : 12/10, 통일부 정책협력과
 - 제출서류 :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당해연도(2010년) 사업계획서, 지난 2년간 예결산서(2008년 예결산서, 2009년 예결산서), 당해연도(2010년) 예산
- 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여부 : 통상 관행상 12/31일자로 공고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지난 12월 말,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2011년 3월까지 서류제출을 유보한다'며 제출서류 반려함
 - 향후절차 : 통일부(등목부처)에 재신청하고, 통일부 추천후 기획재정부 승인

(3) 사무행정

- 가. 인사업무 : 신규채용 : 정경만 정책위원장(3/1), 김선광 총무(7/1)
 퇴직 : 최은영 총무(7/16)
- 나. 4대 보험 : 최은영 해지, 김선광, 정경만 신규가입
- 다. CMS 관리 : 2010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송(2011년 1/7), 매월 후원회비 이체, CMS 관리 업체 이전 계약 완료(12/16, 목)
 (HUCA → VanPro)

(4) 회계

- 가. 출납 및 기금관리, 결산보고 등

(5) 주사무소 이전 (※ 세부내용 : 아래 사무실 이전 현황 참조)

가. 사무실 이전

가) 이전일자 : 2010년 7월 1일

나) 이전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401호

나. 개소식

가) 일시 : 7/9(금), P5-7,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

나) 프로그램

(가) 사회 : 여혜숙 운영위원

(나) 경과보고 : 윤수경 공동대표

(다) 대표인사 : 조영희 상임대표

(라) 현관식 : 정현백 이사장 등

(마) 식사나눔

다. 참석 : 김영진 회원 등 다수

※ 사무실 이전 현황

1. 경과

- 2004년, 이전 사무실인 (구)여성평화의집을 매각하고 동소문동으로 이전함
- 2006년, (구)여성평화의집 입주단체인 평화여성회, 여성연합, 여신협, 기여연, 여성교회, 실업문화원 등 6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 여성미래센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함
- 2009년 12월, 본회 회원들을 포함한 수많은 후원자와 유한킴벌리, KT, 풀무원 등의 지원으로 여성미래센터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거친 후 2010년 6월 17일 개관함
- 2010년 7월 1일, 본회 제1차 정기이사회(1/15) 8호 안건, 제14차 정기총회(1/20) 5호 안건 의결에 의거, 사무실을 여성미래센터 401호로 이전함
- 2010년 7월 9일, 본회 사무실 개소식 진행하고 업무 개시함

2. 개요

- 구성 : 지상 5층, 지하 1층, 옥상층으로 구성
- 본회 공간 및 위치 : 전용면적 16평(공용면적 포함 24평), 401호

- 입주금 : (구)여성평화회집 지분금 31,711,000원과 회원들이 후원한 입주기금 24,000,000원 포함 총 55,711,000원
- 권한관계 : 2010년 6월 17일, 본회와 여성연합간의 임대계약 체결(임대기간 : 영구, 단 변동이 필요할 시 쌍방이 논의하여 결정함, 월 관리비 : 24평 기준, 평당 12,000원 총 316,800원, 전기·수도·난방비 등 별도)
- 입주단체 : 인권, 복지, 평화, 환경, 학술, 교육, 정치, 종교, 공동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12개 여성단체 (2층 :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교회, 3층 :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군인권센터, 여성사회교육원, 4층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기독교연회, 5층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공동시설 : 여성미래센터 사무국, 도움방(개발사무실), 히스토리홀(코피, 전시공간, 모임공간), 소풍방(교육장), 나눔방(게스트룸), 회의실(3층 평등방, 4층 평화방, 5층 미래방)

3. 입주기금 후원금 기부자

- 개인 : 김선광, 김선현, 김성복, 김숙임, 김엘리, 김영제, 김영진, 김윤옥, 김정수, 김지영, 김현희, 박수선, 박애경, 박유희, 박준기, 손무수, 심영희, 여혜숙, 윤수경, 이권명희, 이김현숙, 이낙호, 이우영, 이승환, 정경란, 정정심, 정현백, 조영희, 최안진경, 홍승희
- 공동 : 관동해결센터, 한국여성평화연구원

II 한반도평화센터

○ 구성 및 운영

(1) 소장 : 홍승희

(2) 운영위원 : 홍승희(위원장), 윤수경, 조영희, 최안진경

2-1 사업방향

1. 통일논의를 독립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정부의 새로운 시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대중적 공감을 모은다.

2. 이제까지의 통일논의가 남성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이유를 분석하고 이 틀을 넘어서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한다.

2-2 사업목표

1. 남북여성간 직접적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한다.
2. 북한 여성들의 독립적 경영의 터전을 마련하여 실질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영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남북여성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3. 남북여성 협력사업의 실천적 방안 마련을 위한 상시적, 일시적 후원조직을 구성한다.

2-3 사업계획

1. 남북 여성이 함께 경영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아이템을 발굴, 정세 변화에 대응하며 공동사업단을 구성한다.
2. 남북여성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공연 등 후원행사를 마련한다.
3. 후원행사를 계기로 통일운동에서의 여성의 일지를 대중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홍보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 실천한다.

2-4 사업내용

1. 회의

- 1) 운영위원회 : 연초 2회 (평화여성회 운영위원회와 연동)

2-5 사업평가

1. 사업계획이 상호 연동되어 추진되도록 짜여 있었으나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게 됨에 따라 사실상 사업의 연대 진행을 포기하고 논의를 접음
2. 초반 2회의 회의를 통해 남북여성 협력기업 설립을 원칙적으로 결정하고 사업 기금 모금 및 조직 확대, 홍보 등을 위한 음악회 개최를 검토, 일부 출연진의 재능 후원을 확보 받았으나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음

3. 근본적으로는 당초 사업계획이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내용이어서 현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 준비할 일을 찾아 실천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5. 단, 이미 재능 후원 방식으로 음악회 출연을 약속한 음악인들이 있으므로 이 사업을 장기 프로젝트로 전환, 2011~2013년 지속적으로 준비하며 남북여성 협력 사업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바탕이 일부 형성되었음
6. 다른 한편 한반도 평화 관련 현안과 이슈 대응활동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향후, 한반도 평화 이슈는 문화 조직의 현실적 역량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여 대응하고, 회원 참여를 높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II 갈등해결센터

○ 구성 및 운영

(1) 소장: 박수연

(2) 운영위원: 김선혜, 김영진, 김학욱, 김희경, 박상희, 박수연, 박인혜, 여혜숙, 이경순, 이덕경, 이재영, 이현숙, 조영희

(3) 청소년교육팀: 김영진(팀장), 이현숙(서기), 김지현, 남미영, 남수정, 문경아, 박경옥, 박무열, 박재진, 박정우, 안향숙, 이덕경

(4) 사회갈등분석팀: 김선혜(팀장), 이현주(서기), 김미경, 명세진, 박수연, 박재근, 이경순, 이항진, 정진화

(5) 회복적사법 조정팀: 김희경(팀장), 안향숙(서기), 김선혜, 김영진, 문경아, 박무열, 박상희, 박인혜, 박재진, 박홍나미, 박희진, 서정기, 이덕경, 이재영, 이항진, 여혜숙, 정태효

(6) 또래조정팀: 이덕경(팀장), 박상희(서기), 박경옥, 박인혜, 김영진, 안향숙, 이현숙

(7) 연구원: 김학욱, 이재영, 서정기, 박재근, 여혜숙

○ 회의

(1) 운영위원회: 격월 1회

- (2) 청소년교육팀 회의: 매월 1회
- (3) 사회갈등분석팀 회의: 격월 1회
- (4) 회복적 사법 조정팀: 월 1회
- (5) 도래조정팀 회의: 월 1회
- (6) 연구원: 수시

3-1 사업방향

1. 통합적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평화적 갈등해결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2. 그간의 활동의 성과와 평화적 갈등해결 전문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알리는데 노력한다.

3-2 사업목표

1. 갈등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2. 학교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3. 평화적 갈등해결 전문 조직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4. 그동안의 활동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알리는데 힘쓴다.
5. 회원들의 유대 강화에 힘쓴다.
6. 사회갈등 예방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 기반을 넓힌다.
7. 평화적 갈등해결 영역에서 일하는 평화활동가들과의 연대 형성에 노력한다.

*조직운영의 기본 방향

- 갈등해결센터의 회원은 평화적 갈등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은 이수한 평화여성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갈등해결센터의 회원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팀을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다.
- 갈등해결센터는 관심영역에 따라 청소년교육, 사회갈등분석 등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체계되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과제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갈등해결센터의 각 팀장은 팀의 성원을 관리하고 운영과 사업을 총괄한다.
- 갈등해결센터는 정기적인(격월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갈등해결센터의 사업전반을 논의, 결정한다.
-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는 소장 및 각 팀장, 본부 사무책임자 등의 당연직 운

영위원과 각 팀별 1인을 포함하는 일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 갈등해결센터는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모임을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공유 및 재교육 등을 수행한다.
-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1년 3회 이상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사업내용

3-3-1 회의

1. 운영위원회

- 1) 1차: 1/8 p7:00, 2010년 세부사업계획 논의
- 2) 2차: 3/18(목) p7:30, 강사드레이닝 등 세부사업 논의
- 3) 3차: 5/28(금) p7:30 평화커뮤니티, 강사드레이닝 등 진행사업 평가
- 4) 4차: 서면 보고 및 팀장회의 내용으로 대체하기로 함.
- 5) 5차: 9/16(목) p7:30, 동영상 홍보 방안, 아름다운재단 프로젝트 2011년 제안서 내용, 자문위원 위촉 건, 진행자훈련 준비, 공공갈등관리관련법 등 근황에 대하여 의견 나눔
- 6) 6차: 11/18(목) p8:00, 2010년 사업 평가 및 총준위 준비
- 7) 7차: 12/9(목) p7:30, 2011년 사업 계획

3-3-2 팀별 회의

1. 청소년교육팀 회의

- 1) 1차: 1/7(목) p7:30, 2010년 계획
- 2) 2차: 2/10(수) p7:30, 진행자평가지와 참여자활동평가서 논의, 학교교육 홍보방안
- 3) 3차: 3/17(수) p7:00, 진행자평가지 수정과 참여자활동평가서 논의
- 4) 4차: 4/27(수) p7:00, 참여자활동평가서 논의
- 5) 5차: 5/26(수) p7:30, 청소년캠프 논의
- 6) 6차: 6/21(월) p6:00, 청소년캠프 준비
- 7) 7차 : 7/7(수) p7:30, 청소년캠프 준비
- 8) 8차: 8/31(화) p7:00, 청소년캠프 평가

- 9) 9차: 10/5(화) p7:00, 공부모임 계획
- 10) 10차: 11/1(월) p7:00, 2010년 평가, 학교교육공문 검토
- 11) 11차: 12/7(화) p7:00, 2011년 계획

2. 사회갈등분석팀 회의

- 1) 1차: 2/5(금) p7:00, 2010년 저화
- 2) 2차: 3/5(금) p7:00, 광주남구 갈등조정협의회 사례
- 3) 3차: 7/21(수) p8:00, 앞으로 계획 논의
- 4) 4차: 8/4(수) p8:00, 지방자치장 선거 이후 갈등 양상, 갈등해결시스템 관련 학습 및 논의
- 5) 5차: 8/4 p7:00, 'Getting Disputes Resolved' 1장 학습
- 6) 6차: 8/16 p7:30, 2장 분쟁해결시스템 진단 학습
- 7) 7차: 9/17 p7:30, 'Getting Disputes Resolved' 3장 학습
- 8) 8차: 10/15 p7:30, 'Getting Disputes Resolved' 3장 학습
- 9) 9차: 12/10 p7:30, 사회적 자본 학습, 2010년 평가

3. 회복적사법 조정팀

- 1) 1차: 1/11(월) p7:30, 2010년 팀 사업계획
- 2) 2차: 2/3(수) p7:30, 조정 실습
- 3) 3차: 3/15(월) p7:30, 조정 실습(예비조정)
- 4) 4차: 4/5(화) p7:30, 예비조정 실습, 서울 시내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실태 조사
- 5) 5차: 5/4(화) p7:30, 조정 실습
- 6) 6차: 6/7(월) p7:30, 조정 실습
- 7) 7차: 7/17(토) a10:00~p2:00, 조정실습, YTN 실습교육장면 촬영
- 8) 8차: 8/2(월) p7:30, 조정실습
- 9) 9차: 9/8(수) p7:30, 조정실습
- 10) 10차: 10/6(수) p7:30, 회복적 사법 시론 소개 및 논의
- 11) 11차: 11/10(수) p7:30, 각자 조정한 경험 나누기(법원, 개인적, 조직내 등)
- 12) 12차: 12/8(수) p7:30, 한기찬 변호사 강의 / 회복적 사법 조정에 도움 되는 법률이야기

4. 도래조정팀

- 1) 1차: 1/31(일) p7:00, 도래조정반 운영 홍보계획안 논의
- 2) 2차: 2/24(수) p7:00, 외국의 도래조정 사례 학습
- 3) 3차: 3/29(일) p7:00, 도래조정반 운영 관련
- 4) 4차: 4/28(수) p7:00, 도래조정반 운영 관련
- 5) 5차: 5/31(일) p7:00, '평화를 여는 도래중재' 학습도래조정반 운영 관련
- 6) 6차: 7/12(월) p7:00, 도래조정결과보고서 양식작성, 맺이하기 조정사나리오 개발
- 7) 7차: 8/20(금) p7:00, 도래조정반 운영 관련
- 8) 8차: 9/30(금) p7:00, 독산초운영안 논의, 8회 이상 수업 시 평가일지, 사전사 후설문조사
- 9) 9차: 11/5(금) p5:00, 여주중도래조정운영세안서 검토, 도래조정팀 평가와 계획
- 10) 10차: 12/16(목) p7:00, 2011년 계획, 학습: 대화모형 써볼 이해

5. 교재개발회의(김영지, 김영진, 김학목, 박인혜, 박수선, 유정은, 이덕경 참여)

- 1) 1차: 1/10(일) p2:00, 교안집 목차, 세부내용 논의
- 2) 2차: 1/31(일) p2:00, 교안집 내용 검토
- 3) 3차: 2/21(일) p2:00, 교안집 내용 검토
- 4) 4차: 4/11(일) p2:00, 교안집 세부내용 검토
- 5) 5차: 6/6(일) p2:00, 세부내용 검토
- 6) 6차: 6/27(일) p2:00, 세부내용 검토
- 7) 7차: 8/8(일) p2:00, 세부내용 검토
- 8) 8차: 8/21(일) p2:00, 세부내용 검토
- 9) 9차: 9/4(토) p3:00, 세부내용 검토
- 10) 10차: 10/8(금) p6:30, 세부내용 검토
- 11) 11차: 10/28(목) p6:30, 세부내용 검토
- 12) 12차: 11/12(금) p7:00, 세부내용 검토
- 13) 13차: 11/27(토) p2:00, 세부내용 검토

6. 팀장회의(김선혜, 김영진, 김희경, 이덕경, 박수선 참여)

- 1) 1차: 1/15(금) p4:00 팀장회의 목적 및 주요 내용 논의, 평화커뮤니티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 2010년 세부내용

- 2) 2차: 2/1(월) p5:00 평화커뮤니티 홍보계획
- 3) 3차: 2/22(월) a10:30, 진행상황 점검, 회복적사업 조정자훈련 준비 등
- 4) 4차: 3/8(월) a10:30, 회복적사업 조정자훈련 평가, 평화커뮤니티 홍보물 검토
- 5) 5차: 3/22(월) p1:00, 평화커뮤니티 사업 관련 논의, 강사프레이닝 준비
- 6) 6차: 3/29(월) p12:00, 평화커뮤니티 사업 진행 검토
- 7) 7차: 4/12(월) p2:00, 사업 진행 검토
- 8) 8차: 5/ 3(월) p12:00, 사업 진행 검토
- 9) 9차: 7/17(토) p2:00, 평화커뮤니티 사업 관련,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인적 자원, 활동 관련, 평화여성회 조직 결반 관련 논의
- 10) 10차: 7/29(목) a10:30, 하반기 교육, 평화커뮤니티 사업 관련 세부내용 검토
- 11) 11차: 10/4(월) a10:00, 평화커뮤니티 사업 추진 관련, 진행자훈련 논의
- 12) 12차: 10/26(화) p3:30, 2011년 평화커뮤니티 사업 프로젝트 핵심 내용, 진행자훈련 논의, 함께인하는재단 프로젝트 관련
- 13) 13차: 11/9(화) a10:30, 여주중 도래조정반운영 제안서 검토, 2010년 사업평가 계획
- 14) 14차: 11/29(월) p7:30, 사업평가, 2011년 계획 관련
- 15) 15차: 12/24(금) p1:00, 2011년 사업계획, 일 제제

7. 동영상기획회의(김선혜, 김영지, 김정아, 김희경, 박수선, 박인혜, 최안진경 참여)

- 1) 1차: 1/25(월) p2:00 홍보동영상 기획 방향
- 2) 2차: 2/1(월) p3:00 홍보동영상 세부 내용
- 3) 3차: 2/8(월) p5:00 동영상제작 관련 아이디어 모으기
- 4) 4차: 3/8(월) p4:00, 시나리오 검토
- 5) 5차: 3/22(월)p3:00 시나리오 구성 논의
- 6) 6차: 3/29(월) p2:00 시나리오 검토
- 7) 7차: 4/19(월) p3:00, 시나리오 검토
- 8) 8차: 5/10(월) p2:00, 콘티 검토
- 9) 9차: 6/12(월) p3:00 촬영 진행상황 공유 및 시나리오 구성 논의
- 10) 10차: 7/12(월) p3:00 시나리오 검토
- 11) 11차: 7/27(화) p2:00 시나리오 검토
- 12) 12차: 10/5(화) p19:00 동영상 검토
- 13) 13차: 12/15(수) p19:00 평가

3-3-3 대외사업

1. 대상별 주요 교육 사업

1) 교사, 학부모 대상 공동체결 교육

| 차수 | 일시 | 기관 | 강사 |
|----|---------|--------------------|-----|
| 1 | 3월 9일 | 참교육학부모회 '과주지회' | 박수선 |
| 2 | 3월 17일 | 용인평화센터 | 김선훈 |
| 3 | 3월 26일 | 참교육학부모회 '양주지회' | 이덕경 |
| 4 | 4월 15일 |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 | 박인혜 |
| 5 | 4월 17일 |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 박수선 |
| 6 | 4월 17일 | 독산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 여혜숙 |
| 7 | 5월 14일 |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 박인혜 |
| 8 | 5월 18일 | 광주하남교육청 생활지도부장 연수 | 박수선 |
| 9 | 6월 17일 | 담동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 여혜숙 |
| 10 | 7월 23일 | 은평시민넷 회원 대상 | 김선훈 |
| 11 | 10월 6일 | 과주 심학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 박수선 |
| 12 | 10월 21일 | 구로시민센터 회원 대상 | 김선훈 |
| 13 | 11월 10일 | 미래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대상 | 여혜숙 |
| 14 | 11월 25일 | 구로시민센터 회원 대상 | 박수선 |
| 15 | 12월 16일 |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 상담원 대상 | 박수선 |

- 7/13 경기 광주 중학교 교사대상 커뮤니티 사업 소개(김선훈)
- 7/12 광명교육청 교감, 생활부장 연수에서 평화커뮤니티 사업 소개(여혜숙)
- 7/27 오전 9시30분-12시10분 남부교육청 학습능력증진캠프 진행(여혜숙)
- 10/15 양화중학교 교사 대상 '인권이해 및 감수성 실습'(김선훈)
- 10/21 동일중학교 교사 대상 '인권이해 및 감수성 실습'(김선훈)
- 11/8 당산서중학교 교사 대상 '교원 인권 감수성 훈련'(김선훈)
- 12/8 서울시교육청 주회 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 연수에서 평화커뮤니티 사업 소개(박수선)

2)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평화 교육

(1) 외부의뢰 단기 교육

- 1/23 목포 제일정보고등학교 학생 대상 '갈등해결과 평화' 수업(3시간, 김영진)
- 2/23~24, 지혜학교(광주 소재) 중고등학생 대상 학교 오리엔테이션에서 '갈등해결과 소통' 수업(9시간, 김선혜, 김영진, 이현숙 진행)
- 4/9(금) 의정부 발곡중학교 임원수련회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3시간) 경기도 양주 한아름수련원(진행: 김영진, 안향숙, 이현숙, 남미영)
- 5/10(월) 녹천중학교 방과후수업 '평화로운 갈등해결(폭력예방)' 교육, 1, 2학년 각 10여명, (2교시) (이덕경, 이현숙 진행, 권승현, 김영관 참관)
- 5/11(화) 용동초등학교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 4학년 전체 6개반(2교시) (김영진, 박경옥, 박인혜, 안향숙, 이덕경, 이현숙 진행, 권승현, 함영미 참관)
- 5/13, 27(목) 가양초등학교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 4학년 5반 32명(2교시) (이현숙 진행, 5월 13일 김말순 참관)
- 7/16(금), 19(월) 녹천중학교 1학년 7반(50분씩) (김선혜, 김영진, 박인혜, 이덕경 진행)
- 8/3(화), 9(월), 16(월), 23(월) 고양시 여성지역아동센터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1학년 18명(2시간씩 총 8시간) (김영진 진행)
- 8/3(화), 9(월), 16(월), 23(월) 고양시 반석지역아동센터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 초등학교 3-5학년 11명(1시간 30분씩 총 6시간) (김영진 진행)
- 8/4, 11, 18, 25(수) 고양시 등지지역아동센터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10명(2시간씩 총 8시간) (여혜숙 진행)
- 8/11, 18(수), 24(화), 25(수) 고양시 위드프라이미지역아동센터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 초등학교 4-5학년 10명(2시간씩 총 8시간) (여혜숙 진행)
- 9/7(화), 13(월), 27(월), 10/5(화), 12(화), 19(화) 고양시 장항지역아동센터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 초등학교 2-4학년 9명(1시간 30분씩 총 9시간) (이덕경 진행)
- 9/9, 16, 30, 10/7, 14, 21, 28, 11/4(목) 고양시 신성지역아동센터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9명(1시간 30분씩 총 12시간) (이덕경 진행)
- 9/13, 27, 10/4, 25(월) 고양시 장발신삼지역아동센터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 초등학교 4-5학년 9명(1시간 30분씩 총 6시간) (이현숙 진행)
- 9/15(수) 광명시 가림중학교 '학교폭력예방' 교육, 2학년 9개반(1교시) (김영진,

- 박경옥, 박재신, 이덕경, 이현숙 진행)
- 10/6, 13, 20, 27(수) 고양시 일산지역아동센터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초등학교 4~5학년 5명(2시간씩 총 8시간) (박재신 진행)
- 10/15, 22, 29, 11/5, 12(금) 고양시 밀양지역아동센터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초등학교 4~6학년 7명, 중학교 1~2학년 11명(2시간, 1시간 30분씩 분반수업 총 10회차) (박경옥 진행)
- 10/18, 25, 11/1, 8(월) 고양시 하늘문지역아동센터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초등학교 4~6학년 7명(1시간 30분씩 총 6회차) (이덕경 진행)
- 10/22, 29, 11/5, 12(금) 고양시 한사당푸른지역아동센터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초등학교 1~2학년 10명(2시간씩 총 6회차) (김영진 진행)
- 10/26, 11/2, 9, 16, 30, 12/4(화) 고양시 만디지역아동센터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초등학교 4, 5, 6학년(1시간 30분씩 총 6회차) (이덕경 진행)
- 11/1, 8, 15(월) 고양시 어울림지역아동센터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초등학교 3~6학년 6명(2시간씩 총 6회차) (이현숙 진행)
- 11/3, 10(수) 고양시 관산두지개지역아동센터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초등학교 2~6학년 6명(1시간 30분씩 총 6회차) (김영진 진행)
- 11/4, 11(목) 고양시 늘푸른지역아동센터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초등학교 4~6학년 12명(2시간씩 총 6회차) (박재신 진행)
- 남부교육청관할 초등학교 학생대표 교육(또래조정소개교육): 10/13(수)~27(수) 2시간~3시간씩 총 12회 진행(진행: 김선혜, 김영진, 남미영, 박경옥, 이덕경)
- 녹천중학교 평화리더십 교육: 9/8, 10/4, 7, 11, 14, 18 총6회(김선혜, 박인혜 진행)

(2) 또래조정반 운영

- 여주중학교: 이덕경(주), 정현수(보조) 오전 8시 40분~12시 10분
(3/20, 4/17, 5/15, 9/18, 10/16, 11/20, 12/18)
- 독산초등학교 (금천청소년수련관지원 1학기): 김영진(주) 박경옥(보조:2학기부터 참여)매주 목요일 오후 1시 50분~2시 30분(40분) 3/18, 4/8, 4/15 4/22, 5/6, 5/20, 5/27, 6/3, 6/10, 6/17, 6/24, 7/1, 9/2, 9/16, 10/7, 10/14, 10/21, 10/28, 11/4, 11/18, 11/25, 12/2, 12/9
- 상원중학교: 안향숙 진행 매주 토요일 3시간 제발활동 수업. 4/17, 5/15, 6/5, 6/19, 10/16
- 원광초등학교 방과후교실 또래조정교육:박인혜 진행 (6/15, 6/22, 6/29, 7/6)

- 7/31(토) 어주중학교 '행복한 동생, 학부모와 함께 하는 토레조정반 하루캠프'
오전10시~오후 5시: 박인혜, 이덕경(주), 정현주(보조), 이현숙(참관)
- 문성초등학교(금천청소년수련관 지원): 이덕경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50분~2시 30분 총10회 (9/7, 9/14, 9/28, 10/5, 10/12, 10/19, 10/26, 11/2, 11/9, 11/16)
- 문성중학교(금천청소년수련관지원): 박인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4시 30분 총 10회 (10/13, 10/20, 10/27, 11/3, 11/10, 11/17, 11/24, 12/1, 12/15, 12/22)
- 광명 YMCA 별치학교 토레조정소개 하루캠프 9/28 오전 9시~오후 4시 박인혜, 이덕경
- 출천 문화의 집 토레조정반:박인혜, 이덕경 총 8회 토요일 오후 2시 30분~5시 30분(9/11, 9/18, 10/2, 10/9, 10/16, 10/23, 10/30, 11/2)

(3) 청소년명화리더십캠프

- 일시 및 장소 : 2010년 7월 23-25일(금-일), 경기도 여주 밀머리미술학교
- 참가자 : 중학생 28명
- 준비모임 및 진행자 : 김영진, 남미영, 박경옥, 박인혜, 박재신, 안향숙, 이덕경, 이현숙, 참관: 김영란 / 자원봉사: 정지은
- 후속모임: 10/9(토) 10명 참여

(4) 외부의뢰청소년교육

- 광명교육연대 '학교폭력예방교육'
9/9(목), 10(금) 광성초등학교(5학년 7개반), 11/8(월), 15(월) 하안(5학년 6개반), 가림초등학교 (5학년 5개반) (김영진, 박인혜, 이덕경 진행)
- 남부교육청 주파, 사제동행캠프, 11/12(금) 90분(여혜숙, 박인혜, 이덕경, 박무열 진행)

(5) 기타

- 청소년여행문화학교 : 김선혜, 김영지, 김영란, 김영진, 박재신, 이덕경, 이현숙 참여
- 서울시교육청 창의인성재능기부 교육: '의사소통과 조정이해' 12/21 동원중학교, 대원국제중학교, 12/22 여의도유중중학교, 12/23 잠북중학교에서 진행(이덕경)

3) 지역 NGO 활동가 대상 갈등해결, 조정 훈련

(1) 강사트레이닝

- 안산YMCA 공동 주최 '제2기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해결과 평화적 지역사회를 만들기'-강사양성과정 기초: 3월 13일(화)-5월 11일(화) 총 9회 27시간(박수선, 여혜숙, 박인혜)
- 안산YMCA 공동 주최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해결과 평화적 지역사회를 만들기'-강사양성과정 심화: 5월 25일(화)-6월 24일(목) 총 9회 27시간(박수선, 여혜숙)
- 포항여성회 주최 "아동 청소년 분노조절 진행자 훈련": 6.3, 10, 24, 7.1 총20시간(박수선)
- 광명평생학습원 주최 시민대학과정 '갈등이해 및 평화문화정책을 위한 조정과정' 3월 ~12월 매주 1회 3시간씩 총 30회(이재영, 박인혜, 박경숙, 김선휘 참여)

(2) 조직내 갈등예방 및 해결, 회의진행 교육

- 민주노동 교육원 주최, "총회 대의원 총회 도본운영 이렇게 합시다" 진행: 7/8 (목) 7시간(박수선 진행)
- 한살림 중서부지부, 12/7, 14, 21, 28(화) p3:00~p6:00(12시간) 갈등예방과 해결, 의사소통, 회의진행 훈련
- 한살림 고양파주지회, 12/22~23 8시간, 조직내 의사소통, 회의진행 훈련

4) 공무원 대상 갈등해결, 조정훈련

- (1) 경찰교육원 정보선무교육에 갈등관리 주제로 교육
 - 진행 참가: 김선휘, 박수선, 여혜숙, 이재영
 - 3/15, 16, 5/24, 25, 7/19, 20, 9/14, 12/3
- (2) 경찰학교 인권강사과정, 피해자서포터즈 과정, 자기개발과정, 고객만족과정. 진행: 김선휘, 여혜숙
- (3) 공무원인재개발원에 강사로 참여(경기인재개발원,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광주 공무원교육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박수선)

5) 갈등해결과 평화 고급 과정

(1) 제3기 회복적 사범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조정자 훈련 과정

가. 일시: 2/26(금) A10 - 2/27(토) P5

나.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다. 참석: 김석봉 외 16명

라. 진행: 박수선, 이재영, 여혜숙, 김선혜

마. 내용: 회복적 사범이란?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이해, 조정자로서 역할과 책무, 실습

바. 평가

- 2008년도에 시작하여 3번째 진행한 프로그램으로서, 타 교육이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자기 위상이 있는 것에 비해 조직적 실천활동과 결합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의미가 있음.
- 올해의 훈련은 참가자들의 실천활동을 위한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실습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남음.

(2) 제8기 강사 트레이닝

가. 참석: 권승현 외 8명

나. 기간과 시간: 3/27(토) - 6/5(토) / 기초 및 심화과정 총 55시간

- 기초과정 3/27(토)-28(일) 1박2일 워크숍(기초과정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

- 심화과정 147(수) - 5/17(월) 16:30 - 9:30, 대회3시간씩 주 2회 10회

- 심화과정 II 5/29(토), 6/5(토) 17:30 - 6:30, 대회 5시간씩 2회

다.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층 NGO일민마당 (대명역 3번 출구)

라. 평가

- 청소년교육팀에서 전체 진행을 책임 진 것 뜻 깊음
- 참가자가 적어 공동체결연터 활동력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음

(3) 회의진행자훈련

가. 참석: 김민정 외 14명

나. 시간: 11/6(토) 10시-11/7(일) 5시

다.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층 NGO일민마당

라. 평가

- 2010년에는 직접 모집, 진행 계획은 없었지만 하반기 교육으로 진행하였는데, 참가자들이 조직 운영에 매우 필요한 교육이라는 평가를 하였음

- 교육 광고가 나가면서 개인적으로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조직 활동가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기획, 진행 요청이 들어와 두 군데에서 회의진행 관련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음. 그만큼 회의진행 교육, 훈련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있다는 의미로, 2011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교육 아이템으로 중요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평화적 갈등해결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 1) 평화커뮤니티 만들기 브로셔 제작, 회복적사범 대화모임, 또래조정반 운영,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등 소개
- 2) 평화커뮤니티 동영상 제작, 회복적사범 대화모임, 또래조정반 운영,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등 소개

3. 갈등해결을 위한 직접적 개입 활동

1) 회복적 사범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 ◎중학교 3:1 갈취사건 : 4월 12일 사건 접수, 19, 26일 예비조정, 26일 pm 3:00~4:30 당사자간 대화모임 진행(어혜숙, 이덕경 조정)
- ◆중학교 1:1 갈취사건 : 7월 21일 사건 접수, 8월 13일 예비조정, 당사자가 대화모임 동의하지 않아 예비조정으로 종결 (김선혜, 이덕경 조정)
- ♫고등학교 1:1 폭행사건 7월 20일 사건 접수, 9월 10,16일 예비조정, 9월 16일 대화모임 진행하고 합의에 이룸 (이재영, 서정기 조정)
- ♫고등학교 1:1 폭행사건 9월 15일 사건 접수, 9월 27일 10월 1, 15일 예비조정, 9월 17일 대화모임 진행하고 합의에 이룸(김선혜, 이경순 조정)
- ◇초등학교 1:2 절도 사건 12월 22일 대화모임 진행(박민혁, 이경순 조정)

4. 기타

1) 회복적정의시민사회네트워크

- * 비폭력평화물결, 한국기독교교정복지회, 새전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한국비폭력대화센터, 한국아나렘티스트센터,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등 참여. 현재는 회복적 실천 전문 훈련가 양성 국제워크숍을 위한 준비, 회복적 정의 관련 다양한 실천사업을 하는 조직들이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모임. 이후 공동의 실천 전망을 모색하기로 함.

(1) 1차 회의 : 1/29 P2-5, 이후 2/17, 4/14, 5/26, 7/14, 9/1, 10/6, 11/5, 11/24 9차 회의

(2) 회복적정의 전문가 양성 국제워크숍 진행
12/7(화)~11/11(토) 진행자: John B. Kinyon & Ike Lasater

2)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 활동

- 위촉 위원: 박수선 이재영, 여혜숙, 박인혜, 박상희, 김희경, 이경순

3) 의정부지방법원 화해권고위원 활동

- 김선혜, 박수선, 박인혜, 이태경, 이경순

4) 5/29(토) P2-6 이화여대 회복적시범센터 주최 “회복적 사법 국제세미나 - 회복적 소년사법의 실천방안 모색” 발제자로 참여.(박수선)

5) 6/16(수), 17(목) 대화문화아카데미 주최 한국평화교육전문가워크숍 참여(김영진, 김희경)

- 토 스페인 교수의 강의 및 워크숍(4시간)

- 평화교육 활동가 네트워크 형성 및 전략개발을 위한 대화(2시간)

6) 박수선 소장 사회통합위원회 지역분과위원으로 1년간 활동

3-3-4 대내사업

1. 감사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 학습

1) 청소년교육팀 공부모임

○ 참가자: 김영진(진행), 남미영, 김지현, 문경아, 박무열, 박남희, 안향숙, 이현숙,

- 1차: 1/18(월) P7, 양과분석 시연

- 2차: 2/10(수) P9, 교육진행방법론

- 3차: 3/6(토) A10, 교육세부내용 시연

- 4차: 3/22(월) P6, 의사소통 시연

- 5차: 7/19(월) P7, 청소년캠프 시연

2)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심화트레이닝(3기 대상)

- 참가자: 박수선(진행), 김선혜, 김영진, 안향숙, 이덕경, 이항진
 - 1차: 1/28(목) P6:30 리더역할훈련 토의, 새해 학습 계획
 - 2차: 3/3(수) P6:30, 교사학부모교육 시연(이덕경)
 - 3차: 3월 24일(수) 오후 6시 30분, 교사대상 교육 시연(김영진)
 - 4차: 4/23(금) P7:30 활동 개발(안향숙)
 - 5차: 5/25(화) P7:30 결정적 순간의 대화 토의(이덕경 진행)
 - 6차: 7/6(화) P7:00 여성을 위한 협상론(김영진 진행)

2. 갈등해결센터 회원 모모지

- 일시 및 장소 : 8/27(금) 오전 11시 광흥국립수목원
- 참가 : 김말순, 김선혜, 김영란, 김영지, 김성아, 김학복, 박무열, 박수선, 박인혜, 서미영, 서미영님 남편, 여혜숙, 이덕경, 이현숙

3-3-5 평가

1. 성과

- 1) 전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함
- 2) 도래조정교육이 여주중, 독산초, 상현중, 문성초, 문성중 등 여러 학교로 확산되었음
- 3) 평화커뮤니티 사업을 2년째 추진하면서 특히 올해 남부지역에서 교사대상, 학생 대상 1회성 수업, 도래조정을 알리는 교육, 도래조정반 운영 등 여러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졌음
- 4) 학교, 지역사회의 평화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교육, 도래조정, 대화모임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평화커뮤니티 사업을 소개하는 홍보물, 브로셔와 동영상 이 만들어져 향후 사업의 의미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음
- 5) 지난해에 이어 지역단위의 강사양성과정에 참여하고, 학교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주체로서 평화여성회의 위상을 알릴 수 있었음
- 6) 조직적으로는 도래조정팀이 새로 만들어지고, 청소년교육과 도래조정 운영 등으로 내용적 전문성으로 특성을 살려 활동하는 성과가 있음
- 7) 가정법원에서 소년법 개정에 따른 화해권고제도를 시행하는데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의 조정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한. 이는 그간 회복적 사법 관련 활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이해

2. 과제

- 1) 교육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지난해 평가를 통해 개회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줄였는데, 새롭게 진행되는 교육이 적어서 회원으로의 유입 통로가 줄어들고, 교육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알게 됨
- 2) 현재 센터의 교육은 강사트레이닝 이외에 지속성을 갖고 있지 못함. 대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하반기에 계획에는 없었지만, 회의전행 자훈련을 개최했는데, 참가자들이 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었음.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꾸준히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는 것이 요구됨
- 3)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활동가를 키우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음. 감수목 활동가가 양적으로 늘고 있음
- 4) 한 활동가가 여러 팀에 속해서 활동함으로써 집중성이 떨어질
- 5) 좀더 많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방법,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회원 교육, 회원 활동 활성화)
- 6) 평화커뮤니티 사업이 센터 전체의 사업인데, 사업을 진행할 때 때로 역할분담이 분명치 않거나 어려움이 존재함. 민간 유기적 결합, 사업에서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것 등 일 체계를 정돈할 필요가 있음
- 7) 센터 사업이 확장되기도 하지만, 평화여성회 감동해결센터만의 특화된 영역이 차츰 구축되어가고 있음. 현재는 교육훈련, 사례계열, 연구 등 활동이 다양한 대상층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상과 사업의 영역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사업별 필요성과 의미 등에 대해 더 검토하여야 함
- 8) 서울 외 지역에서 감동해결 관련 일의 영역이 구축되어 가고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관계를 맺고, 또 확산하는 데 조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함. 평화여성회 차원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관련 활동단체들이 함께 논의를 만들어갈 수도 있음.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면서 감동해결과 평화 의식,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 연대사업의 영역을 고민하여야 함

IV 일상평화센터

○ 구성 및 운영

- (1) 소장 : 윤수경
- (2) 구성 : 윤수경, 최안진경, 그 외 일상평화에 관심있는 회원들
- (3) 팀진팀 : 홍승희(팀장), 오영주, 윤수경, 이승헌

○ 회의

- (1) 운영위원회 : 격월 1회
- (2) 팀진팀 : 매월 1회

4-1 사업방향

1. 일상에서 비평화적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읽어내기
2. 삶에서 평화를 만드는 다각적 방법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4-2 사업목표

1. 회원의 지속적 참여 및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회원으로서의 정체성 및 교류·친목 도모
3. 팀진을 통한 평화에 대한 인식 확산

4-3 사업계획

1. 회원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2. 일상에서의 평화만들기 : 영화보고 토론하기, 독서모임
3. 연 1회 이상 회원의 날 행사 : 후원행사, 재경행사와 결합
4. 팀진발행 : 월1회 여성평화뉴스레터

4-4 사업내용

1. 회원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는 못하였다.
2. 여성영화제 공동감상을 진행하는 등 모임으로의 발전의 계기를 찾고자 하였다.
3. 사무실 이전, 재정마련을 위한 굿감관예 등 회원들과 소통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면서 사무실 개소식 등으로 회원모임을 진행하였으나 '회원의 날'로 정례화하지는 못하였다.
4. 웹진팀(후세부내용 : 아래 웹진팀 참조)을 구성하여 웹진 여성평화뉴스레터를 발행하였다.

4.5 평가

1. 성과

- 1) 사무실 이전 및 개소식, 재정마련을 위한 굿감관예, 정대협 수요시위 참여 독려, 법인 등기업무와 관련된 서류마련 등 회원들의 힘조와 참여가 전제되는 사업을 주로 담당하면서 회원들과 소통하는 일을 진행하였다.
- 2) 2008년부터 생산자와 직거래로 진행된 명진 굿감관예 사업은 열악한 사무국 이전에서도 어느 정도의 실속 있는 결과를 얻었다.
- 3) 매월 발행하는 웹진을 통해 평화여성회 활동을 회원들과 공유하였다.

2. 과제

- 1) 일상평화센터야말로 일상 속에서 비평화, 반평화 문제를 발굴하고 이슈화하고, 회원들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을 마련하기 적절한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일상센터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 2) 활동을 담당할 사무국 역량을 보완하거나 구조의 변화를 통해 일상속의 평화문화 형성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 웹진팀

- 1) 방향과 목표 : 평화문화운동의 대중적 확산과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웹2.0 시대에 걸맞는 대중친화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자율적,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도록 한다.
- 2) 사업계획
 - (1) 평화문화 확산 온라인 캠페인
 - (2) 내실 있는 웹진 발행

- (3) 홈페이지 활성화
- (4) 홈페이지 방문자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과 시행
- (5) 자료 보존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

3) 내용

- (1) 기획회의 : 3/15(월), 4/12(월), 5/24(월), 6/10(목), 8/16(월), 9/13(월)
- (2) 월별 협의 내용 구성 : 부록 참조

4) 평가

- 평화여성회 사이트 내실화를 위해 메뉴를 증설하고 캠페인 발행, 동북아여성평화회의 등 주요 사업 내용을 업데이트하였다.
- 리뉴얼한 평화여성회 사이트를 통해, 웹진을 본 회원들이 소감을 적을 수 있는 댓글 게시판을 추가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였고, 여성평화뉴스레터의 일부분을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포맷으로 만들어 웹진을 받은 사람들이 사이트에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조회 수도 많아졌다.
- 그러나 웹진을 조직하고 원활한 원고 수급을 이루어 낼 실무역량이 부족하여 발행이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원들과 독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이 다소 부족하다.
- 다양한 웹진을 확보하고, 참신한 구성을 이루는 등 운영을 위한 실무 역량 확보가 요구된다.

V 정책위원회

○ 구성 및 운영

- (1) 위원장 : 정경란
- (2) 위원 : 김현희, 박현선

5-1 사업내용

- 1. 여성발전기본법 전무개정안 대응활동
- 1) 본회 의견 수렴

- 진행일정 : 7/20(화), 초안작성, 정경란 정책위원장; 8/9(월), 본회 운영위원회
 의 안건논의; 8/13(금), 운영위원회 의견수렴 및 수정안 마련; 9/1(수),
 A10, 여성연합 회원단체 의견 마련 워크숍 참가 및 본회 의견 제출;
 9/15(수) 본회 최종의견서 작성

2) 평화여성회 의견서 제출

가. 일정 : 10/13

나. 제출처 : 여성부 여성정책과

다.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의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평화통일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평화여성회 의견서 제출

- 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간 협력 길을 평화통일과정의 여성참여증진 및 국제
 협력 지원으로 변경; 나) 여성발전기금, 여성정책 관련 시설 및 여성단체
 지원 등에 평화-통일과정에서 여성 활동 증진 및 지원사업 포함; 다)
 UNSCR 1325가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 모색할 것 등

2. 세미나

- 1) 주제 : 한반도평화체제와 여성
- 2) 일정 : 7월 - 8월
- 3) 장소 :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 날자 | 토론 주제 | 발제 |
|------|----------------------|--------------------|
| 7/15 | 세미나 개최 제안 설명 및 방향 논의 | 정경란(평어 정책위원장) |
| 7/23 | 평화체제 10대 쟁점 | 서보혁(이대 연구교수) |
| 7/29 | 선대와 개발협력 | 조영주(여성평화연구원 연구원) |
| 8/12 | 한미동맹 쟁점과 전망 | 김종대(D&D Focus 편집장) |

3. GPPAC(무장갈등예방국제네트워크)

1)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아리 사무실
- 참석 : 정경란, 박정은(참여연대), 이나라(피스포드 미국), 이기호(ARI)
- 내용 : 2010년 GPPAC 방문 보고 및 2011년 국제방문단 논의

2) GPPAC 동북아네트워크 워싱턴 DC 로비 투어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1월30일-12월 3일 / 워싱턴 DC

- 참석 : 정경란, 요시오카 히츠에, 메리 조이스, 이나테(피스보트)

Myagnar Dovchin Blue Banner, the Mongolian Institute of Geopolitical studies

Darynell Rodriguez Torres GPPAC Program Manager Interaction and Advocacy

- 3) 내용: 미국 NGO, 한반도 전문가, 의원, 국무부 관계자와 만나 한반도 문제 관련 논의

4) 프로그램

| | | |
|---------|----------|---|
| 11월 30일 | 오후 4시 | Institute of Policy Studies 존 페리 소장 |
| 12월 1일 | 10시-2시 |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미국 보고대회 참가 및 발표 (자료: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미국보고대회 참조) |
| | 3시 | 웹스필드 연구소 Gordon Flake 국장과 만남 |
| | 4시 | Woodrow Wilson Center Bryce Wakefield동아시아 담당 program associate |
| 12월 2일 | 오전 8시30분 | 존스홉킨스 대학 SAIS 미국 NGO들과 간담회 |
| | 11시30분 | 미국평화연구소 존 박 연구원 |
| | 오후 1시 | 미국 혼다 하원의원 |
| | 2시 | 성길 미국6지회담 특별대사 |
| | 3시30분 | 리처드 루저 상원의원 보좌관 키스 루스, 존펠리 상원의원 보좌관 아르만 트리레디 |
| 12월 3일 | 오전 9시30분 |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크링거 연구원 |
| | 11시30분 | 바바라 리 의원 보좌관 스크드 엑스너 |
| | 오후 1시 | 아시아재단의 벤시온 연구Research associate |
| | 2시30분 | 외교관계협의회(CFR) 폴 스테러스 예방행동센터 연구원 |

- 5) 기타 : 12월 3일 7시 사담사는세상-위싱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 6) 주요내용 : GPPAC 대표단은 미국 정책결정자, 의원, 싱크탱크, NGO 관계자를 만나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고,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도출하였다.

3. 성명서 발표 등 공동대응

- 1) 6/24(목), 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for a Peaceful Solution to the

Cheonan Incident in Support of Korean Civil Society

- 2) 12/2(목) 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4. 기타 (대의 활동, 발표, 기고, 회의 참가 등)

1) 기고

- (1) 6/16(수), [프레시안], 누가 죽고 사는 문제를 복명하는가
(2) 10/15(금), [여성신문], 평화 안보 모든 영역에 여성 적극 참여하길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10주년 맞아 촉구
(3) 11/2(화), [민족지 화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만남-2010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2) 토론회 발표, 패널 참석 등

- (1) 4/23(금), "시민사회 통일론 정립을 위한 집중토론" 참석
(2) 6/21(월), 한성대 전쟁과평화연구소 제21차 콜로키엄, 토론자 참가
(3) 6/24(목), 시민평화포럼 릴레이토론, 토론자 참가
(4) 7/8(목), "시민사회 통일론 정립을 위한 집중토론" 참석
(5) 8/26(목), 한일평화NGOs 간담회, 패널 참가
(6) 11/3(금)-7(일), 제3회 동아시아 평화포럼, "2050년의 동아시아 :국가주의를 넘어서" 참가
(7) 11/17(수), 참여연대 및 인하대 법학연구소 국제워크숍, 발표자 참가
(8) 12/8(수), 시민평화포럼 릴레이토론회, 발표자 참가
(9) 12/15(수), 인하대 법학연구소 국제심포지엄, 발표자 참가

3-2 평가

- 2010년 정책위원회 사업은 사전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진행과 관련한 사전 워크숍 조직,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전체 행사 준비 및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현안과 관련하여 긴급대응 형태로 성명서·정책 제안서 작성 및 국제연대 작업을 수행하였다.
- 그러나 정책위원회를 지원할 실무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이 수행되어 깊이 있는 정책 논의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정책을 전담하고 지원할 실무역량이 필요하다.

VI 국제협력위원회

○ 구성 및 운영

- (1) 위원장 : 김정수
- (2) 위원 : 별도 구성 없음

1. 사업계획

1) 빈곤과 폭력없는 세상을 위한 세계여성행진 동참

- (1) 일정 : 3월
- (2) 내용 : 3·8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연합 등과 공동으로 참여

2)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공동주최

- (1) 일정 : 연중
- (2) 내용 : 사전 워크숍, 본회의, 평가워크숍
- (3) 세부내용 :

■ 동북아여성평화회의(계획안)

- 주최 :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추진위원회
- 주관단체 :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화협 여성위원회
- 구성
 - 추진위원장 : 정현택 평화여성회 이사장
 - 공동운영위원장 : 조명희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
 - 공동집행위원장 : 김정수 평화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조명숙 여성연합 국제연대센터장
 - 코디네이터 : 정경란 평화여성회 정책위원장
 - 사무국 : 평화여성회
- 일시 및 장소 : 10/5(화) ~ 10/7(목),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실
- 내용

1. 사전 워크숍

- 1) 1차 : 2월 / 국내 주최단체 내부 워크숍(서울) : 2010회의 진행 추진계획 확정

및 북핵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과 여성평화운동 과제 수립

2) 2차 : 4월 / 국내 전문가 워크숍 1(서울) : 여성들의 트랙 II 활동 사례 연구 및 전략수립

3) 3차 : 5월 / 국내전문가 워크숍 2(서울) : 국내외 북한지원 현황 분석 및 기존 '북한 개발담론' 검토

4) 4차 : 6월 / 국내전문가워크숍(서울) :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의 담론개발과 실행방안 모색

5) 5차 : 8월 / 국내 주최단체내부 워크숍(서울) :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남)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담론 구성과 실천 방안 모색

6) 6차 : 9월 / 국내 주최단체내부 워크숍(서울) :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의제 개발 및 세부 컨텐츠 확정

2.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 : 10월초(서울, 3박 4일 예정)

3. 11월 미국 방문과 로비 활동 : 실행위원 4인의 워싱턴과 뉴욕 방문, 미국 의회와 정부 방문, 미국 언론 접촉, 미국 및 국제 NGO방문, 소장 한인교포 여성과의 만남과 네트워킹 모색

4. 사후 보고 및 평가워크숍(서울) : 12월

5. 홍보 : 1) 언론 홍보 2) 자료집 발간 3) 영상물 제작

2. 사업내용

1) 빈곤과 폭력없는 세상을 위한 세계여성행진 동부

(1) 일시 및 장소 : 3/6(토), P1-5, 이화여대 대강당, 창천 어린이공원

(2) 주최 : 3·8세계여성の日 기념 제26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3) 세부내용 : 연대사업 한국여성단체연합 3·8여성대회 참조

2)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아래 별도 보고 참조)

3) G20 대응 여성행동

(1) 방담회

○ 일시 및 장소 : 9/7(화), A10-P3, 평화방

○ 참석 : 조영희 상임대표, 정경란 정책위원장

○ 내용 : 개발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G20을 둘러싼 개발이슈의 흐름, 개발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제동향과 전망, 해외원조단체의 활동과 흐름 등에 대한 발제 및 논의

(2) G20 대응 여성행동 라운드테이블

- 일시 및 장소 : 11/8(월), P1.30-6, 서강대 예수회센터
- 내용 : 글로벌 금융위기와 여성, G20 개발담론과 성평등 개발 페러다임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

(3) G20 대응 여성행동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1/10(수), P2, 서강대 예수회센터
- 참석 : 조영희 상임대표
- 내용 : [G20,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라] 성명서 발표 및 각계발언

3. 평가

-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연속적인 개최로 한반도 평화 이슈를 국제적 여성평화 운동과 접목시키는데 기여하였다.
- 향후에는 조직구성 보다는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 동북아여성회의 (사업 진행은 정력위원회와 공동으로 수행)

1. 사업내용

(1) 회의

가. 실행위원회의

- 가) 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30일(금) 오후 6시 / 여성연합 회의실
- 나) 참석 : 김경수, 정경란, 정현덕, 조영희
- 다) 주요내용
 - (가)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일정 확정
 - (나) 주제 및 프로그램 논의
 - (다) 참가자 : 주제발표자, 각국 발표자 (각국 1명), NGO활동가, 의원, 전문가 등
 - (라) 재정 논의
 - (마)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사전 준비 일정
- 나. 실무회의 : 5/16, 5/27, 6/25, 10/4
 - (주요참석자 : 김경수, 정경란, 정현덕, 조지현, 조영숙, 조영희 등)

(2) 워크숍

가. 여성재단 주최 실무자 워크숍

(가) 일시 및 장소: 2010년 1월26일 오후1시/ 서울 여성플러자 2층 NGO센터 열린마당

(나) 참석: 김정수, 최은영

(다) 주요내용

(가) 2010년 한국여성재단 기획공모사업 파트너단체 실무자 워크샵

나. 내부단체 워크숍

가) 1차 워크숍

(가) 일시 및 장소: 2010년 3월 19일(금) 오후3시 / 여성연합 회의실

(나) 사회: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협력 위원장

(다) 참석: 정현백, 조영희, 정경란, 최은영

(라) 주요내용

ㄱ. 발표: 현재의 6자회담을 둘러싼 북미,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와 향후 전망 등 (김인철 한겨레평화연구소 박사)

ㄴ. 2010회의 주제 및 다음 워크숍 일정 논의 등 토의

나) 2차 워크숍

(가) 일시 및 장소: 2010년 7월 29일 오후 2시 /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나) 사회: 조영희 여성연합 통일평화위원장(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다) 주제: 젠더와 개발협력

(라) 발표: 조영주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마) 논의내용: 젠더와 국제협력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점검하고 한국 국제개발협력처(KOICA)의 젠더관련 협력 사업을 검토

다) 국내주최단체 내부워크숍

(가) 일시 및 장소: 2010년 9월8일(수) 오후 3시 / 여성미래센터 회의실

(나) 참가: 추진위 관계자가 참가하는 내부 워크숍

(다) 주제: 2010년 동북아여성평화회의(서울)의 프로그램 확정 및 입장문서 초안 논의

라) 주제발표문 검토 워크숍 1

(가) 일시 및 장소: 2010년 9월17일(금) 오후 3시 /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나) 참가: 실행위원 - 정현백, 남인순, 김정수, 정경란

(다) 주제: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주제발표문, 한국보고서,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입장문서 검토

다) 주제발표문 검토 워크숍 2

- (가) 일시 및 장소 : 2010년 9월24일(토) 오후 3시 / 정현택 추진위원장 연구실
- (나) 참가 : 실행위원 - 정현택, 남인순, 김정수, 정경란
- (다) 주제 :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주제발표문, 한국보고서,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입장문서 검토

나. 전문가 워크숍

가) 1차 워크숍

- (가) 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30일(금) 오후3시30분 / 여성평화회의집 교육장
- (나) 참석 : 조영희, 김정수, 정경란
- (다) 발제

- 그. 한반도평화체제 정착과 전망 - 서보혁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교수
- 나. 센터관점에서 본 한반도평화공동체 - 정현택 삼균재단 교수

나) 2차 전문가워크숍 -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 (가) 일시 및 장소 : 2010년 5월 27일 오후 2시/ 여성플라자 NGO센터 열린마당
- (나) 주제 : '분쟁지역에서 여성, 평화 그리고 발전'
- (다) 사회 : 조영숙 여성연합 국제연대센터장
- (라) 발표 :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UN안보리 결의안 1325호의 의미와 이행 방안 -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장
- (마) 참석 : 정현택, 최안진경, 조영희, 김정수, 정경란 외

다) 3차 전문가 워크숍

- (가) 일시 및 장소 : 7월 29일(수) 오후4시 /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 (나) 주제 : '남북여성의 교류와 협력'
- (다) 사회 : 조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라) 발표 : '남북 여성의 교류와 지원사업'
- 손미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마) 참석 : 정현택, 최안진경, 조영희, 김정수, 정경란 외

라) 4차 전문가 워크숍

- (가) 일시 및 장소 : 2010년 9월 3일 (금) 오후 3시 /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 (나) 주제 :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마) 참석 : 정현백, 최안진경, 조영희, 김정수, 정경란 외

(3) 기자간담회

가. 일시 및 장소 : 2010년 9월 29일(수) 오전 11시-12시 30분 / 한정식식당 '촌'
 나. 참가 : 실행위원 - 정현백, 남인순, 정경란 / 자원활동가 - 김태준 /
 기자 - 임미나 연합뉴스 기자, 조정훈 통일뉴스 기자
 다. 주제 :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소개

(4) 대사관 관련 활동 : 대사관 협조 공문 발송 -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대사
 관에 제정 및 방문 협조 요청서 보냄 (6/17)

(5)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본회의

주제 : '인안도평화체제 형성과 여성의 역할'

2010 Northeast Asian Women's Peace Conference

Women's Initiative for Creating Korean Peace Regim

가.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5일(화) - 7일(목)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DMZ 지역

나. 주최 :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

다. 주관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
 성단체연합

라. 후원 : 한국여성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GPPAC), 삼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마. 전체프로그램

| 일시 | 내 용 | |
|-------------|--|--------------------|
| 10/5(화) | 공개 심포지엄 | ○ 장소 :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 09:00~10:00 | 점수 | |
| 10:00~10:30 | 개회식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이공현 원불교 교무 • 개회사 : 정현백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장 • 축 사 : 한명숙 전국무총리 <li style="padding-left: 20px;">백희영 여성부 장관 <li style="padding-left: 20px;">최영희 국회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li style="padding-left: 20px;">조 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

| | |
|-------------|---|
| 10:30-12:30 | <p>I 세션 - 주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최지영 한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주제발표1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여성의 역할 : 남윤인순, 한국어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주제발표2 평화협상과정과 여성 - 북아일랜드에서 여성정당의 경험과 교훈 : Bronagh Hinds 북아일랜드여성연합 공동창립자 • 질의응답 • 토론 |
| 12:30-14:00 | <p>점심식사</p> |
| 14:00-17:30 | <p>II 세션 - 국가별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정경란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코디네이터 • 러시아 : Lebedeva Nira Boresova 러시아 여성연합 회원 러시아사회과학아카데미 동방연구소 수석연구원 • 미 국 : Linda J. Yarr 조지워싱턴대학 아시아 국제전략 파트너십 책임자 • 중 국 : Sun Jisheng 중국외교대학 교수 • 일 본 : Chie Yoshimura 일본YWCA 부대표 • 한 국 : 조영희 평화통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질의응답 • 종합토론 |
| 18:00-20:00 | <p>환영만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조영숙 동북아여성평화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환영사 : 윤수경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장 김상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 건배제의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 • 문화공연 : 원불교 중창단 / 김미란 여성연합 활동가 |
| 10/6(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전담회의 ▷ 미국대사관 방문 ▷ 원혜영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방문 ▷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 방문 |
| 10/7(목) | <p>평화기행 ○ 장소 : DMZ 인근</p> |
| 08:30-18:00 | <p>DMZ 기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행 : 김정수 동북아여성평화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가이드 : 최양현전 DMZ 전문해설가 |
| 18:00-20:00 | <p>환송파티 ○ 장소 : 여성미래센터 히스토리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조영숙 동북아여성평화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바. 2010 동북아 여성평화회의의 6차회담 참가국에 드리는 제안서 발표 (10/6) <별첨>

(6) 한국 정부의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이행'에 관련한 결의서를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여성가족부에 발송: (11/2) <별첨 >

(7)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미국 보고 모임

- 주제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의 힘을 결으며
-2010년 10월 서울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보고회
- 일시 : 2010년 12월 1일
- 시간 : 오전 10시- 오후 2시
- 장소 : Chung-Wen Shih Asian Studies Conference Room, Suite 503, 1957 E St, NW, Washington, DC 20052
- 주최 : PISA, Peaceboat 미국
- 참가 : 정경란 정책지원장

| | | |
|-------------|--------------------------------|--|
| 10:00 | 환영사 | Linda J. Yarr, PISA |
| 10:10-10:45 | 한반도 현황에 대한 시각 | 유정애 : 학제와 NGO전문가 정경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 10:45-11:00 | 3차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제안문 설명과 워킹그룹 나누기 | 이나래, 피스보트 미국, 국제코디네이터 |
| 11:00-12:00 | 워킹그룹 세션 | 인도주의 문제, 대화 체계, 평화를 향한 여성의 기여 |
| 12:00-12:45 | 워킹그룹 보고 및 행동 계획 세우기 | |
| 12:45-1:00 | 요약 | |
| 1:00- 2:00 | 점심과 발표 | Jolynn Shoemaker, 국제안보와 여성(WIIS),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

○ 주요 토론 내용

- 한반도 이슈-연평도문제와 북한에 인도적 지원 문제를 이해하는 체계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자료 수집 검토

- 향후 모임 지속하기로 결정
- 미국 추진위원회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음
- PISA 2011년 초에 공개 행사 추진 검토
- 2011년 7월경 피스보트를 타고 바다에서 동북아여성평화회의하자는 제안
- 피스보트 미국: UNSCR 1325관련 내년 3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참가하는 한국 여성의원과 미국 여성의원과 행사 조직, 또는 여성단체와 조직하는 것 제안
- 재미동포 캐나다, 미국 동포 등 10명 정도 동북아여성평화회의 북미지부 논의

(8) 사후 보고 및 평가워크숍

- 가. 일시 및 장소: 2010년 12월 15일 오후 4시 / 여성미래센터 소풍당
- 나. 주제: 2010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보고 및 평가
- 다. 사회: 김정수 국제연대위원장
- 라. 동영상 상영: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 김태준, 최안진경 제작
- 마. 발표: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 보고 및 방향 모색: 정경란 정책위원장
- 바. 토론: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조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사. 내용: 2010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보고 및 평가, 향후 과제 및 전망 모색

(9)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워크숍 관련 논의

- 가. 피스보트와 모임
 - 가) 일시 및 장소: 2010년 12월 16일 오후 5시 / 장소: 아리 사무실
 - 나) 주제: CSW 워크숍 논의
 - 다) 참석: 정경란 정책위원장, 이나래 피스보트 미국 국제코디네이터
- 나.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회의
 - 가) 일시 및 장소: 2010년 12월 21일 오후 2시 / 장소: 최영희 위원장실
 - 나) 주제: CSW 워크숍 논의
 - 다) 참석: 최영희 위원장, 정현백 추진위원장, 정경란 정책위원장, 이나래 피스보트 미국 국제코디네이터, 차인순 입법심의회관
- 다. PISA와 협의
 - 가) 일시 및 장소: 2010년 12월 27일 밤 12시 Skype 통화
 - 나) 주제: CSW 워크숍 공동주최 및 워크숍 내용 논의

(10) 홍보 및 언론 보도

- 동북아여성평화회의 및 주관단체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어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홍보 효과
- 시민사회에서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관심 확대
 - :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여성신문, 통일뉴스는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한국판공공사 홈페이지, 중앙일보 joins, 이타임즈, 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 등에 연합뉴스의 DMZ활동 기사가 인용 게재됨
 - : 참여연대 국제회의, 인허대 국제회의, 잡지<민족과 화해> <여성과 평화>, GPPAC 홈페이지에 소개

2. 평가

- 1) 북핵문제의 포괄적 접근과 이행을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의제와 과제발굴을 통해 동북아평화를 위한 여성평화주의의 관점을 국제협상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계기를 마련함
- 2) 6자회담 공식회담과 병행하는 여성들의 트랙 II 활동을 위한 의제 개발과 이를 각국 정부에 홍보
 -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여성 제안서 전달하고 미국정부의 협조 요청
 -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에서 합의한 '6자회담 당사국에 드리는 제안서'를 5개국에 발송
-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를 구체적으로 이행과정에서 여성의 경험과 참여가 보다 구체화될 계기를 마련함
 - 한국정부의 1325호 이행에 대한 질의 발송과 외교통상부 답변
 - 여성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1325호에 대한 대정부 질의 고려하기로 함
 - 2011년 2월 개최예정인 제55차 유엔 여성지리위원회에서 1325호 이행에 대한 국제 워크숍을 3국(한·미·인)이 공동으로, 국회의원-NGO 대학이 공동모의하기로 함
- 4)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연속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여성평화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평화글로벌리더십의 발굴 및 축적
- 5)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6개국 여성의 연대 확대
- 6)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미국 보고 모임 개최를 통해 미국 추진위원회의 가능성을 확인
- 7)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언론 보도와 발표를 통해 코디네이터 단체인 평화를만

드너여성회 홍보 확대

9) 한계: Infra 취약-재정, 실무, 재정 문제

- 국내운동의 강화 속에서 국제운동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국제회의가 국내 활동 질점
- 조직문제-동북아추진위원회와 본회의와의 관계불투명

VII (회원확대)특별위원회

- 구성 : 2009년도 사업의 연속사업이어 별도 구성 않고 진행

1. 사업내용

1) 재정사업

- 일정 : 2009년 12월 23일 - 2010년 2월 10일
- 품목 : 굿감 (함양 청정굿감, 생산자 : 장윤석)
- 진행 : 윤수경 공동대표, 최은영 활동가, 이남희(임시직 담당자)

2. 평가

- 생산자와 저저래로 진행한 재정사업이며, 본회 재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2년 연속 진행하여 본회의 이미지로 어느 정도 자리 잡아 가고 있었음
- 진행 실무를 임시활동가를 채용하여 운영하면서 역으로 사무국에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어 2010년 명절에는 진행하지 못하게 됨
- 다른 한편, 사무실을 여성미래센터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회원, 지인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게 되어 2010년도에는 후원행사도 진행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2011년도에는 상반기에 후원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VIII 연대사업

8-1 국내상설연대

8-1-1 한국여성단체연합

○ 파견

1. 총회 : 대의원 3인(조영희 상임대표, 윤수경 공동대표, 최은영 총무)
2. 이사회 : 대표자 1인(조영희 상임대표)
3. 통일평화위원회 : 위원장(조영희 상임대표)
4. 실무임원회의 : 위원(통일평화위원장, 조영희 상임대표)
5. 정책기획위원회 : 위원(통일평화위원장, 조영희 상임대표)
6.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 : 위원(최은영 총무 : 1월~7월, 김선량 총무 : 7월~)
7. 3·8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기획실행팀원, 준비위원(최은영 총무)
8. 여성미래센터 1) 운영위원회 : 위원(조영희 상임대표)
2) 일주단체공동체 회의 : 위원(최은영: 1월~7월, 김선량: 7월~)

1. 총회 :

- 일시 및 장소 : 1/7(목)~1/8(금), 여성플라자
- 참석 : 본회 파견 대의원 포함 전국의 여성연합 회원단체 파견 대의원 및 참관인 등 100여명
- 내용 : 첫째날(7일) : 정책토의 1부 / '2010년 여성운동의 방향과 새로운 도전', 2부 / '2010년 여성운동의 새로운 과제' : '여성 안전권과 인권' 및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기 캠페인'
- 둘째날(8일) 2009년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정관개정, 신규임원선출,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의결 등

2. 이사회(대표자회의)

- 일시 및 장소 : 2/17(수), 5/7(금), 8/27(금), 11/5(금) 여성연합 교육장, 전주 한옥생활체험관, 여성미래센터 소풍방 등
- 내용 :
1차 : 제24차 정기총회평가, 사업계획 심의, 3·8여성대회 관련 등
2차 : 2010 지방선거 현황 및 대응계획, 지부 공동대표(회장단)의 정치참여 방침, 여성미래센터 운영규정 등

3차 : 정책기획위원회 활동재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및 성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낙태관련 여성연합 입장타면 등

4차 : 총준위 구성 등 제25차 총회(※)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지역여성운동센터 독립, 여성연합 대표의 정당활동 방침 등 내규 점검, 2011년 3·8여성대회 방향 설정 등

3. 2011년 총회준비위원회

- 구성 : 여성연합 대표, 각 위원장, 센터장, 지역 및 부문별 대표 등 19명
- 일시 및 장소 : 11/23(화), 12/10(금), 12/23(목), 2011/1/11(화),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등

○ 내용 :

- 2010 사업기조 평가, 2011 사업기조 설정 위한 정세·아젠다 검토, 공원위원회 구성 등
- 2010 사업평가(안)검토, 2011년 사업계획(안) 검토, 정관·내규·회계규정 검토 등
- 신규회원 및 회원단체 정비, 공동대표 및 임원선출안 타면, 예·결산 심의 등
- 통일평화위원회 운영방안, 위원장 선출 관련 등

4. 실무임원회의

- 일시 및 장소 : 3/19(금), 6/29(화), 여성연합 교육장, 여성미래센터 나눔방 등
- 내용 : 낙태관련 논쟁 정책도의, 2010 지방선거 평가 및 향후 방향 논의,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논의 등

5. 정책기획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10/13(수), 11/12(금), 민주노동 회의실, 여성미래센터 나눔방 등
- 내용 :

- 성차별금지법 제정 및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지방정치 중장기 로드맵, 낙태·재생산권 논의구조 등
- 정치인 성희롱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법 및 관련법 개정안, 2011년 여성연합 사업방향 및 조직방향, 2011년 성인지역산서 대응 등

6. 통일평화위원회 : 휴지

7.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

- 일시 및 장소 : 3/24(수), 9/15(수), 11/30(화), 여성평화회의실 교육장, 여성미래센터 소풍방 등

○ 내용 :

- 2010 지방선거 정책도의, 회원단체 활동공유 및 논의, 사무국장연석회의의 운영

방안 등

- 낙태,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안 및 성차별금지법 제정여부 등
- 2011년 사업방향, 성차별금지법(안) 쟁점 토론 등

8.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1)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1) 기획실행방

- 일시 및 장소 : 1/29(금), 2/10(수), 2/18(목), 여성연합 회의실
- 내용 : 순교건, 강연콘서트·공연 계획, 세계여성행진계획, 여성운동 플리아엣, 웹 홍보전략 등 진행계획
- 참석 : 최은영 총무

2)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 일시 및 장소 : 3/6(토), 이화여대 강당, 창간어린이공인
- 내용 : 시민난장 릴리콜 플리아엣, 기념식, 세계여성행진 ‘빈곤과 죽어있는 세계를 향해 걸어라’
- 참석 : 윤수경 대표 등 다수

9. 여성미래센터

1) 운영위원회

- (1) 일시 : 5/6, 7/23, 11/26
- (2) 내용 : 운영규정(안)논의, 2010년 사업과 예산(안) 심의, 재원식, 추가모금 논의, 도움방임주단체 심의, 카레운영, 대출금과 차입금 상환논의, 2011년 사업계획(안) 심의, 2011년 예산(안) 심의 등

2) 임주단체 공동체회의

- (1) 일시 : 2/2, 5/19, 6/16, 6/23, 6/18, 7/5, 7/19, 8/9, 8/23, 9/13, 9/27, 10/25, 11/22
- (2) 내용 : 임주단체공동체회의 구성과 역할논의, 임주일정공유, 개관식논의, 여성미래센터사업공유와 공동체운영체제마련, 도움방 임주단체 심의, 계단 엘리베이터설치등 센터 보안(세움)관련 논의, 공과금 단체별 분담방안 논의, 허스토리콜 기획전시 공유, 여성미래센터 단합모임 논의 등

3) 임주단체 활동가 단합모임 ‘마음 나누고, 정 나누고’

- (1) 일시 : 7/13, 9/13, 11/22
- (2) 내용 : 공동저녁식사와 소통의 시간

4) (주)여성평화의집 임주단체회의 & 여성미래센터 임주단체회의

- (1) 일시 : 2/2(화), A11, 여성연합 회의실

- (2) 내용 : (구)여성평화의집 자산은 여성운동의 공동체 자산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각 단체별 사용평수와 관리비(안), 임대계약 건, 사무실과 회의실 배치공유, 냉난방 및 내부공사 관련 의견수렴, 임대 공간 축소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대책논의 등을 진행함

㉞ 여성미래센터 운영원칙

1.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와 사무국,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2. 여성연합과의 관계(여성연합과 각각의 입주단체는 임대와 형식의 관계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여성미래센터는 여성연합의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기로 함)
3. 구성
 - 1) 센터장 : 여성연합 상임대표(현 남윤인순 상임대표)
 - 2) 자문위원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각 1인 총 3인
 - 3) 운영위원 : 여성미래센터전립 추진위원장, 입주단체 등에서 배분하여 구성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비밀감), 조영희(평화여성회 대표, 4층), 안상남(한림문화회 대표, 3층), 박성자(여성협 대표, 2층), 이미경 국회의원, 이은옥 유한김발리 부사장, 정현택 성균관대 교수,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 4) 사무국 : 김정희 사무국장
 - 5) 입주단체 : 군인연센터, 기독교민회, 기독교성삼림문화원, 여성교회, 여신학자협의회, 평화여성회, 여성연합, 여성연구소, 여성사회교육원, 학교급식비트위크, 여세인, 여성환경연대 등 12개 단체
 - 6) 회의구조 : 사무국 회의(주 1회), 운영위원회 회의, 입주단체 공동체회의 등

5) 여성미래센터 개관식

- 일시 : 6/17(목), 정오
- 참석 : 조영희 상임대표, 윤수경 공동대표, 최은영 총무 등

6) 여성미래센터 기금 마련을 위한 재정행사

- (1) 제목 : 연극, [러브레터]
- (2) 일시 : 7/9(금) ~ 7/11(일), 조계중 불교역사문화기념관
- (3) 참석 : 조영희 등 본회 회원 17명 참가, 티켓 분담 20장 (100만원)

8-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 총회 (대표자회의)

- 일시 및 장소 : 2/19(금), P4, 정대협 교육관
- 내용 : 2009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정관개정, 임원인준,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
- 참석 : 대표 포함 대의원 2인(윤수경 공동대표, 이권명희 전일상명화센터 소장) 과건

2. 수요시위

1) 제923차 수요시위 주관

- 일시 및 장소 : 6/23(수), 일본대사관 앞

3. 정대협 20주년 기념 수요시위

- 일시 및 장소 : 11/17(수) 정오, 수요시위, 일본대사관앞
- 참석 : 조영희 상임대표, 김선량 총무, 오영주 정보담당활동가, 최안진경 운영위원 등

8-1-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8-1-3-1 남측위원회

○ 과건

1. 총회 : 대표자 1인(조영희 상임대표)

2. 여성본부

상임대표 : 대표자 1인(조영희 상임대표)

공동집행위원장 : 집행책임자 1인(정경란 정책위원장)

공동집행위원 1인 : 실무담당자 1인(김현희 정책위원)

3. 상임운영위원회

부문본부 공동대표 : 여성본부 상임대표(조영희 상임대표)

4. 운영위원회

부문별 본부 공동대표 : 여성본부 상임대표(조영희 상임대표)

1. 회의

1) 정기 공동대표 회의(총회)

- 일시 및 장소 : 2/4(목) 오후 2시~4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참석 : 본회 조영희 대표 외 126개 가입단체 대표 중 100 여명
- 내용 : 6·15실천사업비 참여운동, 2009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10년 사업 및 예산계획 심의, 특별결의문 채택 등

2) 상임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4/13(화), 5/19(수), 8/17(화), 10/19(화), 11/26(금), 12/21(화), 민화협 회의실, 6·15남측위 사무실, 한국노총 회의실 등지
- 내용 : 6·15민족공동회의의 사업 관련,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 사업, 10·4 공동선언 3주년 기념 사업, 8·15 공동호소문 발표, 통일할 보내기 운동 관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용례갈기 행사계획 논의 등
- 참석 : 조영희 상임대표(6·15남측위 여성본부 상임대표)

3)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3/30(화), 5/7(금), 7/7(수), 9/7(화), 11/16(금), 한국노총 회의실 등지
- 내용 : 6·15민족공동위원회 관련 사업 논의, 관련 행사, 조직운영 방침, 사범 사건 행안대응, 통일할 지원사업계획 등 논의

2. 기념사업 및 행사

1) 비상시국회의

- 일시 : 5/25(화), A9,
 - 일시 : 11/22(월), A11, 국회 귀빈식당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내용 :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비상시국회의의 시국선언문 발표

2)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

- (1) 준비위원회 발족식 : 3/4(목) A11
- (2) 민족통일대회 : 6/13(일), 시청광장,
 - 내용 : 민족통일박람회 행사(개별단체 부스 운영 등 포함) 부문별 '정치방언'(노동본부-전농, 여성본부-평화여성회), 평화여성회 부스 [여성, 평화의 배피우기] 진행
- (3) 평화통일민족대회 : 6/15(화), A10,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내용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공동성명 - 6·15 공동선언 발표 10주년에 즈음하여] 발표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공동) 등

(4) 학술회의 : 6/15(화), P3:30~8:00, 그랜드 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

- 내용 : 특별강연 "6·15 1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한반도 미래"(발표 :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5) 10·4남북정상선언 3주년 기념행사 : 기념식

- 일시 및 장소 : 10/4(월), A11, 프레스센터 19층
- 내용 : 기념식, 남북해외공동결의문 발표

3. 6·15 남북위원회 시범사건대책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8/12(목), P7:00~, 기독교회관 2층
- 주관 : 6·15남북위원회 시범사건대책위원회
(대표 : 이석태, 본회 조영희 상임대표도 6·15남북위 여성본부 상임대표의 자격으로 대책위원회 위원 1인이 됨)
- 내용 : 한중목 조직위원장 석방을 위한 후원회
- 참석 : 조영희, 김영리, 김원희, 이낙호 등 회원 다수

4. 긴급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9/1(수), A10~P1,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제 : 8·15담화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참석 : 조영희 상임대표(6·15여성본부 상임대표)
- 내용 :
 - 사회 / 백학순 민화합 정책위원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발표 1 8·15 정국사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 2 한반도 위기관리와 시민사회의 역할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총장,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장황준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5. 금강산관광 12주년 기념 [금강산 관광 재개 기원 올레걷기]

- 일시 및 장소 : 11/20(토), 고성군청,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 - 고성 통일전망대
- 주최 : 강원도,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Daum카페 '다시가자 금강산' 등

- 참가인원 : 조영희 상임대표 등 280 여명
- 내용 : 1) 금강산 관광 재개촉구 대국민 메시지 발표, 2) 올려걸기

8-1-3-2 여성본부

1. 회의

1) 공동대표자 및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1) 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4(목), P4-530,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
- 참석 : 남윤인순(상임대표), 유정숙, 이강실, 조순태, 조영희(이상 공동대표), 손미희(이상 공동집행위원장)
- 내용 : 2009년 사업보고(안), 2010년 총회 관련, 6·15실천사업비 납부방식 등 논의

(2) 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3/3(수) 오후 12:30, 프레스센터 19층
- 내용 : 총회준비
- 과제 : 공동집행위원장 등 실무자 총원계획 확정 및 통보

(3) 3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9/9(목), A11,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 내용 : 대북수해 긴급 쌀지원 관련 논의
- 결과 : 6·15여성본부가 100만원을 모금하여 지원하기로 함

3) 총회

- 일시 및 장소 : 3/11(목) 오후 3~6, 여성플라자 아트갤러리 2
- 내용 : 경제강의, 2009 사업 및 결산보고, 2010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신임 상임의장(조영희 상임대표) 인준 등

2. 대북 긴급식량 지원 및 수해지원

- 내용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본부로 통합하여 진행, 여성본부가 100만원 지원하고 회원단체장이 분담하여 모금하기로 함

8-1-4 단축화해범국민협의회

1. 제12차 정기 대의원대회(정기총회)

- 일시 및 장소 : 3/3(수), P2,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 주요내용 : 2009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정관

개정 등

2. 집행위원회

- 일정 : 7/21(수), 8/12(목), 10/26(화), 민화협 회의실
- 참석 : 조영희 상임대표(민화협 여성위원장)
- 내용 : 2010 민화협 사업의 집행계획 논의 등

3. 여성위원회

(1) 회의

- 일시 및 장소 : 8/31(화), A10.30, 민화협 회의실
- 참석 : 조영희 상임대표(여성연합 통일평화위원장)
- 내용 : 북한주민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 참여방안, 2010 하반기 사업계획, 토론회논의 등

(2)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10/27(수), P3.30, 세종호텔 해금강홀
- 주제 : 북한여성의 일상으로 본 북한의 변화
- 내용 (사회 : 조영희 상임대표, 여성연합 통일평화위원장)
 발제 / 북한여성의 일상으로 본 북한의 변화 -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 조영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4. 창립기념 후원행사

- 일시 및 장소 : 9/1(수), P6.3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참석 : 조영희 상임대표 등

8-1-5 시민단체연대회의

1. 신년하례회

- 일시 및 장소 : 1/5(화)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참석 : 본회 윤수경, 조영희 등 시민단체연대회의 참가단체 대표 등 150여명
- 내용 : 신년인사, 신년사 발표 등

2. 제10차 총회

- 일시 및 장소 : 2/26(금) 오후 4시, 홍사단 3층 강당
- 내용 : 사업보고, 사업계획 등
- 과제 : 대표자 참석

3. 시민평화포럼

1) 포럼

- 일정 : 2/11, 3/24, 4/22, 6/24, 8/31, 9/11, 10/11, 11/18, 12/8
- 참석 : 김열리, 윤수경, 조영희, 최안진경, 홍승희 회원
- 주제 : 2010년 한반도 정세전망과 시민사회의 과제, 남북정상회담,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2010년 NPT 회의와 한반도 - 동북아 - 세계 비핵화, 한반도 평화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민간교류협력사업의 현주소와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 유연사와 한반도 평화질질,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국제회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여성의 역할 등

2) 2차 총회

- 일시 : 12/8(수), 16
- 내용 : 2009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10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정관계정 등

8-2 국내사안별면대

8-2-1 더불어행복한여성을위한여성모임

1. 창립총회

- 일시 및 장소 : 2/22(월) 오후 1:20,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내용 : 사업계획 논의(집담회 등)

2. 집담회

- 일시 및 장소 : 1/20(수), 2/22(월), 5/25(화)
- 2) 3차 집담회 (주제: 이명박 정부 2년 돌아보기 「저출산과 일자리」)

3. 송년회 12/2(목), 여성비레센터 허스토리홀

8-2-2 한반도평화포럼

1. 릴레도론회

- 일정 : 1/12, 2/9, 3/9, 5/11, 7/13, 9/11, 12/14
- 장소 : 하이원 빌리지 다목적 홀
- 참가회원 : 윤수경 공동대표(이사), 정경란 정책위원장, 정현택 이사장(이사), 조영희 상임대표(감사)
- 내용 : 2010년 한반도 정세전망과 시민사회의 역할, 6자회담 재개,생명과 해결 전망, 위기의 북한경제,어디로 가나,화해개혁 이후, 위기의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민간

교류 협력과 남북관계 출로, 북핵,미국과 북한의 속내? 등

2.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 학술회의

- 주제 : 6·15남북공동선언 10년, 성과와 과제
- 일시 및 장소 : 6/15(화), 그랜드 힐튼호텔
- 참석 : 윤수경 공동대표, 조영희 상임대표

3. 창립기념 후원행사

- 일시 및 장소 : 10/22(금), P5-7, 연세동문회관
- 참석 : 윤수경 공동대표, 정경란 정책위원장, 조영희 상임대표

8-2-3 2010 UN 세계평화의날한국조직위원회

1. 조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7/22(목), 원봉교 서울회관 4층 회의실
- 참석 : 조영희 상임대표(공동대표)
- 내용 : 사업보고, 조직위원회 추가 구성, 사업진행경과 점검 (사업계획은 아 래표 참조)

2. 2010 세계평화의날 기념행사

- 1) 일시 및 장소 : 9/12(일), 마로니에 공원
- 2) 주최 : 한국조직위원회
- 3) 참여 : 평화여성회(협력단체 중), 조영희 상임대표(공동대표), 이현숙 전 이사장(고문)
- 4) 기념행사
 - (1) 기념식
 - (2) 평화박람회
- 5) 내용
 - (1) 평화여성회 부스설치 및 운영 : [나의 갈등해결 지수는?, [내가 생각하는 평화는?] 코너
 - (2) 참석 : 김선말, 김영진, 여희숙, 이덕경, 박수신, 박인혜 회원 등 다수

8-2-4 탈북여성 정착지원 구축 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

1. 전문가 토론회

- 일정 : 3/13(토), 4/15(목), 5/26(수), 7/7(수), 8/18(수), 국가인권위원회 제5차
- 참석 : 이화권 연구원 연구위원, 정현백 이사장, 조영주 운영위원, 조영희 상

임대표 등

- 내용 : 여성의 관점에서 본 탈북여성의 현황, 북한이탈여성의 사회적응 실태, 우리 사회에서 탈북여성으로서 홀로서기가 갖는 의미와 한계, 탈북여성 정착지원 평가 및 대안모색, 탈북여성 정착지원 활동으로 본 탈북여성 등을 주제로 토론하고 정착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2.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창립 기념 심포지움

- 일시 : 9/29(수), 12-5:3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참석 : 정현백 이사장, 조영희 상임대표 등
- 내용 : 탈북여성 정착지원 구축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탈북여성 인권 문제를 핵심 수행과제로 하는 법인으로 재창립하게 됨. 본회는 이슈에 대한 연계성만 가지고 일반 회원으로만 참여하고, 조직적 참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함

8-2-5 4대강 사업저지 및 생명의 강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1. 1인 시위

- 일정 : 4/15(목), 정오~PM, 서대문역 사거리, 용대주변
- 참석 : 최은영 총무

2. 콘서트 [강의 노래를 들어라]

- 일시 및 장소 : 5/30(토), 17-10, 서울 봉은사
- 참석 : 조영희 상임대표 등 회원 4인

3. 4대강 공사 중단 촉구 천막농성

- 일시 및 장소 : 9/6(월) - 10(금), 광화문 원표공원
- 참석 : 조영희 상임대표, 김선량 총무, 박수선 소장, 여혜숙 운영위원 등 다수

8-2-6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종교·시민사회 원로 및 지도자모임'

1. 회의

- 일시 및 장소 : 12/20(월) - 27(월), 시민평화포럼 대표 사무실 등
- 참석 : 정경란 정책위원장
- 내용 :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 정착을 위한 종교·시민사회 원로 및 지도자 모임' 준비과정에서 기자회견 준비와 여성계 참여 논의

2.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29일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 참석 : 조영희 상임대표, 정경란 정책위원장 등

8-2-7 기타

- 1/9(토), A9~P7, 서울역 ~ 용산역

- 용산참사 희생자 장례식 및 추모행사 참여
- 참석 : 김선혜, 이낙호, 조영희 등
- 장례위원 : 강순원, 김선혜, 김숙임, 김엘리, 김정수, 김현희, 박수선, 여해숙, 윤수경, 오영주, 이권명희, 전은주, 조영주, 조영희, 최안진경, 최은영, 한정숙, 홍승희 등

- 1/1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여성부 주최 여성단체장 신년하례회
- 참석 : 조영희 상임대표

- 3/30(화), P5

- 더불어행복한여성모임 주최 미대사 토론회 참석, 정경란 정책위원장

- 5/24(일), 논평 발표

- 이명박 대통령 '3·26 천안함 사태' 담화문에 대한 논평, '군사력 강화와 제재로는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없다' 발표

- 5/25(화), A11, 서울시청 분수대앞

- '여성들은 전쟁을 반대한다' 긴급기자회견
- 참석 : 조영희 상임대표, 정경란 정책위원장 등

- 5/26(수), A11, 덕범김구기념관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종교단체·정당 비상사국회의
- 참석 : 조영희 상임대표, 정경란 정책위원장 등
- 내용 : 평화여성회 등 88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의 연명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 선언문 발표

- 6/16(수), P2,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 및 국회 국정조사 요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참석 : 조영희 상임대표
- 내용 : 평화여성회 등 202개 단체들의 연명으로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발송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마녀사냥식 탄압 중단을 촉구

- 8/18(수), P3

- 대만교수 본회 방문 면담

- 8/20(금), P6:30
 - 에버트재단 소장 이임식 참석, 정경관 정책위원장
- 8/26(목), P4, 기독교회관
 - 한일평화NGOs 간담회 패널 참가 : 정경관 정책위원장
- 8/26(목), P5, 기독교회관
 - 한일NGO간담회 참석, 정경관 정책위원장
- 9/7(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참여연대 창립 16주년 기념행사
 - 참석 : 조영희 상임대표, 정경관 정책위원장, 윤수경 공동대표
- 10/14(목)
 - 여성평화단체 공동 명의, PSI 군사훈련 반대성명 발표
- 11/1(월), P3, 선남극 의원실
 - 선남극의원 면담하여, 1325호 대정부질의 관련 회의
 - 참석 : 정현택 이사장, 조영희 상임대표, 정경관 정책위원장
- 11/9(화), DMZ 인근
 - 통일부 활동가 워크숍 참석 : 김선광 총무
- 11/10(수), 국가인권위원회 앞
 -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사죄를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 조영희 상임대표 참석, 평화여성화동 여성단체 공동명의
- 11/15(월),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조정위원 등 소관위원회 공동명의 사죄서 제출
- 12/8(수)
 - 고 리영희 선생 민주사회장 장례위원장제 참가
- 12/9(목)
 - 한반도 평화회복을 위한 남북 당국 대화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

8-3 국제연대 (※ 국제협력위원회 사업보고 참조)

8-3-1 World March of Women(빈곤과 폭력없는 세상을 향한 세계여성행진)공동

- 일정 : 3·8세계여성외난 기념 한국여성대회에서 진행

8-4 평가

- 1) 반민주적·반민생적·반평화적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역행하는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과반으로 내달리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개별단체로 이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평화여성회는 여성단체, 시민단체, 평화-통일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제를 수행한 것은 달리 선택의 여지도 없었지만, 적절한 배치였다.
- 2) 또한 한반도의 평화가 근본적인 위협을 당하면서 평화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평화여성회의 연대운동과의 결합은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여성평화운동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한걸음 나아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3) 그러나 연대활동이 한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개인에게는 지나친 하중으로 작용하였고, 조직내적으로는 소통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며, 연대활동 공간에서는 역으로 평화여성회의 존재감 없음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 4) 향후는 현실역량에 초중하는 목표설정과 함께 조직 내에서의 체계적인 역할분담과 소통방안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9 협력사업

9-1 여성재단

9-1-1 차세대 여성리더 글로벌역량강화 지원사업 - 활동가연수

1. 실행계획 및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 1/13(수)
2. 실무자 워크숍 : 1/26(화), 오후 1-6, 김진혜 참석
3. 내용

9-1-2 차세대 여성리더 글로벌역량강화 지원사업 (※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참조)

9-2 아름다운재단

9-2-1 변화의 시나리오 -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평화커뮤니티 만들기'

프로젝트 - '미래조정관' 운영과 '피해자가여가대화모임' 진행

- 내용 : 김동해결센터 참조

9-3 우수평영화장학위원회

9-3-1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5/14(금)

○ 참석 : 윤수경 대표

9-3-2 수여식

○ 일시 및 장소 : 5/28(금), 한국기독교교회관 대강당

○ 내용 : 수상자 - 본회 정경란 정책위원장 / 장학금 - 300만원

10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구성

* 명예이사장 : 김윤옥

(1) 원장 : 김열리

(2) 이사회 : 심영희(이사장), 권인숙, 김현미, 박현선, 안정애, 양현아, 이나영, 황영주

(3) 연구위원 : 장인화, 윤덕희, 오미영, 이선미, 이화진, 조영주, 최윤정, 한정숙, 허성우

(4) 운영위원회 : 장인화, 오미영, 조영주, 최윤정, 이나

1. 사업방향

- 여성들의 평화운동의 경험을 이론화하고, 평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식생산을 한다.
- 여성주의 평화이론을 생산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2. 사업목표

- 지식생산을 위한 연구 활동
-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아젠다 개발
- 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3. 사업내용

3-1 회의

3-1-1 이사회

1) 1차

- 일시 : 1/14, P6-9:30
- 참석 : 심영희(이사장), 김엘리, 권인숙, 김현미, 박현선, 이나영 (조영주)
- 내용 :

2) 2차 (온라인 이사회)

- 일시 : 12/20~29
- 참여 : 심영희(이사장), 김엘리, 권인숙, 김현미, 박현선, 안정애, 양원아, 이나영, 황영주
- 내용 :

3-1-2 운영위원회

1) 1차 : 1/28, P1:30-4:30

2) 2차 : 12/10, P3-5

3) 그 외 필요시마다 수시 : 이메일, 카페 통한 논의

3-3 사업팀 회의

1) 출판 편집팀 회의 3회

2) 토론회 기획팀 회의 3회

3-2 출판사업

- 1) 배경 : 2007년 활력재단 세미나 발제문을 기초로 8편을 선정하여 책을 내기로 하다. 2009년 출판 사업을 이어 원고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무크지 『여성과 평화』 5호 출판사업을 진행하다.

2) 편집회의

- 일시 및 장소 : 2/18, 3/23, 10/8, 이화여대 ECC
- 구성 : 권인숙, 김현미, 김엘리, 장유인화, 조영주, 김미선(실무 진행)

3) 내용

- (1) 책 제목 : 『여성과 평화』 5호
- (2) 독자
책머리에 | 김엘리
평화논단 폭력의 시대, 불존의 윤리 | 임옥희

특집 | 군대와 젠더

정병제의 여성참여: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권인숙
군대/군가산결계, 무엇으로 소통할 것인가 | 오미영
병역, 기파-비라-거부의 정치학 | 장유인화

연구논단

글로벌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이동하는 여성들 | 김현미

이성과 평화의 불안정한 조우와 그 성격 | 김영리

기지촌 형성 과정과 여성들의 저항 | 이나영

평화교육·평화운동

여성주의 안보연구 시론 | 박강성주

왜 여성들만의 조직이 매력적인가? 조국가족 여성만전 평화운동 | 신시아 코번

시선집중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 동북아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단담 | 정경란

(3) 출판일 : 12/15

(4) 발행부수 : 200부

3-3 토론회

1) 제목 : 북한 개발협력과 여성주의

2) 목적 : 그동안 진행된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 및 협력 관련한 이슈들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과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 및 협력과 관련하여 여성평화운동의 구체적인 운동 내용을 발굴한다.

3) 기획팀 회의

○ 일시 및 장소 : 2/8(월), 3/15(월), 4/5(월), 이대 앞 테리, 인사동 사과나무 등

○ 구성 : 조영주(실무 담당), 김나연, 타리, 이승기

4) 내용 : 토론회 개최 예정 시기의 불안함 관련 정세문제, 재정문제 등으로 개최하지 못할

3-4 연대회의 : 탈북여성 정착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토론회 기획회의

● 국내 사안별 연대 참조

3-5 조직 운영 활동

1) 사업논의와 진행은 주로 이메일과 카톡을 통하여 이루어지다. 회의 내용들은

카페 자코실에서 볼 수 있다.

- 2) 출판사업팀과 토론회팀 운영: 출판사업과 토론회의 원활한 기획과 진행,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사업별 팀을 구성하고 실무담당 활동가를 두었다. (출판사업: 김미선, 토론회팀: 조영주)

- 3) 연구원 카페 운영: <http://cafe.daum.net/peacewomen>

(1) 회원수: 83명

(2) 주요내용: 연구원 소개, 연구위원 칼럼, 알림과 자료, 회의자료, 운영위, 여평다시물다 세미나방, 근거산점제(게시관지가: 강인희), 평화와 젠더-남성성 (게시관지가: 조종현)

4. 사업평가

- 1) 2009년에 이어 진행된 단행본 『여성, 평화를 다시 본다』 출판 사업은 출판사 섭외의 문제와 기획의도를 수정하여 『여성과 평화』 5호로 출판하기로 하였다. 무크지 발간을 통해 활력태담의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잠시 중지되었던 『여성과 평화』 재발간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았다.

2) 토론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개발 지원과 관련한 논의를 여성주의적, 평화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여성평화운동의 의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만한 사건으로 주제의 시의성과 적절성 면에서 토론회 개최를 늦추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개최하려 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개최하지 못하였다. 북한 개발지원과 관련한 여성주의적, 평화주의적 접근과 논의, 사업 개발은 이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연구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사업논의는 1월의 한차례 이사회의 운영위원 회의를 개최한 후, 주로 전자우편과 카페를 통하여 사업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구원의 운영위원이 본회 운영위원회에 참가하면서 본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시도하였다.



2011년 사업계획안

- I. 2011년 사업방향안
- II. 2010년 사업계획안
- III. 월별사업계획안

1. 2011년 사업방향(안)

여성평화운동의 활성화에 주력하자.

1. 사업기조

- 1) 정부의 국방·통일·외교 정책에 대한 여성평화주의의 대안적 정책에 대한 논의 및 실천
- 2) 분통의 시대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소통과 상생적 갈등해결을 모색
- 3) 회원의 참여와 소통의 활성화를 통해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여성평화운동 지향
- 4) 조직체제를 현실 역량에 맞게 재편하여 운영

2. 사업방향

- 1) 남북 여성이 함께 살기 위하여 남북여성협력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한다.
- 2) 통합적 갈등해결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평화적 갈등해결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 3) 2012년, 본회 창립 15주년 기념하여 국내 여성평화운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대안적 여성평화주의의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II. 2011년 사업계획(안)

1. 조직사업

1) 회의

(1) 총회

- 역할 :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구성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내용 : 2011년 사업계획 수립, 공동대표 및 임원 선출 등

(2) 이사회

- 역할 :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재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구성 : 공동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

- 역할 :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 구성 : 공동대표, 각 센터 및 위원회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부설기구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4) 사무국회의

- 역할 :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 구성 :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1) 정책위원회

○ 사업목표

- 여성·평화주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 논의
- 평화·통일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 방안 모색
- UN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
-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개최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한 동북아 여성 연대 강화

○ 구성

가. 위원장 : 정경란

나. 위원 : 김헌희, 박현선 등 추후 보강

○ 사업계획

본회가 추진하려는 평화통일사업 수행

(2) 국제협력위원회 : 2011년에는 구성하지 않음

3) 갈등해결센터

(1) 사업방향

- 가. 통합적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평화적 갈등해결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 나. 그간의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평화적 갈등해결 전문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확대, 강화한다.
- 다. 지역과 협력해서 평화문화 형성과 인력 양성에 힘쓴다.

(2) 사업목표

- 가. 갈등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 나.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평화커뮤니티 만들기에 힘쓴다.
- 다. 평화적 갈등해결 전문 조직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 라. 회원들의 유대 강화에 힘쓴다.
- 마. 사회갈등 예방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 기반을 넓힌다.
- 바. 평화적 갈등해결 영역에서 일하는 평화활동가들과의 연대형성에 노력한다.

(3) 구성

가. 소장 : 박수선

나. 운영위원회 : 김선애, 김선훈, 김영진, 김희경, 박상희, 박수선, 박인혜, 안향숙, 여혜숙, 이경순, 이덕경, 이현숙, 조영희

다. 청소년교육팀 : 김영진(팀장), 이현숙(서기), 김지현, 남미영, 남수정, 문경아, 박정옥, 박무열, 박재신, 박창우, 안향숙, 이덕경

라. 사회갈등분석팀 : 김선혜(팀장), 이현주(서기), 김미경, 맹세진, 박수선, 박재근, 이경순, 이항진, 정진화

마. 회복적사범 조정팀 : 김희경(팀장), 안향숙(서기), 김선훈, 김영진, 문경아, 박무열, 박상희, 박인혜, 박재신, 박홍나미, 박희진, 서정기, 이덕경, 이재영, 이항진, 여혜숙, 정태효

바. 도래조정팀 : 이덕경(팀장), 박상희(서기), 박정옥, 박인혜, 김영진, 안향숙, 이현숙

사. 연구원 : 김학욱, 이재영, 서정기, 박재근

(4) 회의

가. 운영위원회 : 월 1회

나. 청소년교육팀 회의 : 매월 1회

다. 사회갈등분석팀 회의 : 격월 1회

라. 회복적 사범 조정팀 : 월 1회

마. 도래조정팀 회의 : 월 1회

바. 연구원 : 수시

(5) 조직운영의 기본 방향

- 갈등해결센터의 회원은 평화적 갈등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평화여성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갈등해결센터의 회원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팀을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다.
- 갈등해결센터는 관심영역에 따라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제기되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과제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갈등해결센터의 각 팀장은 팀의 성원을 관리하고 운영과 사업을 총괄한다.
- 갈등해결센터는 정기적인(격월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갈등해결센터의 사업전반을 논의, 결정한다.
-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는 소장 및 각 팀장, 본부 사무책임자를 당연직 운영

위원으로 하고 각 팀별 1인을 포함하는 일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 갈등해결센터는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모임을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 공유 및 제교육 등을 수행한다.
-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1년 3회 이상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원장 선출 시 재개함

2. 평화·통일사업

- 1) 남북여성협력사업 (북한여성지원 사업) : 남북여성이 함께 살기 위하여 남북여성연대 차원에서 북한여성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 남북여성 개발 협력 담론 및 방법 구상,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작업, 정책개발 워크숍 등 향후 사업을 위한 기반 쌓기
- 2) 정책제시 활동 :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북아의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평화과 관점의 통일, 외교, 안보분야 정책제시
- 3) 한·미, 한·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 4) 근간산점 부활에 대한 대응활동 : 워크숍
- 5) 2011 동북아여성평화회의 (7월경)
 - 협력 : 피스보트, GPPAC 등
- 6)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 촉구 활동
 - (1) 국회의원 대정부 질의 지원 (2월)
 - (2)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기간 워크숍
 - 일시 : 2/24(목), PT
 - 주제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 : 의원, 정책결정자, NGO 파트너십"(UNSCR 1325 and Pea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tnership of Parliamentarians, Policy Makers and NGOs)
 - 장소 : 미국, 뉴욕
- 7) 2011 한반도평화통일시인회의

○ 일시 : 3/10(목) ~ 3/12(토)

○ 후원 : 인천시

8) GPPAC 연대활동

○ 일시 : 4월말 또는 5월

○ 내용 : GPPAC 국제대표단 서울 방문 지원

9) 한반도 위기 긴급 대응 평화행동

(1) 5-24 세계평화와 군축을 위한 여성의 날 평화행동

(2) 대령양 군비 동결운동 - 4월12일 군사비 동결 세계행동의 날 공동행동

3. 갈등해결센터 사업

○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평화커뮤니티 사업

1) 교사, 학부모 대상 갈등해결 교육

- 다양한 틀로의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을 기획, 진행한다.

- 도래조정, 대화모임,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성 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2)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평화 교육

- 교육의 특성화, 전문화를 살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한다.

(1) 학교 교육

- CA(계발 활동)

- 창의 재량

- 학교폭력예방교육

- 평화리더십훈련(임원수련회 등)

- 방과후 교실

- 회복적 교육, 훈련

- 도래조정자 훈련

(2) 청소년 평화 리더십 캠프

(3)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기관

3) 도래조정반 운영

- 초중등학교에서 또래조정반 운영(여주중, 독산초, 대방초 등)
 -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사례에 개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4) 회복적 사범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으로부터 사건의리판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 강화
 - 조정자 활동

○ 주요 교육 사업

1) 갈등해결과 평화 전문 과정

△ 회복적 사범 조정자 훈련 과정

- (1) 일시: 2월 25(금)- 26일(토) 1박2일 워크숍
- (2) 강좌 내용 및 방식: 실습으로 진행.
- (3) 내용: 회복적 사범이란?, 회복적 사범 조정자로서 역할과 책무, 실습

△ 제9기 감사 트레이닝

- (1) 일시 : 3월 12일(토)-13일(일) 숙박워크숍, 3/21-4/20 매주 월 수 오후 6시
30분-9시 30분, 5/14, 21(토) 2시-7시 (총 55시간)
- (2) 강좌 내용 및 방식 : 강좌, 참관, 실습
- (3) 내용 : 청소년 대상의 진행자로서 진행 실습 및 평가, 고안 만들기, 참관 실습

△ 조정자(mediator) 훈련

- (1) 일시 : 9월 2일(금)-3일(토) 1박2일 워크숍
- (2) 강좌 내용 및 방식 : 실습
- (3) 내용 : 개인간 갈등, 공공갈등 조정 실습

△ 조정자(mediator) 훈련 고급 과정/MIT(mediator in training)

- (1) 일시 : 연중
- (2) 강좌 내용 및 방식 : 실습
- (3) 내용 : 조정 실습

△ 진행자(Facilitator) 훈련과정

- (1) 일시 : 11월 5일(토)-6일(일) 1박2일 워크숍
- (2) 강좌 내용 및 방식 : 실습으로 진행

(3) 내용 : 회의진행, 의사결정, 문제해결워크숍 진행 기술과 방법 훈련

* 위탁교육 형태로도 수시 진행

2) 지역 NGO 활동가 대상 갈등해결, 조정 훈련

- 지역갈등, 사회갈등의 중심이 된 지역 중심으로 NGO활동가 및 여론주도층 대상으로 갈등의 평화적 해결, 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갈등해결교육, 토론회조정, 대화모임을 지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역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기획, 운영

3) 공무원 대상 갈등해결, 조정훈련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 평화적 갈등해결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 1) 각 프로그램별 자료 정리, 소책자 발간: 그간 진행되었던 교육사업 및 내용들을 자료화하여 소책자를 발간한다.
- 2) 갈등해결과 평화 관련 주제 토론회, 세미나 개최
- 3) 논평(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갈등해결과 평화' 입장에서 논평 등 글을 써서 꾸준히 발표한다.)

○ 프로그램 연구, 개발

1) 청소년교육 관련 교안 연구 :

- 초/중/고 대상별 세분화된 교안 마련
- 평가척도 연구
- 교재교구 개발 : 교육방법론, 시나리오, 워크시트 등

2) 사회갈등사례 연구:

- 갈등사례 발굴, 심층 분석(지방자치단체 갈등조정 기구 실태 조사 등 과제로 진행)
- 갈등해결센터 교육사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사회갈등사례 시나리오 작업
- 웹진, 홈페이지 등에 사회갈등사례 분석내용 소개 및 갈등 관련 서적 서평 실기

3) 통일교육 및 한반도 평화형성을 위한 과제에 갈등해결적 관점과 방법을 적용

하기 위해 노력한다.

○ 조직 강화 및 확대

1) 기간 교육참가자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

2) 전문강사풀 형성, 강화

청소년교육뿐 아니라 일반 주부 대상, 공무원 대상 등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풀을 형성하고, 각 대상별 교육 내용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함.

3)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강화

- 강사역량강화 모임: 7,8기 강사프레이닝 수료자 중심 청소년교육팀 회원 대상
- 강사역량강화 심화 모임: 6기 강사프레이닝 이전 수료 활동가 중심 대상
- 회원 평화마당: 3개월에 1회 회원 대상 강좌 개설

○ 갈등해결을 위한 직접적 개입 활동

- 3자 역할로서 실제적인 갈등 상황에 3자로 개입할 수 있는 방식과 모델을 연구, 시범적으로 적용한다.(학교폭력 피해자가해자 조정, 사회갈등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접근 모색)

1) 회복적 사법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 초중등학교에서 폭력 등 사건 의뢰받아 진행
- 서울가정법원, 의정부가정법원에서 화해권고위원으로 참여, 활동

2) 사회갈등에서 3자 역할 모색

3) 조직내 갈등해결을 위한 진행자 역할 모색

○ 국제외연대

- 국제비폭력평화세력(Norviolent Peace Force International)
- 회복적정의네트워크
- 한국아나뎀티스센터(KAC)

4. 정보·홍보사업

- 1) 홈페이지 관리, 온라인 평화활동 등
- 2) 세부내용과 담당인력은 추후 논의

5. 회원 사업

- 1) 회원전체모임
 - 목표 :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치성과 역량을 강화한다.
 - 계획 : 사무국을 중심으로 계획하여 진행한다.
 - 대상 : 회원
- 2) (가칭) 「함께하는 평화걸음」
 - 목표 : 회원의 참여와 소통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소모임
 - 계획 : DMZ 기행, 걷기, 산행 등을 결합하여 매월 1회
 - 대상 : 회원이면 누구나

6. 재정사업

- 1) 후원의 밤 : 2011년 하반기에 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하여 진행한다.
- 2) 캠페인·이벤트 통한 모금사업
 - (1) 해피빈
 - 네이버 포탈, 모금사이트 해피빈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해피로그 관리 및 운용
 - 해피로그 제작일 : 2009년 4월 10일
 - 모금현황 : 2009년 13,000원, 2010년 4,700원
 - 모금방법 : '꿈' 기부 방식

(2)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동행

- 한겨레21, 이코노미 인사이트, 르몽드디플로마티크가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기부사이트로 현재 본회를 포함 80여개 단체가 연대중임
- 개시일 : 2010년 12 중순
- 모금현황 :
- 모금방법 : 소속 단체의 회원이 상기 매체를 구독하는 경우, 구독료의 10% 범위 내에서 구독자의 명의로 소속 단체에 기부함

7. 창립 15주년기념 준비사업

- 1) 2012년 평화여성회 창립 15주년 기념행사 준비
- 2) 특별법률 구성하여 진행

8. 연대 및 협력사업

1) 국내 상설연대

- (1) 한국여성단체연합 : 총회, 이사회, 통일평화위원회(임원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사무국장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2) 한국경신대문재대학협의회 : 대의원총회, 수요시위 연 2회 주관 및 참석
- (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시민분과
- (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 (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표자회의, 시민평화포럼, 국제연대포럼
- (6)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여성평화네트워크
- (7) 한국대인지지대책회의 :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 (8) 미디어 수용자 주권연대

2) 국내 사안별 연대

- (1) 미국산 소고기 군납반대 시민모임
- (2)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 (3) 교육희망네트워크
- (4) 더불어행복한세상을위한여성모임
- (5) 한반도평화포럼

3) 국제연대

4) 협력사업

- (1) 외부지원 프로젝트
 - 가. 여성재단
 - 나. 에버트재단
- (2) 자매단체 사업
 - 가. 대전평화여성회
- (3) 이우경평화장학위원회

부 록

- 2010년 결산보고
- 2011년 예산계획안
- 공동대표 및 임원 인선안
- 평화여성회 정관
- 평화여성회 조직현황
- 2010년 성명서
- 여성평화뉴스레터 목차

【 부록 】 2010년도 결산보고

| (사)평화물만드는여성회 2010년 결산보고 | | | | | | | |
|---------------------------------------|------------|-------------|-------------|------------------|------------|-------------|-------------|
| 1. 회계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 | | | | | | |
| 2. 총괄 결산보고 | | | | | | | |
| 수입부 | | | | 지출부 | | | |
| 관 | 항 | 예산 | 결산 | 관 | 항 | 예산 | 결산 |
| 일반 회계 | 건년이월 | 16,719,539 | 16,719,539 | 일반 회계 | | | |
| | 회비 | 39,500,000 | 34,882,000 | | 사업비 | 28,530,000 | 27,654,075 |
| | 후원금 | 21,500,000 | 33,796,580 | | 운영비 | 57,992,793 | 90,939,353 |
| | 참가비 | 15,000,000 | 14,025,360 | | 미지급금 | 15,996,746 | 14,996,746 |
| | 자료제공비 | 500,000 | 681,000 | | 예치비 | 4,500,000 | 4,508,520 |
| | 보조금 | 2,400,000 | 2,400,000 | | | | |
| | 잠수입 | 19,300,000 | 8,758,459 | | | | |
| | 회차적립금 | 2,400,000 | 2,400,000 | | | | |
| | 소계 | 98,600,000 | 96,516,599 | | 소계 | 107,019,539 | 98,098,694 |
| 특별 회계1 | 입주기금 | 32,000,000 | 33,571,000 | 특별 회계1 | 입주기금 | 40,300,000 | 40,280,911 |
| | 소계 | 32,000,000 | 33,571,000 | | 소계 | 40,300,000 | 40,280,911 |
| 수별 회계2 | 동북아리 | 39,285,160 | 39,295,916 | 특별 회계2 | 동북아리 | 39,285,160 | 39,299,692 |
| | 평화리유니 터 | 15,000,000 | 15,003,246 | | 평화리유니 터 | 15,000,000 | 15,660,957 |
| | 소계 | 54,285,160 | 54,299,162 | | 소계 | 54,285,160 | 54,960,649 |
| 합 계 | | 184,885,160 | 184,386,761 | 합 계 | | 201,604,699 | 193,340,294 |
| | | | | 차년이월(잔고) | | | 7,766,006 |
| 총 계 (합계+차년이월) | | 201,604,699 | 201,106,300 | 총 계 (합계+차년이월) | | 201,604,699 | 201,106,300 |

(사)정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10년 결산보고

1. 회계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2. 총괄 결산보고

| 수 입 부 | | | 지 출 부 | | |
|-----------------|-----------|-----------|-------------------|-----------|-----------|
| 항목 | 예산 | 결산 | 항목 | 예산 | 결산 |
| 전년이월 | 4,061,978 | 4,061,978 | | | |
| 이사회비 | 2,880,000 | 3,600,000 | 회회비 | 600,000 | 190,620 |
| 연구위원회비 | 1,200,000 | 790,000 | 사업비 | 4,200,000 | 4,099,250 |
| 후원회비 | 300,000 | 1,080,000 | 운영비 | 3,560,000 | 3,185,600 |
| 인세 | - | 102,000 | 예비비 | 181,978 | |
| 잠수입 | 100,000 | 424 | 장소기금후원 (정화여성회) | | 2,071,000 |
| 소계 | 4,480,000 | 5,492,424 | 소계 | 8,541,978 | 9,546,470 |
| | | | 차년이월(잔고) | | 7,932 |
| 합계 (소계+전년이월) | 8,541,978 | 9,554,402 | 합계 (소계+차년이월) | 8,541,978 | 9,554,402 |

【 부록 】 2011년도 예산계획안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11년 예산 (안) | | | | | |
|---------------------------------------|----------|-------------|-------------|----------|-------------|
| 1. 회계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 | | | | |
| 2. 총괄 예산 계획 | | | | | |
| 수 입 부 | | | 지 출 부 | | |
| 과 | 항 | 예산 | 과 | 항 | 예산 |
| 일반회계 | 전년이월 | 4,957,615 | 일반회계 | | |
| | 연회비 | 2,000,000 | | 사업비 | 39,600,000 |
| | 후원금 | 52,000,000 | | 운영비 | 69,140,000 |
| | 계정사업비 | 25,500,000 | | 미지급금 | 7,000,000 |
| | 교육장가비 | 14,000,000 | | 예비비 | 1,500,000 |
| | 자료제공비 | 1,000,000 | | | |
| | 감수입 | 12,773,994 | | | |
| | 소계 | 107,273,994 | | 소계 | 117,440,000 |
| 특별회계1 | 남북교육기금 | 3,408,391 | 특별회계1 | 남북교육기금 | 2,400,000 |
| | 복지직립금 | 4,200,000 | | 퇴직금 | 3,400,000 |
| | 소계 | 7,608,391 | | 소계 | 2,400,000 |
| 특별회계2 | 평화통일사업 | 30,000,000 | 특별회계2 | 평화통일사업 | 30,000,000 |
| | 강령해결센터사업 | | | 강령해결센터사업 | |
| | 소계 | 30,000,000 | | 소계 | 30,000,000 |
| 합 계 | | 144,882,385 | 합 계 | | 149,840,000 |
| | | | 차년이월(참고) | | |
| 총계(합계+전년이월) | | 149,840,000 | 총계(합계+차년이월) | | 149,840,000 |

【 부록 】 공동대표 및 임원 인선안

1. 경과

- 1) 11/8(월), 제11차 운영위원회, 제15차(제16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2010년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공동대표 및 임원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을 선출하기 위한 인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근거 : 본회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2항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내용 : 운영위원 5인, 운영위원회 추천 2인을 선출함

- 2) 12/2(수), 제3차(임시)이사회, 2인의 인선위원회 참여 이사 선출
본회 고문으로 위촉할 2인을 제안

- 3) 12/29(수), P6, 인선위원회
 - 위원장 : 윤수경(공동대표)
 - 위원 : 김선배(사회갈등분석팀장), 박수선(갈등해결센터 소장), 정경란(정책위원장), 정경심(이사), 조영주(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한정숙(이사), 홍승희(한반도평화센터 소장) 등 위원장 포함 총 8명
(※ 여혜숙 위원은 당시지가 되어 사퇴함)
 - 논의결과 :
 - (1) 평화여성회 대표로 추천된 이 : 김정수, 여혜숙 (2인)
 - (2) 이사로 추천된 이 : 윤수경, 이나호, 정경심, 조영희 (4인)
※ 이사 : 강순원, 김성은, 김정수(공동대표로 당연직), 김지영, 김진희, 박유희, 여혜숙(공동대표로 당연직), 윤수경, 이나호, 전은주, 정경심, 정민택, 조영희, 한정숙 (14인)

- 4) 그 외 이사장 선출 및 고문 위촉 보고
 - (1) 이사장 : 김성은 (2011. 1. 12.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선출)
 - (2) 고문 : 김은옥(전 이사장), 이김현숙(전 이사장) (이사회외 위촉 제안 수락)

2. 인선(안)

| 구분 | 2010년 현재 (임출 동기이사) | 임 기 | 비 고 | 인선(안) (임출 후보) |
|------------------|-----------------------|-----------------|-------------|------------------|
| 이사회 | 정현택(이사장) | 2011-2013(3년) | 연임 | 정현택 |
| | 강순원 | 2009-2011(3년) | 해당없음 | 강순원 |
| | 김성은 | 2009-2011(3년) | 해당없음 | 김성은(이사장) |
| | 김열리 | 2009-2010(간여2년) | | |
| | 김지영 | 2009-2011(3년) | 해당없음 | 김지영 |
| | 김진희 | 2009-2011(3년) | 해당없음 | 김진희 |
| | 박유희 | 2009-2011(3년) | 해당없음 | 박유희 |
| | 심영희 | 2009-2011(3년) | 해당없음 | |
| | 윤수경 | 2011-2013(3년) | 연임 | 윤수경 |
| | 권은주 | 2009-2011(3년) | 해당없음 | 권은주 |
| | 정경심 | 2009-2011(3년) | 해당없음 | 정경심 |
| | 조영희 | 2011-2013(3년) | 연임 | 조영희 |
| 한정숙 | 2009-2011(3년) | 해당없음 | 한정숙 | |
| 공동대표 | 윤수경 | 2008-2010(3년) | 15차 정기총회 선출 | 김정수 |
| | 조영희 | 2008-2010(3년) | 15차 정기총회 선출 | 여혜순 |
| 감 사 | 최세광사 한국영 | 2010-2012(3년) | 해당없음 | 한국영 |
| | 사영광사 진선미 | 2009-2011(3년) | 해당없음 | 진선미 |
| 한반도평화센터 | 소장 홍승희 | 2009-2011(3년) | 해당없음 | 조지연경 소임 |
| 광동해경센터 | 소장 박수선 | 2009-2011(3년) | 해당없음 | 박수선 |
| 일상생활센터 | 소장 윤수경 | 2010-2011(간여2년) | 해당없음 | 조지연경 소임 |
| 정 책 위 원 회 | 위원장 정경란 | 2010-2012(3년) | 해당없음 | 정경란 |
| 국제협력위원회 | 위원장 김정수 | 2009-2011(3년) | 해당없음 | 대표추천 공석 |
| 무설 한국여성 평화연구원 | 원장 김열리 | 2009-2010(간여2년) | | 추천후보 없음 |

【 부록 】 평화여성회 정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본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 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 관점과 평화주의 관점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한다.

1. 평화·통일사업
2. 평화교육
3. 통일교육
4. 평화·통일연구
5. 국내외 연대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후원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③ 회원의 가입절차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

- 다.
-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3. 총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

-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 ②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③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징계)

-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권 제한,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 ② 회원을 제명 등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회원의 제명 등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총회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2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 권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 1. 경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하는 때
 -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 4.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
- ③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공동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 메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 ②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 ③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 ⑥ 기타 주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재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본회(법인)의 합병 및 분할, 임원의 해임,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사무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공동대표 3인 내의 (상임대표포함)
- ② 이사 15인 이내 (공동대표 포함)
- ③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의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③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④ 그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⑤ 선임된 임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제한)

- ①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이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①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이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그 중 1인은 상임대표가 되고, 총회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 유고 또는 궐위시 이사회에서 공동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가 된다.
-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 ①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 ①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한다.

- ③ 필요한 경우 후원이사를 둘 수 있고, 이사회 운영에 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임시 이사회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이사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25조(개회 및 봉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적격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 발의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감사)

- ① 본회의 사업과 제정을 감사하기 위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두고, 연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

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설기구

제30조(부설기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31조(부설기구의 장)

- ① 부설기구의 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이므로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부설기구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부설기구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부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제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태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재정수입)

-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의 수립)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예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처)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

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40조(구성 등)

- ①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둘 수 있고 사무처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41조(정관제정 및 개정)

-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법인예산)

-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본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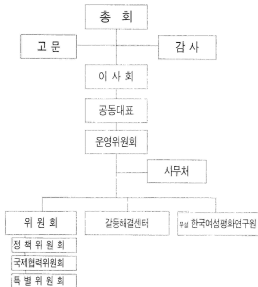
제44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 1997. 3. 28 제정
- 1998. 2. 10 1차 개정
- 1999. 3. 4 2차 개정
- 2000. 1. 25 3차 개정
- 2002. 1. 25 4차 개정
- 2003. 1. 28 5차 개정
- 2004. 1. 9 6차 개정
- 2010. 1. 20 7차 개정

【 부록 】 평화여성회 조직 현황



【 부록 】 2010 성명서 목록

| 날 짜 | 제 목 |
|--------|---|
| 100210 |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의지를 밝히고 외교적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 |
| 100226 | 방송문화진흥회를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김우룡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
| 100322 | 국회는 MBC 청문회·국정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 100407 | 한일병합 100년, 일본 내 조선학교 차별에 반대하는 연대사 |
| 100427 | 성매매 의혹 감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
| 100504 | 국회는 MBC청문회를 즉각 개최하라! |
| 100524 | 이명박 대통령 '3-26 천안함 사태' 담화문에 대한 논평 |
| 100524 | Comment on Special Address to the Nation by the ROK President regarding the Cheonan Naval Warship |
| 100525 | '전쟁 불사'의 대북소강경 정책 즉각 중단하라 |
| 100526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 선언문 |
| 100526 | Statement on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 100613 |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 평화통일범국민대회 대회사 |
| 100615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성명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에 즈음하여- |
| 100616 | 참여연대의 정당한 활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 100616 |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발송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압 중단과 천안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 100623 | 제923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성명서 |
| 100629 | 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for a Peaceful Solution to the Cheonan Incident in Support of Korean Civil Society |
| 100810 | 이포보·함안보 활동가들의 안전 귀환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4대강 공사 즉각 중단하라 |

| 날 짜 | 제 목 |
|--------|--|
| 100815 | 6·15민족공동위원회 8·15공동호소문 |
| 100817 |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합동 전쟁연습 중단하라! |
| 100825 | 무의미한 4대강공사.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 |
| 100826 | 한일합병 100년에 즈음하여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 호소문 |
| 100829 | 6.15민족공동위원회 경술국치 100년 공동성명 |
| 101004 | 10.4 남북정상선언 발표 3주년 남북해외공동결의문 |
| 101006 | 6자 회담 참가국에 드리는 제안서 |
| 101006 | Recommendations : to the Six-Party-Talks Countries |
| 101013 |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화유망드림여성회 2차 의견서 |
| 101014 | 여성·평화단체 PSI 군사훈련 반대성명서 |
| 101102 | 한국 정부의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325호 이행'에 관련된 결의서 및 외교통상부 답변 |
| 101110 |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성계 기자회견문 |
| 101110 | G20 여성행동 공동성명서 |
| 101115 |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여한 모든 '직'을 사퇴하며 |
| 101120 | 남북 화해와 평화의 디딤돌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
| 101122 |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시국선언 |
| 101123 |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여성단체 논평 |
| 101123 | 27 South Korean Women's Organizations' Statement on North Korea's Artillery Barrage on Yeonpyeong Island |
| 101125 | The Need for Talks to Avoid Escalation of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
| 101202 | GFPAC Northeast Asia Statemen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 101209 | 우리 여성들은 모든 군사적 도발을 반대하고 남북대화를 촉구한다 |
| 101219 | 연평도 포사격 훈련 계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 101220 | 전쟁을 부르는 연평도 포격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
| 101229 |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호소합니다. |

【 부록 】 2010 성명서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의지를 밝히고 외교적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

일본의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오카다 일본 외무대신의 방한은 많은 우리와 기대를 낳고 있다. 하토야마 연립 정권의 출범이 한일관계의 전환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 속에서 커져 갔지만 아직 이렇다 할 명확한 올바른 과거청산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향해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얼마 전 오카다 외상이 한일강제병합에 대해 "그때의 세계정세를 보면 그런 행동은 일본에 한정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다시금 한일간의 관계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졌던 지난 세기를 딛고 일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기를 만들어 가야 할 역사적 책무를 일본과 한국 정부가 결코 비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수많은 민중들이 전쟁과 식민 역사 속에서 희생된 강요당해야 했고, 여전히 그 상처를 안은 채 살아 가고 있는 현실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된다. 언제까지 가해자로 지탄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답답증을 느끼는 일본이라면, 진실한 반성과 명확한 해결을 이루지 못한 국가적 책임의 방기가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을 반드시 되새겨야 할 것이다.

취임 후 첫 방한을 앞둔 오카다 외상은 일본정부가 역사적 과오를 철저히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한일외교장관회담 속에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식민과 전쟁범죄를 태이름에 올리고 명확한 해결의 뜻을 전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생에서 명예와 인권회복을 염원하며 매우 거리에서 정당한 요구와 외침을 이어가고 있고 그마저도 생존자의 수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해결에 실패했던 과거 정권과는 달리 통속이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자행했던 지난 과오를 명확히 인정하고 사과할 용기, 바로 하토야마 총리가 지난 방한 시에 말했다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가진 정권"임을 행동들 통해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명확한 입법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노력을 주각 이행하고 외교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 역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알맹이 없는 논의를 이룬 채

외교적 수사로 성과를 지속하는 유명무실한 자리로 끝나지 않도록 명확한 요구와 주문을 전달해야 한다. 한일경제병합이라는 국제 사건으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피해자들의 고통이 하루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가 동의하고 있는 반인도적 전쟁범죄로서 일본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외면함으로써 일본정부는 또 한번의 가해를 가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등 문제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하라!
-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 진상규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여자성신근로대, 시베리아억류자, BC급 전범, 유골 문제, 공학군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가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정치적 노력을 실시하라!
- 일본 사법부는 한일협정문서공개소송에서 한국에서 공개된 문서조차 공개하지 않는 반민주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된 이러한 사법부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일본정부는 즉각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여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구에 응달라!
-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찬미하는 극우적인 역사인식을 담은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결정에서 합성한 바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파란한 '근현대국조함'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후소사'와 '지유사'의 역사교과서 결정 합의를 철회하고, 자유와 평등, 인권과 평화의 실현을 위한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
-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주권침해 문제이자 왜곡된 역사인식의 반영이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영토 팽창 과정에서 무력에 기초하여 편입된 영토라는 사실을 우리는 환기시키고 싶다.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당장 철회하고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관련 사항을 삭제하라!
- 재일한국인·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과 우익의 폭력은 식민주의가 지금까지도 극복되지 못하고 일본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즉각 재일한국인·조선인의 지방참정권을 보장하고, 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을 시행하라!
-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인의 영혼이 지금까지 원형제과시증과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어, 유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야스쿠니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유족들의 주장을 즉각 수용하여 피해자와 유족

우리는 오늘 오카다 외무대신의 한국 방문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개최에 기대와 희망을 안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에 새롭게 일본 총리가 된 하토야마 총리가 한국 방문을 하여, "역사를 직시하겠다"고 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하토야마 총리의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주권을 빼앗긴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올해에는 진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곳 일본대사관 앞에서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900자가 넘도록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며 집회를 했습니다. 다짐 수요일인 오늘 최무대신의 발언은 우리들에게 더욱 가슴 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일본 하토야마 연립내각은 우리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루속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를 재정의하여 해결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오카다 외무대신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그것이 전경으로 다시는 이방에서 우리와 같은 상처와 아픔을 지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본정부의 평화와 정의를 향한 약속이 되리라 봅니다.

2010년 2월 10일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87명이 보냅니다.
김원옥 이수덕 김순옥 이옥선 김월출 공정영 박혜남 권인래 김경순 김경애 김계희 김군자 김달선 김복경 김복득 김복선 김복선 김봉미 김선이 김양주 김연희 김요순 김옥귀 김희환 김요지 김윤성 김정봉 김주희 김희선 박보미 박순희 박순희 박옥련 박옥선 박필근 태복남 태춘희 송남이 신명성 신달연 안원순 양재순 우연희 유희남 윤금혜 윤순만 이기녀 이기선 이기경 이두순 이덕달 이복순 이상희 이선옥 이수선 이영근 이옥선 이용녀 이용수 이필혜 이효순 임정순 임정자 장원동 정다리아 정복주 정윤홍 권화순 최갑순 최갑선 최덕래 최선순 최옥이 최수임 최영연 황귀란 황갑자 황규주 황선순 하상숙 박서훈 박자순 이수단 노수복 송신도 김득선 박유선

방송문화진흥회를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김우룡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오늘(26일) 오후 3시경이면 MBC의 새로운 사장이 결정된다. 이는 공영방송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던 MBC가 낙하산 사장에 의해 장악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세 명으로 압축된 MBC사장 유력후보는 떠나 할 것 없이 MB 정적을 극극 지지하는 인사들이다. 이는 MBC를 뜻대양하게 여겨왔던 정부여당의 의공을 반영한 결과로, 최종 선임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면이 있을 리 없다. 오로지 총정경쟁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약 MBC 구성원과 시민사회가 새로운 사장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는 실로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에 대한 지금의 증식적인 비판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구태가 MBC에서도 재연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 전반의 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쳐 그나마 눈치보던 언론중재자 정부여당의 해미라기로 전락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딸 그대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인 것이다.

바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공적 책임을 실천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권총과 공공복지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4공천 MBC의 공적 업무를 감제하고 시청자 권익을 지킬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런데 김우룡 이사장을 비롯한 원 방송문화진흥회 여당추진 이사들은 이러한 본래의 역할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로지 비판적 언론 MBC 권총이기에만 온 힘을 쏟아왔다. 이들은 단일 직후부터 사사건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무리한 요구를 반복해왔다. 이를 통해 안으로는 MBC구성원을 압박하고 밖으로는 MBC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등 정부여당의 최수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것이다.

특히 업기명사장의 사임을 유도하기 위해 끈질긴 괴롭힘이 있었음은 이미 잘 탄탄 사 람은 다 아는 일이다. 서로 합의한 보직인사조차 처리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또 거부하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업기명사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음은 지금이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괴롭힘을 거듭한 끝에 강제로 내쫓은 자리에 정부여당에 총선하는 새로운 사장을 앉히는 절차가 합법적인 행위라 하니 우격다짐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 위장된 낙하산 인사를 결정하고 있는 정부여 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그 주구수서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후안무죄 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김우룡 이사장과 여당추진 이사들의 즉각적인 사과와 사퇴를 요 구하는 바이다. 또한 원 사대의 위공함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며,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 방송문화진흥회를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김우룡이사장과 여당추진이사들은 즉 각 사퇴하라!
- 정부여당은 MBC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여당은 MBC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전상조사와 공적정분회를 즉각 실시하라!
- MBC 노동조합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라!

2011년 2월 26일

평화광안모듬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정의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국회는 MBC 청문회 · 국정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19일 전격 사퇴하였다. 그가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권이 엄기영 사장 사퇴, 김재철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MBC 장악에 어떻게 관여해왔는지를 밝힌 지 난 이틀만이다.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 정권의 MBC 좌반 대청소는 '근집'이라 표현된 중앙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어 왔다. 바로 그 '근집'이 엄기영사장을 내쫓은 사령탑이었고, MBC를 김철이 기 위해 김재철 관제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낸 곳이며, 김재철사장이 제대로 못하자 '조인표' 하고 '대'도 때리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던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군사정권시절에도 있었을 법한 일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정권의 신문경찰 기도'가 충격적 사실로 하나하나 검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이 커지자 김우룡 전 이사장은 '발언의 내용은 진실이 아니며 상당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자신의 말을 부인하고 있다. 또 '발심수' 운운하며 쫓기 사회함으로써 이를 봉합하려고만 하고 있다. 논란 될화대는 자신들의 인식 개입은 없었고 '근집'은 청와대가 아니라서 해명 아닌 해명만을 내놓고 있다. '조인표'를 찍었다는 김재철 사장은 명예훼손 소송을 운운하며 변죽을 울리고 있다. 또다시 그들의 '시금줄' '해타기' '유기'가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김우룡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이를 덮어버리려는 정권, 방송권, 관제 낙하산 사장의 강력한 제산을 들 알고 있다. 이번에는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과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치권력이 방송 장악에 어떻게 개입 했으며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김우룡 체제의 방송권은 어떤 역할을 분담해왔는지를 단편하여 알려야 한다.

청와대, 김우룡 전 이사장, 김재철 관제 낙하산 사장에게도 요구한다. 국민의 눈과 귀를 어설픈게 가리려 하지 말고, 당당히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임하라. 그리고 김재철 사장은 국민들에게 사퇴하고 당장 사퇴하라. 이는 MBC 장악에 또 다른 몫을 히2였던 방송권 여당추천 이사를 또한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청문회를 통해 권위를 밝히는 것만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라.

이번 사태는 정권이 사회적 공기인 언론을 구조적으로 장악하고자 한 변민주적 기도다. 이를 밑바닥부터 파헤치지 않고서는 끝낼 수 없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사실이 낱날이 밝혀지는 그 날까지 온 힘을 다할 것이며, 누구에게도 사유화될 수 없는 공영방송의 자존과 독립을 위해 힘써져 복되나갈 것이다.

2010년 3월 22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위원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일병합 100년, 일본 내 조선학교 차별에 반대하는 연대서

* <조선여성좌연대하는일본부인연합회>에게 보낸 연대서입니다.

평화를인드는여성회

2010. 4. 7.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조일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사회에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북한 여성들과 화해와 협력을 위해 예스시는 귀 단체의 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한국여성들은 한반도 식민지 경험, 남북 분단과 전쟁의 역사 속에서 상호존중과 평화로운 삶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지 경험해왔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대립, 충돌, 전쟁을 피어 넘어 화해, 존중, 평화를 추구하는 일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믿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의회에서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법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고교 교육 무상화 정책은 '모든 아동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이란 가치를 내건 하토야마 정권의 핵심 공약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고등학생에게 공평하고 수준의 수업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일동포들이 다니는 조선학교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이유로 한 조선학교에 대한 학습권 차별 행위는 어린이 권리조약과 유엔인권차별금지협약 위반입니다. 유엔 인권차별 철폐 위원회가 '일본 문제 심사 회의'를 열고, 교육 기회 제공에서 일체의 차별이 없는 상태를 확보하도록 권고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조선학교가 일본 식민통치의 유산임을 알고 있습니다. 조선학교는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뒤 일본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재일동포들이 독자적인 민족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입니다. 일본의 식민통치가 없었다면 이 학교는 설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과 한반도 사이의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를 바랍니다.

한반도가 일제에서 해방된 지 65년, 그러나 일본 식민통치의 역사가 낳은 한반도 분단과 북한과 일본의 대립이라는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비극을 끝내는 데 일본여성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선인을 포함한 외국인 차별받지 않고, 조선학교에서 무상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일본 여성의 활동을 요청합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평화, 화해, 협력이라는 밝은 미래를 일당할 수 있도록 한국 여성도 일본 여성과 연대할 것을 약속하며 귀단체의 부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連帯 Message

平和を作る女性會

2010. 4. 7.

平和及び連帯の協力をここに申し上げます

現在、日本と北朝鮮の国家間において国交正常化に至ることなく、互いに對立する厳しい状況下であるにも関わらず、日本社會の中で歴史の眞實を伝え北朝鮮との和解と協力のために協力する市民団体の活動に對し、まず心からの敬意を表します

私たちが韓国女性は、朝鮮半島の植民地経験、南北分断と戦争の歴史の中で、

相互尊敬と平和な暮らしが女性たちにとっていかに大切かを確認してきました。東アジア諸國間での對立、憎悪、そして戦争の歴史を乗り越えた別日、尊重、平和を追求することに對し、女性が積極的の前に出て行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感じ、私たちはその意見のためにさまざまな活動を實踐しております。

先の議會において可決された「高校無償化法案」では、朝鮮學校をその對象から除外するという内容を受け、私たちは非常に憂鬱に思えます。この高校無償化法案は、「全ての子どもたちに平等な学習権の保障」という憲法を掲げた憲法原理の核心公約であり、國籍を問わず全ての高校生に公立學校と同等の授業料を支援するという内容であったと確認しています

したがって、在日同胞が通う朝鮮學校もその對象に入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北朝鮮との外交關係を理由とした朝鮮學校に對する学習権の差別行爲は、子どもの権利條約、及び國定人種差別撤廃條約に違反していると言えます。同地人種差別撤廃委員会が「日本問題調査會談」を開き、教育機會の提供で一切の差別がない状態を確保するよう警告したことは当然のことです

朝鮮學校は日帝植民統治の遺産であり、朝鮮半島がその植民地から解放された後、その他に殘らざるを得なかった在日同胞たちが強引に、そして民族教育のために設立した學校であります。もし日本の植民統治がなければ、この朝鮮學校は設立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でしょう。日本と朝鮮半島の間にある暗い歴史が再び覆り替えられないために、朝鮮人に對する差別が撤廃されることを願います

朝鮮半島が日帝から解放されてから、六十五年、日本の植民統治の歴史が現した朝鮮半島、北朝鮮、日本の間にある對立という悲劇は入た終わりを迎えていません。私たちはその悲劇を終わらせるために、日本の女性の皆様と共に協力して頂けることを強く望みます。朝鮮人を含む外國人が差別を受けることなく、そしてまた、朝鮮學校においては「高校無償化法案」の適用による授業料の支援が實施されるよう日本の女性の皆様の協力をここに要請致します

日本と韓国の女性が連帯することにより、朝鮮半島と日本との間に平和、和解、協力という明るい未來を繰り返されることを約束します

市民団体の今後のご活躍とご発展を心よりお祈り申し上げます

<기자회견문> [성매매의혹 검사에 대한 공동고발장을 접수하며...]
성매매 의혹 검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경찰의 스폰서 범죄에 대한 MBC <PD수첩>의 충격적인 보도 이후, 경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가 절로 일컬나게 표출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권력적 핵심인 경찰이 지각의 보도·유지세력인 스폰서와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맺어오면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집단 및 항문에 이어 실패당범까지 피검이 자질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를 감할 길이 없다.

발집행 현상은 적인고 상해대일선명피자와 성 매수·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다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여성인권과 피해자 보호에는 미망까지 앞과 성매매를 자기 집대나 놓아, 나아가 직인권의 커뮤니티 행정과 스포츠혁신 경도로 뛰고 있는 경찰은 과연 법집행의 주무직인 법무부가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집행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심하게 한다.

우리 공동고발인들은 권력형 비리나 사회지도층의 비리, 뇌물, 유착비리에 반드시 성낙대 범죄가 뒤따르는 것을 보면서, 성매매와 여성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된 처벌로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만약 이번 사건이 일반 공무원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면 각철은 어떻게 했을지라고 자문하는 이들이 많았다. 징장사정없는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 경찰의 행태는 어떠한가?

경찰은 유죄없이 밝혀지지 경찰 징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위원장에 민간인을 임명하면서 다의 경찰개혁과 자신들의 지우를 도려내려는 듯한 경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더군다나 구려진 진상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을 보면 경찰의 국민기만극에 기가 찰 노릇이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성낙인 위원장은 22월 기자회견회에서 "연무면 검사들이 대부분 재자물"이며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적 공화에서 비롯됐으며,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미도까지 말라"고 말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또한 실질적인 조사를 담당해야 할 세종공 조사단장은 문제의 핵심으로 거명된 부산의 바 모 검사와 사법고시(24회), 연수원(14기) 동기라는 점에서 볼 때, 온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권력형 범죄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 몇 명에 대해서만 "도라맹 고리 자르기"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펼쳐지는 이유이다. 경찰이 국민들의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고 국민의 감으로 바로서기를 원한다면, 얼터러 처벌차래식 '진상조사'를 아니라 밝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

이다. 지금 거명되고 있는 57인 검사들의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사에 돌입하여 그 실체를 분명한 규명해야 함은 물론, 수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검사가 있다면 국민의 공복으로서 사회정의와 인권을 지키고 불법 상해배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오히려 그 권력을 남용하여 상해배범죄와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부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권정으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바로서기를 촉구한다.

2011년 4월 27일

상해배범죄 의혹 검사에 대한 공동고발인 57인 일동

황미재 상해배범죄특별위원장국인대 상임대표
남민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이상 대표고발인 3인)

김연진 한국여성연대 사무국장
강성의 한국여성연대연결 사무처장
강민숙 한국여성위원회 공동대표
강은희 전국여성연대 회원
고미경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구성숙 전국여성노동조합연결 사무총장
권미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권순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김경영 경남여성회 부회장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동희 전국장성신대총재대학협의회 사무국장
김선복 상해배근절위원위원장소리의 공동대표
김수진 615의화계하는우리여성회 준비위원장
김연순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김인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주영 울산여성회 회장
김효신 제주여성단체연대 대표
김희경 하남여성회 사무처장
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류은숙 서울여성회 회장
류희열 전국여성노동조합연결 사무부총장
문수민 한국여성회연합회 활동가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원신 오산여성회 사무국장
배국일 인천희생양성회김갑래 대표

배은진 하남여성회 사무국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송남희 공국여성회연합 인권국장
신지민 전국여성노동조합연결 사무국장
신진영 대구여성회 인문선아장
오노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유영희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유영경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윤미향 전국장성신대총재대학협의회 상임대표
윤송희 전국여성노동조합연결 사무처장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이은미 구로여성회 사무국장
이성미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이우선 오산여성회 운영위원
이은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미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상임대표
임혜경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김수경 한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숙 여권연결지원센터 상임 대표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김종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홍은숙 한국여성회연합회 상임대표
정대술 기획연회 회장
조영희 평화행안인지는여성회 상임대표
최영미 오산여성회 회장
최소영 한국여성연대 운영위원
최진미 한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진희 전국여성연대 회원
한영희 상해배근절위원위원장소리의 공동대표
하영숙 한국여성연대연결회 조직위원장

국회는 MBC청문회를 즉각 개최하라!

MBC 파업이 30일째를 맞고 있다. 이근행위원장의 단식도 벌써 9일째다. 모든 것이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라고 해도, 인간의 한계를 느낄 만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MBC의 분위는 여전히 결기로 남는다. 승리에 대한 믿음과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자부심이 그들을 더욱 공고히 연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파업기간 제작된 이들의 패러디물은 이래로부터의 열기를 가히 짐작하게 해준다. 정말 자랑스러운 MBC 구성원들이 아닐 수 없다.

파업이 계속되면서 낙하산 사장 김재철의 가식적인 모습이 하나하나 분역을 드러내고 있다. 선후대 운운하며 위기의 MBC를 구하자더니 결국 자신의 뜻에 맞지 않자 노조간부에 대한 인·형사상 고소도 서슴지 않았다. 황희만 사사의 보도국장 임명 철회안을 약속한 것이어서 부사장 선임은 경당한 것이라는 궤변도 주저하지 않는다. 점점 강도가 더해지는 그의 이중적 태도는 재차 삼차 편집에 불려가 포인트 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해야 할 만큼 심각한 지경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자신의 말조각 책임질 줄 모르는 부도덕한 인물이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고자 했더니 고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정작 MBC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사퇴'라는 간단한 방법이 있음에도 말이 아닌 말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그의 행태는 '말귀 알아듣고 말 잘 듣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소신과 비전을 펼치는 것이 아닌, 편집 명령에 대한 복종이며 권권 요구에 부응하는 방송사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벗어난 한 차례 선택도 모두 권력에 대한 도적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무여당은 공권력 투입을 고심하고 있다. 결국 그러한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몇 사람의 구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죽음,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파업을 지지한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연대의 힘을 모아 한다. 아당도 나서주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야당,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등 MBC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의 공고한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국회를 열어야 한다.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김우봉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미국 도피에서 돌아온 바로 이 시점이 청문회가 열어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 이기지 못하면서 내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야당의 태도는 결국 우리 모두의 돌과구가 되어줄 수 없다. 진상 조사의 불모를 드고 공권력 운운하는 자들로부터 MBC 구성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이제야말로 청문회가 시작되어야 할 때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빚발치는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조속하게 청문회를 개최하여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음모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2010년 5월 4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회전화, 한국여성경제인연합, 한국여주여성인권센터

이명박 대통령 '3.26 친안함 사태' 담화문에 대한 논평

군사적 강화와 경제로는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없다.

한국 전쟁 60년이 되는 올해, 친안함 침묵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불안함 침묵로 희생된 46명 병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가슴 아리게 생각하며 이런 희생이 앞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년 5개월 사이, 남북 관계는 악화되고 '전쟁의 위기'로까지 심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남북 정상이 서해를 협력의 바다로 전환하겠다는 협의를 이루어 낸 지 불과 2년이 만에 서해는 '분노와 대립의 바다'로 변하였다. 현 상황에 대해 남북 정부의 공동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정부의 담화는 발표 시기 및 내용의 적절성에 화구심을 지아내고 있으며, 군사적 강화와 경제는 남북 군사적 대결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강화와 안정을 지해할 뿐이다.

첫째, 정부가 군사전략을 '평화'전략에서 '회극적 억제'원칙으로 전환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군사적 강화를 통한 억제는 상대방의 군사적 강화를 가져와 남북 정부의 군사적 경쟁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주위권을 주장하며 무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의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그동안 남북 사이에 서해교섭이 있었어도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고 분쟁이 관리되었던 것은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신중한 대응, 더 나아가 남북 사이에 회해 협력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남북 사이에 평화적 방법을 통한 평화를 촉구한다.

둘째, 정부가 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이행 중단 및 남북 교역과 교류 중단은 긴장국면의 완충장치를 제거하는 일이다. 남북의 경제협력과 민간 협력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은 공존하고 협력하여 통일이라는 큰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은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어떤 상황에도 민간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 사이에 상호비방과 보복의 악순환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더 나아가 온 겨레를 전쟁으로 내몰 수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존을 토대로 성립된다고 확신한다. 남북정부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해를 평화와 협력의 바다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가 생명, 평화, 희망의 땅이 되기를 염망하며 남북 회해 협력,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2010.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에 평화유언하는여성회

Comment on Special Address to the Nation by the ROK President regarding the Cheonan Naval Warship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secured by a military buildup and sanctions

May 24th, 2010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Women Making Peace

A series of events regarding the sinking of the Cheonan naval warship shows that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s facing a serious threat even about 60 years after the Korean War.

We express our deep condolences for the deaths of 46 sailors who died as a result of the sinking of a warship and we sincerely hope that this situation will not be repeated.

It has been two years and five months since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Myungbak Lee, and during the period we find that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has worsened to the extent of being a "war crises." Only two years has passed since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greed to convert the West Sea into the sea of cooperation and now it has become the "sea of animosity and confrontation." The governments of the two Korea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current situ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statement, released today, raises much suspicion in terms of the timing before June 2nd local election and the accuracy of its contents. Furtherm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beefing up the military and imposition of sanctions on the North will only heighten the military confrontation and threaten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First, we show a great concer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hanged its military strategy from a defense mode to "proactive deterrence." This "deterrent" action, through a military build up, will likely lead to a concomitant increase of the North's military power, and will further aggravate the arms rac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s. In response to the Cheonan incid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f our territorial waters, airspace or territory are violated, we will immediately exercise our right of self-defense." It mean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use military power if there is North Korean government's violation, referring to its "self-defense. We believe this action will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rmed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ast (i.e. 1998-2007), the inter-Korean West Sea battle did not expanded to a greater scale due to the careful approach of the two Governments not to heighten the tension, as well as their efforts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e call on both Governments to take such a peaceful approach this time as well.

Seco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decision to cease to implement the inter-Korean Maritime Agreement and to stop trade and exchanges will eliminate a buffer in this tense perio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private exchange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evention of increa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ong run,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coexist and cooperate so that they can realize reunificatio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expanded and the government should not stop, under any circumstances,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including private aid.

Third, defamation and a vicious circle of revenge only aggravate the cris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rive the whole country toward a state of war. We strongly believe that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maintained based on the coexistence of both Koreas. Both governments should seek ways to convert the Armistice into a peace region and pursue active dialogue and negotiation. In the process, the West Sea can be turned into the Sea of Peace and cooperation.

On May 24th,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we, women, express our hope that the Korean Peninsula will become a land of life, peace, and hope and pledge ourselves to make efforts to achieve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peace.

<6.15광둥선언실천 남북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전쟁 불사’의 대북초강경 정책 즉각 중단하라

어제 친안함 침몰을 북한 도발로 규정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함께 외교-통일-국방 등 관련 장관들도 줄줄이 대북초강경정책을 내놓았다. 친안함 사태를 계기로 남북간 교류와 교류 전면 중단은 물론 북한 선박의 남한 해상교통로를 차단하고 유사시 즉각적인 자위권을 발동하며, 친안함 문제의 유연 안보의 최후 주권과 한미동맹과 군 전력 강화 등 군사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북심리전 체계와 함께 북한이 방송시설 격파사격에 나서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며 남북관계를 극한대치로 들고 있다.

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 당국이 내린 결론과 별개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공백까지 동원하며 국민들의 의혹 세기를 막으려 하지만,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는 합리적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 곳곳에 숨어 있다. TOD 동영상과 교신기록을 비롯한 핵심 정보가 차단되고 있는 것은 물론, 북측 동향을 비롯한 많은 부분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가설과 추론에 근거하여 결론 내려지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의 엄중함에 비추어볼 때, 정부의 대응조치는 추가적인 정보공개와 철저한 조사,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거친 후에 이루어져도 결코 늦지 않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대응조치들은 대부분 과거의 남북합의를 파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는 물론 국민적 동의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서둘러 결과를 발표하고 정치권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초강경대응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특히 이런 선봉론 발표와 대응조치들이 만약 안보정국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이 정부의 ‘정략’ 때문이라면 그것은 용당한 국민적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제 당국의 발표에서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남북 당국 간의 초강경 조치가 군사적 충돌로 현실화할 위험성이다.

북한책임론을 전제로 대통령과 정부당국이 공언한 일련의 조치가 실행될 경우 한반도는 곳곳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이 현실화하게 된다. 전쟁 불사를 선포하는 일부언론의 논조는 참으로 ‘쿨없고 위험천만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친안함 발표면으로도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출렁이는 ‘북한 리스크’가 업언할 게 우리 현실이다. 국제적 충돌이 대규모 군사행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의 안전은 물론 한국경제에도 치명적인 후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전쟁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3천 초기에 즉각 500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수백만의 형제와 가족을 잃고 모든 경제 기반이 파괴된 뒤에 얻을 ‘승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통족의 피로 산천을 돌돌인 한국전쟁의 그 참혹함을 결코 되풀이할 수 없다. 민족의 운명을 도외시키고 ‘한관 불어보자는’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나서는 자들이야말로 국법으로

엄단할 번역자들이다.

오늘 이 엄중한 위기와 원인은 분명하다. 지난 정부들이 이룩한 남북관계의 성과를 전면 부정하고 대화와 소통 대신 대립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온 이명박 정부의 극대적 대북정책에서 오늘의 위기가 산생(衍生)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시기에 이루어진 남북 당국 간의 합의들, 특히 남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한반도의 시계를 완전히 냉전체제 이질으로 되돌려 놓았다. 정부 발표대로 권한할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그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북한이 져야한다. 그러나 대립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으므로써 이 사건의 유발 원인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관리에 실패한 이명박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대통령 임화가 아무런 성찰과 사과 없이 공적직 대북역세척만 나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연속이 공멸의 길로 가는 시나리오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정부는 대립과 긴장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과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적인 정보 공개 및 예정된 국회의 국정조사 협조 등을 통해 권한할 사건의 진상을 한낱 의혹 없이 밝혀내는데 우선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남북 양 정부는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군사적 조치들의 실행은 반드시 유보해야 한다.

또한 남북교류와 교역의 전면 차단, 나아가 인도적 지원마저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조치는 90년 이전의 냉전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북은 최소한의 대화와 교류의 끈을 유지하고, 순수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6.15남추위원회는 눈앞에 다가오는 과국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지키기 위한 모든 국내외 양심세력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연대를 간절히 호소한다.

2010. 5. 25.

6.15공동선언실천 남추위원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 선언문 >

천안함 선거약을 중단 남북 군사대결 조치 즉각 철회 천안함 진상 철저 규명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반도 거래의 일원으로서 천안함 사건 이 때 우리에게 몰려 닥친 중대한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인 민주 상생 평화를 향해 다시금 큰 걸음을 내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왜문의 침몰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난 이래 우리사회는 이 비극을 함께 애痛的하면서 그 원인사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뜻과 지혜를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긴장규명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의견수렴 기법과 군사정보를 알리는 잘못 정부 관료의 큰 수뇌부들의 태피적 정보통제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예단하지 않자 된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재시행 날, 필수적인 조사사업도 재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충분한 기밀검토 가혹한 의원투쟁이의 조사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의 조사와 전혀 대상인 군정국이 주도한 조사결과를 국민과 국회가 검정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위헌하기 봐이 있는 최고의 군사적 대북 제재조치들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그 조치들은 노태우 정부의 77천원 이래 지난 22년간 쌓아온 모든 평화적 위기관리체제를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군사정권시대 이래 최악의 군사적 긴장국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조급하고 폭단적인 조치들이 문제해결과 물과구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한반도 21세기의 미래를 보장할 온갖 평화연명의 구조들이 송구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위기 속에 어렵게 지기의 기회를 맞이한 우리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도 북핵폐기도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조급한 군사경제 보호 조치들에 의해 사실상 실종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평화와 포용을 일컫는 추구하던 과거에 이런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안보문제를 정치에 악용하고 진실로부터 국민을 눈감게 하는 냉전 회귀적 모험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고 행정권력과 군사적 수단 의 남용을 경계하며, 선진적인 구호보다 평화와 상생의 길을 신중히 모색하는 미래지향적 평화적 현실주의를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남북은 한반도 전쟁과 경제위기를 품고 오는 군사적 대결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국민과 국회의 합의과정, 관련당사국의 충분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하고 있는 일련의 위협적인 대북 군사조치와 대북 경제조치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한정부 역시 위협적인 언사와 극단적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합당한 진상규명 절차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정부는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많은 의혹점들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가의 조처에 적극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자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감증을 보장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와 미국, 중국이 포함된 책임있는 국제 검증조사단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악용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기간에 맞추어 철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군사적 대응조치들은 선포한 것이 지면 불거졌는지 재명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조사결과와 군사적 대응조치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유권자들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정치적 인식나 비합리적 수단을 이용해 감리하는 일련의 공권력 남용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한반도 위기는 우리 의식과 관행이 다가오고 말았지만 그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고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는 일에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소외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평화를 향한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5월 29일 3시, 경제광장에 모여 천안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에 오는 이후 매일 저녁 명동과 경제광장 일대에 모여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을 밝힙시다.

항우 권재철 사이버 시국선언에 적극 참여하고, 매일 정오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지를 전달합니다.

6월 2일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발휘하여 냉정하게 국정과 지정을 평가하고 민주 평화 상생을 향한 미래를 우리 힘으로 열어갑니다.

2011년 5월 28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사국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참가현황]

○ 시인사화·종교단체 / 정당 (현재 9개)

<시인사화·종교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KYC, YMCA 전국연맹, 기독교사회선교연대교회, 나눔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교동총동, 녹색연합, 농민학교, 마산YMCA, 마산평범여자지시연연대, 문화연대, 민가활양심수유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연합, 민주통합시민행동, 말민권남측본부, 불교평화연대, 사찰혁명회, 성대지경,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시민우권, 실원불교전국승가회, 여성연회, 여성정치세력연대, 여성환경연대, 여수살기, 우리민족연방재통일추진회의, 울산시민연대, 원불교사회개혁교무원,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연인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일기연합회총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남측본부, 학교교육위헌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시국회의, 충남시인사화단체연대회의, 충남총동맹여성정치세력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카톨릭농민회, 카톨릭농민회민주교구연합회, 통일광장, 평화네트워크, 평화통일하는여성회, 평화통일하기, 평화와통일을어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주회, 한국청년연대, 한국아름다움민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과대안 / 615수위본부, 정기대학교민주동맹회, 의사외선생, 통일사랑청년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수위지부, 수원IL센터, 수원KYC, 수원여성회, 국립공립윤치기기념사업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 주요인사

김영삼(원주교 목사님,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평화스님 이명남(NCC 인권센터 이사장) 김정하(새벽관리교회의회 회장) 최승덕(원불교 상제교당 교무) / 강명득(연호사) 장승철(민주노동 사무총장) 장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최노현(자유시교육감 후보) 현기하(통일당장 대표) 권기혁(한국여성민주회 상임대표) 권태홍(국민참여당 사무총장) 김경미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김정순(전국여성노동조합총연맹 회장) 김광준(대한성공회 교무원 원장) 김구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대연(종교인연회회 대표, 교무) 김동진(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김동환(전 국민대 총학생회장) 김영진(참여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김명준(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 회장) 김민영(한여대인 사무처장) 김연희(15남측위원장) 고운) 김승철(목회유공자유족회 상임대표) 김상근(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사진(장로한국당 최고위원) 김선희(학교급식전국네트워킹 사무처장) 김승국(평화통일하기 대표) 김영주(남북평화재단 상임이사)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김영춘(민주노동 위원장) 김승태(한국인국제세민총연합 이사장) 김윤태(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회장) 김은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부대표) 김정태(학교급식전국네트워킹 공동대표) 김재남(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김주남(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지영(북한여민이행우유사업본부장) 김한성(615학술본부 상임대표) 남은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노정진(한국YMCA 전국연맹 평화통일위원회) 노희진(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도현수(여의도(월남본부) 민간기(녹색교동총동 사무처장) 박정조(성공회 대표, 녹색연합 공동대표) 박남수(민회총동 회장) 박남희(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박익선(615서울본부 상임대표) 박병우(민주노동 회의회의 국장) 박성환(남북교육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박희순(한국노동연대 공동대표) 박순성(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박승철(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총무) 박영민(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원숙(한국여성재단 권 이사장)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주선(민주당 최고위원)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종기(추도연대) 박진립(생태저장 부소장) 박찬홍(KYC 공동대표) 박재현(15남측연본부 부의회의위원장) 박희진(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배옥영(학교급식전국네트워킹 상임대표) 배은신(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배종필(평화와통일을어는사람들 상임대표) 배근성(서울대 명예교수) 배승현(전 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모임 회장) 상혜유(기독교사회화연구원 원장)

손미희(한국여성단체 자주통일위원장) 송영오(참조한국당 대표) 신필균(녹색교동노동 이사장)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심일선(개혁노동조합유리노동연대 상임대표) 심재환(민변 통일위원장) 안순복(학보급식전국대학대표) 공중대표) 양갑순(6월프럼 운영위원장, 녹색평론 편집) 양순승(사회투자포럼 대표) 엄승윤(KYC 공동대표) 오광진(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오상호(민주당) 오성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오유석(여성정치서비연우연대 공동대표) 오종민(한국전보연대 상임대표) 유위원(참조한국당 국회의원) 윤기식(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윤준하(6월프럼 대표) 이강실(한국전보연대 상임대표) 이강일(615인본본부 상임대표) 이상석(한국농민회총연맹 회장) 이규재(법원연남측본부 회장) 이미혜(북한어린이영양백공정사업본부장) 이상선(총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석대(전 민변회장) 이승환(민화협 집행위원장)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용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재국(정협 전국연합회 사무총장) 이춘재(나눔연대 대표) 이재황(대광교 통일) 이재정(국민참여당 대표) 이광희(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이봉복(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장현(국민대 인문정보학부 교수) 이재호(참여연대 활동사무처장) 이희일(한국 YMCA 전국연회 사무총장) 이재학(가주평화통일민주회의 상임대표) 이형남(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임봉배(아름다운농민회 회장) 임경희(참여연대 공동대표) 장미진(한국전보연대 집행위원장) 장두석(한국농성활동지원기구 회장) 장문숙(통교유학부모한국협의회 회장) 전만순(전치신유자 대표) 정동익(서울학생회 상임대표)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회장) 정사현(전 통일부장관) 정영수(한국노년연맹 수석부위원장) 정승철(대안포럼정년회 회장) 정진실(615노동위원회 대변인, 교육) 정일옥(615연우본부 상임대표) 정권원(한국민주민주노동자총연회) 정진주(김교보 기금장) 정현관(기교연우도 상임기획위원) 정현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승진(KYC 공동대표) 조덕희(노동자연대) 조병희(환경정의 공동대표) 조상수(민화협 공동대표) 조순익(민화협 상임대표) 조연희(노동교수 대학실장) 조영선(민변 대외협력위원장) 조영희(평화를 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조희순(참모총서) 주봉환(민화협집행운영위원장)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준호(2010유권자회의장) 공중대표) 최갑수(인교협 회장) 최민희(전 민연 상임대표) 최병모(연호사) 최사복(평화재정국인의 공동대표) 최승리(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영애(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최순수(남북평화재단) 최진익(한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현리(예수살기) 학무진(노동자총 연대회 사업본부 본부장) 허수정(희망과대인 상임운영위원) 한대수(6월프럼경제조사위원회) 한문숙(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한성일(한국전보연대 상임대표) 한중국(한국전보연대 공동대표) 허상수(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공동운영위원장) 홍길진(삼육) 황상익(서울대 교수) 황현(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황인성(시민주권 소통협력위원장) 황정희(615노동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26일 오전11시 현재 149명

Statement on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Korean civil society, gather here today to resolve the crisis and conflicts caused by the Cheonan warship incident and to take a major step forward toward our goals of democracy, co-existence, and peace.

Since the South Korean Cheonan navy warship rather mysteriously sank on March 26th, our society has grieved the tragic incident together, tried to clarify the cause, and endeavored to provid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in order to prevent its recurrence.

However, a handful of governmental and military officials have tightly controlled the relevant information under the guise of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secrets," thereby obstructing these voluntary acts of concerned citizens who seek to find out the truth about the warship incident.

Despite the fact tha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kept warning about coming to a premature conclusion, the Administration released reports that contained a number of unexplained hypotheses, and raised many questions before the necessary investigations were completed. Th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by the self-interested military, which whitewashed its role and should have been reprimanded. In addition, without allowing enough time for the public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review the investigation, the Lee administration precipitously and unilaterally announced dangerous military, economic and diplomatic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 without reaching a national consensus. These are the types of measures that make ineffective the "peaceful crisis-management system," which has been gradually established since the "July 7 Declaration" by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Do you think that such impetuous and dogmatic measures by the Lee administration are helping to resolve the situation? Instead, those actions are shaking the very foundation of the peace and prosperity processes, which would secure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mid the international economic crisis, our economy was, arguably, slowly recovering but now it is faltering again. Efforts like the Six-Party-Talks and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re potentially missing in the Lee administration's enforcements of military and economic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

People!

Did you witness such military tension when peace and engagement policies were consistently pursued in the past? Now we are at crossroads and need to decide whether to go back to the adventurism of the Cold War era, where the national security issue was abused for power politics and blinded people to the truth. Compise this reckless approach to a future-oriented peaceful realism, which emphasizes the democratic process, checks and

balances on the abuses of administrative and military power, and seeks ways for peace and co-existence rather than provocative slogans.

In this regard, we shall express our opinions.

First, both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immediately stop the military confrontation, which will bring the Korean Peninsula to a war and economic crisis. The South should withdraw its series of dangerous military measures and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were promulgated and enforced without any public debate, National Assembly discussions, or diplomacy with concerned countries. In addition, the North also should refrain from provocative rhetoric and radical military actions but instead cooperate with a rational process of uncovering the truth about the warship case.

Second, we call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take additional measures to clarify the facts of the case, which should be able to answer a number of remaining questions regarding the sinking of the Cheonan warship.

Third, bo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media should not manipulate this case to further their vested interests in the upcoming election, which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welfare of the Korean people. The government and the majority party should explain why it was necessary to prematurely release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s well as to also announce reckless military countermeasures. In addition, we urge the government to immediately stop abusing its immense political and legal powers in order to pressure the voters who only raise rational questions about the government's report and actions.

We appeal to you!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ook place without our intentions, but we should be responsible to clarify the real cause and seek ways to resolve this problem in an appropriate way. It is directly related to our future democracy and peace. It is time to call upon your wisdom and courage to achieve peace.

At 3pm, on May 29, let us show our will to uncover the truth and accomplish real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tarting today, each night, let's begin to light up candles for peace on the Peninsula.

On June 2, Election Day, we will judg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ountry and this period with a sense of civic duty and open up the future path toward democracy, co-existence, and peace for ourselves.

May 26, 2010

91 Civil Society Groups, 5 Opposition Parties, 104 Individuals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 평화통일범국민대회 대회사

시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0주년을 기념하고,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온 겨레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불어 닥친 중대한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인 민주, 상생, 평화를 향해 다시금 큰 걸음을 내딛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이 무엇입니까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불신과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연 역사적 선언입니다.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암운을 거두어 내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연 기념비요 이정표입니다. 거기에는 민족자주권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 민족공영의 원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해야 마땅한 북녘의 동포들, 해외의 동포들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6.15선언 1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의 공동행사가 불허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너져가던 분단 장벽은 더욱 높아졌고, 전쟁의 공포가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미움과 불신이 화해와 협력으로 열린 문을 걸어 잠그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남은 대결의 골기가 실성으로 이끄는 지혜의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함이 의문의 침몰을 당한 이래 이명박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한반도에 최악의 군사적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적인 몇 가지 조사작업도 마무라하지 않고, 이 민감한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 했습니다. 사건진상에 대한 억론과 의회의 불의와 합의도 왜 이루어지기 전까, 군사적 제재와 대결수단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군사적 대치가 심화되고, 세 차례의 교전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유지하던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6자회담과 북핵 폐기도 사실상 실종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6.15선언은 평화로운 시기를 위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위기를 맞을 때 전경으로 필요한 실권지침입니다. 6.15선언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6.15선언은 남과 북의 관계가 순풍에 돛단 듯 대끄리움대 합의된 것이 아닙니다. 1차 서해 교전이라는 비극을 딛고 성사된 합의가 바로 6.15선언이었습니다. 반세기를 이어온 대결과

갈등, 불신과 오해, 고통과 절박을 끝내기 위한 남북 북 주민들의 역사적인 선택, 생존을 위한 선택이 바로 6.15선언이었던 것입니다. 6.15선언 이후에도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선언 하나로 반세기 분단의 장벽이,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사라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남북 북은 6.15선언이 밝힌 저해의 빛을 따라, 성장하고 대화하고 협력하여 모든 내외의 난관을 극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 6.15선언과 10.4선언과 같은 한반도 위기 극복과 상생의 지침들이 모두 무시되고, 이념적 극단주의와 정치 군사적 대결주의가 그 지리를 대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天安함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남북 북 모두가 폐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질서의 형성을 주도하던 우리가 이제는 주변 강대국의 판단과 결정에 우리 운명을 내맡기야 하는 위치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국회의 합의과정, 관련 당사국의 충분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위험스런 대북 군사조치와 경제조치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한 역시 위협적인 연사와 극단적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합당한 긴상규명 절차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天安함 문제를 국제무대에서의 소모적 비방전의 소재로 삼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天安함 문제에만 대응되지 말고, 남북 인도주의 협력, 경제협력, 그리고 군사대결 조치 완화를 위한 건설적 대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天安함 사건 이전에 준비되고 있던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 한반도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책과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의 기틀이 다원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6.15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6.15선언의 길이야말로 상생의 길이고 번영의 길입니다. 화해와 협력의 길, 평화와 통일의 길은 가만 놓고 안가도 그만인 그런 길이 아니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겨레 생존의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언제 어디서 불신과 대결의 위기가 우리를 시험할지 모르는 길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6.15정신을 잊지 않는다면 헤쳐 나가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진심을 향한 용기, 명화를 향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6.15선언이 제시한 상생의 길, 화해와 협력의 길, 통일의 길을 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13일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공동성명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에 즈음하여·

오늘 남북 북, 해외의 온 겨레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일표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은 새대륙 아미오미 저속된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분리시키고 겨레의 앞길에 평화와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민족 최고의 통일선언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민족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안고하고도 즐거운 노력으로 대결시대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냈다.

남북 사이의 반목과 대결의 광복은 허물어지고 통일의 대동고기 만들어졌으며 삼천리광수장산 광명적곡에서 불신의 얼음이 타올랐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국민 그리고 종교인, 기업인, 문화인, 체육인 등 각계각층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 기량의 깊은 함에 걸었다.

그러나 오늘 6.15공동선언 이행은 연중반 위기를 겪고 있다. 민족대결 허기가 고조되고 6.15공동선언의 소중한 결실들이 위협받으면서, 이 분야에서 온갖의 긴장나 경쟁허기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우리 민족이 오늘 조성된 남북을 다성하고 대화를 주도하며 크고형으로 기금 축적한 길로는 다시 6.15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절친, 이행하는 때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해나가는 것이 6.15공동선언의 함의이다. 우리는 정세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길로 더욱 밀착져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평화가 있고서야 민족의 순결과 미래도 있고 통일이 증명될수도 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 이행에 역행하여 군사적 긴장과 동족 사이의 대립을 추구하는 그 어떤 행위로 단호히 격리시켜나갈 것이다.

올해의 6.15공동선언일표 10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지 못한 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부정하고 남남관계를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려 세운 동족대결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6.15공동선언 실천의 길에 더욱 힘차게 내진해나갈 것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일표 10주년 기념행사를 남과 북, 해외의 각 지역에서 성대히 진행하여 6.15시대를 고수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시대와 민족 앞에 지난 자기의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굳센 통일외지와 신념으로 파주통일과 민족대단합을 위한 겨레의 통일대국운동을 더욱 힘차게 추동해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민족자주선언, 반전평화선언, 민족대단결선언이다. 6.15는 정의이고 애국이며 통일이다. 6.15공동선언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은 그 무엇보다도 결코 멈춰 서을 수 없다.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해내외의 온 겨레가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6.15공동선언 단애 민족대단결 만세!

2011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추진위원회

참여연대의 정당한 활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참여연대가 6월 11일 유엔 인권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한함 정동 조사 결과의 의문점과 문제점을 담은 서한을 발송한 것을 두고, '미녀 사냥'을 방불케 하는 여론몰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이를 유도하고 부채질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정운찬 총리는 "조금이라도 애국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고,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외교노력을 지해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런 행동"이라고 했으며, 청와대의 박선규 대변인도 "도대체 이 시점에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할라", "제를 뿌리는 것", "뒤놓수를 맞은 격" 등 국언까지 동원하면서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을 냉비난하고 있다. 이에 보수 언론과 단체들까지 가세해 참여연대에 심각한 위협을 퍼붓고 있다. 이러한 '미녀 사냥'식 여론몰이에 대응하듯,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의 적용 가능성까지 인도하고 있다.

우리는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에 대한 위와 같은 언행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보수 언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배이성적이고 과한 대응과 억압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의 대응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이다.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은 이러한 민주주의 정신의 말현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이다. 결코 비난받거나 탄압받아야 할 일이 아니다.

둘째,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문점과 문제점은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궁금해하는 사안들로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 또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정부와 군은 오히려 안전한 사안에 대해 잦은 말 바꾸기와 거짓말, 지나친 비밀주의와 사전 확인이 있는 군 주도의 조사 실시, 국민과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 부족 등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정부가 참여연대 서한에 대해 과민반응을 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

셋째, 국내 시민단체가 유엔 등 국제기구를 상대로 정부와 다른 목소리는 내는 것은 국외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이다. 국내회의 많은 시민단체들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경제, 개발, 환경 등의 이슈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도 개별적·집단적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 대상에는 유엔 안보리도 예외가 아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과도하게

문제 삼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해온 정부의 가치 외교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을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넷째,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외교안보정책 영역에서 시민적 감시와 민주적 통제, 그리고 정확치 못한 활동은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다. 오히려 외교안보정책 실행시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라는 점에서 '추진체면'의 정신이 가장 잘 실현되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성급하고 과도한 대응이 북한과의 변방과 맞물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태로 촉발되었다는 "국가안보상의 중대 위기"에 시민사회가 더욱 큰 관심과 우려를 표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섯째, 참의원대의 서한 발송을 두고 '천북 행위', '이적 행위' 운운하는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참의원대는 북한의 인권과 핵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위협적인 언행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는 시민적·보편적 가치와 양심에 입각한 정당한 입장 표명이었다. 또한 북한이 참의원대의 문제제기를 이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북한의 판단에 달려 있다. 개방된 사회에서 모든 정보와 주장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이것이 무시위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는 결코 성숙한 민주국가로 보기 어렵다.

우리는 끝으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과거 냉전 독재시대도 되풀이려고 하는 MB 정부에의 강력한 경고한다. 많은 국민들이 6.2 선자를 통해 정부-여당의 '북공' 시도를 굳iment하게 심판했듯이, 외교정책에 이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이적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공안문제를 시도하는 것을 우리 시민사회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이치런 불필요하고 시대착오적인 논쟁과 대립을 종식하기 위해 국회 진상조사특별위의 조속한 적극적 활동을 촉구하면서, 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

2010년 6월 16일

시민평화포럼(공동대표: 이석태, 이용선, 정현택)

평화네트워크(대표: 정옥식)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상임대표: 조영희)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발송에 대한 마녀사냥의 탄압 중단과
친안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친안함 사고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의 적발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62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은 물론 충분한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에 준엄한 평가를 내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연의를 거부하고 선거 시기 내린 미덥지 못한 친안함 관련 정략기조를 감행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밝힌 바, 객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밝혀냈다는 입장은 동문구로 전락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두고 다양한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민과 국회의 합의와 공의를 가능케 할 신중한 검증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수한 시민들과 참여연대를 포함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정부가 친안함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많은 의문점을 남긴 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곧바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처사를 지적해왔다. 참여연대가 국제사회에 입장을 전달한 것도 그런 활동의 하나이다.

참여연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보낸 전자서한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친안함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등 정부의 주요 관련 기관들이 불고 일어나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국제 활동을 국익을 해치는 행위, 이적 행위, 국인으로서의 해서는 안될 행위로 몰아붙이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이 단체의 정체성과 활동가들의 사상까지 거론하면서 제의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일부 보수단체가 검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 의뢰하는 등 뒷장구를 치고 있다. 여기에 여당도 나서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식의 살벌한 성명으로 시민단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시민단체(NGO)는 국제사회의 뚜렷한 행위자이며, 인류보편의 과제 실현을 위해 벌이는 국제연대활동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더욱 장려할 일이다. 시민단체가 안보리를 상대로 자국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유엔에서 존중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유엔 NGO활동의 본령지도 같은 것이다. 유엔기구들은 통상 정부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NGO들과 파트너십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참여연대의 국제 활동을 마치 유폐된 사람들의 상식 밖의 활동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묘사하는 등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의 활동이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 역시 외교정책은 정권이나 정부 관료가 직접하는 분야라는 고부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다원주의 사회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함에서 연유한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의 억압, 일부 보수언론과 단체가 시민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반영한 시민단체의 시한봉송을 이르기 광범적으로 공격하고 심지어 관의가량으로 대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도 국적과도 어울리지 않다. 더 도리어 정부의 합의를 결여 위한한 장경희교가 조국할 잘못에 직면하지 않을 어찌는 시를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자극하려는 것이 아닌의 하는 의; 실용 차이나가니 충분하다. 국선정인 조사과 후선한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가 한다고 형제하고, 한가로 광화문 국립할 장경희교가 조국봉송은 할의 할아 할아할이 있는 것은 냉전시대의 온 수 있었던 선각주의적 담정지 다한 것이다. 수리는 할라지 기전을 특살하고 일제와 단결한다. 강조하는 이러한 시대적으로 정당의 순응작 할라이 추모도 없음을 할아할다.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명 살림과 소용,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민주주의와 정화를 실현하는 국내의 시민들의 마음을 무시하는 정권이 내치와 외교에 모두 실패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다. 우리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합리적견 비판에 대한 대대시지 단말이 건장한 시민의 자유를 단말하고 이 나라를 안보국가 정화국기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경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민의를 받들어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고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앞대 정회 귀국을 단행해야 한다. 이러한 반민주적 작태를 반성 없이 지속할 경우, 더 큰 국민의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다불어 진실의 추구라는 본령을 벗어나 국익과 안보를 알세의 권지한 문제제기에 책임을 일하는데 머뭇이 없는 일부 보수 언론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정화를 향한 노력에 대한 냉권의 침주선동과 식칼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이 인보와 국익의 논리를 방과해야, 천안함 사건의 무명한 신상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건전한 비판자의 역할을 맡기하고 정략적 보도태도를 답습할 경우, 이미 저저가는 미디어로서의 평명을 영인히 잃고 말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모든 사회의 논란의 배경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천안함 사건의 참

상과 책임소재 규명에서 부여된 소임을 게을리 해온 국회에 광대한 책임이 있다. 여야 정당은 조속히 친인합 비상 규명과 정부 조사활동 검증을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및 대외정책을 고정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진지한 재검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10년 6월 16일

4월형명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학술본부, 6월민주포럼, 80년해직업인연합회, 815평화행동단, 김남욱분, 강동서민연대, 강동총불,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주연맹운동시민연합, 경기여성연대,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광주순수연맹, 광주전남인연, 광주광역시21, 광주KYC(광주)한국청년연합, 광주지적권, 공인연선대, 광주노조,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나눔총, 녹색교동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대구참여연대, 대구KYC(한국청년연합 대구지부), 대한한어사자시민연대, 대한총신민연, 내국노조, 참여연대사무총장부총재연회, 대한총신총재이사자시민연대, 대한KYC(한국청년연합 서울지부), 문화연대, 미디어기독교연, 미디어수출사주권인연, 미디어연, 미디어활동, 민족회합운동연합, 민주개혁을위한민주시민연대, 민주자유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실천연맹, 민주총합시민회, 민주총합시민연맹, 민주총합대한민국순회회, 대각노회, 대한지역인문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부산인연, 부산한어사자시민연대, 부천총합운동시민모임, 불교인문과체육회, 비정규교수노조, 사주금융연맹, 내사화연대, 새인문포럼, 새마을연, 새마을인문포럼,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서울지부), 성남한어사자시민연대, 성남KYC(한국청년연합 성남지부), 성동-광진시민연대, 송파시민연대, 송파총불, 수주총합이대시강모임, 수원KYC(한국청년연합 수원지부), 순천한어사자시민연대, 순천KYC(한국청년연합 순천지부),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시민연맹연, 실천총합연국노조회, 아고로여성연대, 아로오모프라인,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미자주권국민생태연, 언론인권련, 언론이키기원주모임, 예코포드, 여성연맹, 여수시민회, 여수살기, 황성기1구혁신정치대학회, 용산시민연대, 우리마담,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은평전합회, 안연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터넷언론포럼포크, 지구평화총합인문학회, 장애인정보보호사,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전일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부정노동조합, 전국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목회자같이평화협회, 전국미디어운동포럼포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회합성노동조합연맹, 전국신문편집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국인연,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기민단체협의회총합회,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 제주참여운동연대, 주병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주YMCA, 종교개혁을위한진주학부모회, 참연총합시민모임, 참여연대, 참여자를위한총합시민연대, 참여자의전복시민연대, 참여자의공산시민연대, 통일YMCA, 강원KYC(한국청년연합 강원지부), 청년유니온, 제주총합청년연합, 제주KYC(한국청년연합 제주지부), 촛불1누가, 송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남한어사자지적운동연대, 송북여성민주회, 송북한어사자시민연대, 평해한어사자시민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물연대는여성회, 평화민족문화연구소, 평화와참여로가는인문연대, 평화인문연구소, 평화KYC(한국청년연합 포항지부), 동두길,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한국기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어상단체연합, 한국어성민주회, 한국어성인권회, 한국언론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청년연합회, 한국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하는시민행동, 생활하는언론소미자연대, 화성KYC(한국청년연합 화성지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흡사단교육운동본부, KYC(한국청년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회유위원회, 구축노동자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평지구회총동, 등성에서인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가)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선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의학문제저항하는인문운동연대, 사회정보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기+), 외국인노동운동연합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상당, 장애인연합회(바라봄), 장애인권익옹호연구소, 장애인권사실추진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평화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민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전국교회인권연대, 한국계이민연대재단연구소, 한국DRC, 한국성직소수자문화인문연대, 한국HIV/AIDS관련인연대KONCS

제923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성명서

1992년 1월 8일 지금 이곳에서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는 오늘로 벌써 923회를 맞습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조선여성들을 '위안부'로서 강제 연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일에도, 자신들이 일인 만행의 전모를 밝히는 일에도 늘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배상하는 문제에도 언제나 치졸한 모습으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의 8차 정기회의에서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각국의 목소리를 담은 보고서가 정식 채택되었지만, 일본정부는 보고서 채택을 앞둔 모두 발언에서 여전히 범칙 책임을 회피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구촌의 이웃들과 협력적으로 살아가야 할 다음세대들에게 전쟁으로 인한 인권유린과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명확히 감수성을 키워가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임에도 일본정부는 여전히 신사참배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 있으며, 심각한 역사왜곡을 부끄러움 없이 일삼고 있으니 참으로 안일하고 부도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본정부가 부정하고 싶어도 세상의 눈과 귀를 열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품고 실천하는 지구촌 가족들의 관심을 향한 의침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되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년, 4.19혁명 50년, 5.18 항쟁 30년이 됩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고 살아오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평화를 가슴에 품을 수 있었고, 평화의 소리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한일병합100년을 맞아, 일본 정부는 식민주의와 대평양전쟁의 과오를 인정하고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진정한 화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희생자에게 사죄와 배상을 하고, 일본사회에서 재일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피식민지 주민의 고통과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일본정부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전쟁을 막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형성을 위한

실천에 더욱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권도, 인권도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고, 청와대에 간혀 동아시아의 평화와 역사의 진실에 당당히 맞서기를 바라는 민심을 잊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올바른 인권의식으로, 당당한 역사인식으로 정의의 역사쓰기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의 과거책임을 외고직인 수사로 덮어 두지 말고, 이제라도 배상과 사죄를 분명히 요구하는 당당한 정부와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부와 대통령을 원합니다.

현재 전쟁형인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인이 되신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금 이곳에 계신 할머니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일본정부가 진실으로 사죄하고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전쟁이 없는 평화와 상생의 동북아시아, 피해자들의 인권이 회복되는 사회, 역사의 진실이 기록되는 세상,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위해 뜻을 같이 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 우리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인권유린을 합리화하는 정책을 반대한다!
- 일본정부는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사죄와 법적인 배상을 실시하라!
-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적극 참여하라!

2010. 6. 23.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의 참가자 일동

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for a Peaceful Solution to the Cheonan Incident in Support of Korean Civil Society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in Northeast Asia is shocked at the incident of sinking of the South Korean Cheonan warship on March 26, 2010 and expresses its condolences to all casualties and their families. It is also gravely concerned by the current developments leading to increased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s in the region. We call for a peaceful solution. We encourage all parties concerned to make further efforts for a full investigation and for dialogue, thoroughly considering all aspects of the incident in a transparent process engaging civil society. We urge all parties not to commit any acts that could escalate tensions, which would be counter-productive for this purpose.

Many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have provided valuable input into this process, including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internationally. Notably, the South Korean NGO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ubmitted a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n June 11, 2010, presenting rational questions over the report by the Joint Civilian-Military Investigation Group (JIG), comprised of experts from ROK agencies joined by the US, Australia, UK and Sweden, as announced on May 20, 2010.2 Questions raised by different groups are related particularly to technical aspects of the explosion, as well as the transparency and timing of the JIG report.

In such unstable circumstances, civil society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constructive dialogue and assisting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peaceful resolution of the issue. However, we are concerned that the ROK Government is not only reluctant to pay sufficient respect to such civil society efforts, but is even acting to obstruct such contributions. We urge the Government to shift this policy, in hopes that joint efforts by civil society, governments and the United Nations be made to overcome remnant Cold War issues, build mutual confidence, and promote peace and disarmament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We thereby make the following appeals:

1. More thorough investigations both by the ROK Government and internationally are needed. They should carefully examine the unanswered questions pointed out by Chinese and Russian reviews, and by academic and civil society analyses, including issues relating to technical aspects of the explosion. Furthermore, information on the

findings and processes of the investigation should be made fully available to the public. This would be of great importance in reaching a broad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understanding of the incident.

2. All parties must commit to a peaceful resolution through dialogue. The United Nation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imilar case regarding the grounding of a submarin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1996.³ We reiterate the principle that was affirmed in this 1996 case, that both Koreas and all other parties concerned should settle disputes by peaceful means through dialogue, so that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strengthened. The UN is encouraged to again play a similar constructive facilitating role. To this end, we stress in particular the responsibility of the DPRK to cooperate with the UN for clarification and accountability. The ROK Government should withdraw its series of military measures and economic sanctions against the DPRK, which in turn should refrain from provocations and hostile language.

3. Civil society's input and engagement are crucial to a peaceful resolution. Many civil society groups in the ROK have issued reports and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situation. Amongst these was IPSD, which sent a report to the UN Security Council on June 11, 2010. In their report, IPSD called on the UNSC to make a fair and rational decision by carefully considering all of the grounds and evidences. All these contributions should be fully paid respect to and carefully considered.

4. The ROK Government is urged to shift its policy - from confrontation to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We are seriously concerned that ROK Government does not sufficiently respect civil society's contribution, including that of IPSD, but instead accuses and even threatens them with prosecution. We are troubled to see that those accusations and threats are being made in concert with the mass media, along with an outdated Cold-War discourse of "defaming the country" and "benefiting the enemy" - as constituting a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fully observed.

site design imagesparkle.com

June 24, 2010

Initial Signatories (GPPAC Focal Points and affiliates, in alphabetical order):

CHO Younghee, Women Making Peace, Seoul
Vadim GAPONENKO, Maritime State University, Vladivostok
HUANG Haoming, China Association for NGO Cooperation, Beijing
HSU Szu-chien,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Academia Sinica, Taipei
Meri JOYCE,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Liaison Officer, Tokyo
JUNG Cyung-Lan, Women Making Peace, Seoul
KAWASAKI Akira, Peace Boat, Tokyo
KIMIJIMA Akihiko, Ritsumeikan University, Kyoto
LEE Jae Young, Korea Anabaptist Center/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Seoul
LEE Narae, Peace Boat US, New York
Dennis LIN, Soochow University, Taipei
Kathy R. MATSUI, HAP Global Campaign for Peace Education, Tokyo
MYAGMAR Dovchin, Blue Banner, Ulaanbaatar
NIU Qiang, Chinese People's Association for Peace and Disarmament, Beijing
SASAMOTO Jun, Japan International Lawyers Solidarity Association (JALISA), Tokyo
SEO Jung Ki, Korea Anabaptist Center/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Seoul
SHEN Dingli, Fudan University, Shanghai
YOSHIOKA Tatsuya,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Initiator / Peace Boat, Tokyo

Endorsers (in alphabetical order):

PARK Yeon Seo, Korea Anabaptist Center/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Seoul
Karen SPICHER, Korea Anabaptist Center/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Seoul

1. GPPAC is a global civil society-led network which seeks to build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peacebuilding and the prevention of violent conflict, and has been active in Northeast Asia since 2003. www.gppac.net

2. See PSPD's Stance on the Final Investigation Report on the Cheonan <http://blog.peoplepower21.org/English/20903>

3. See UN Press Release SC/6279 and UNSC Presidential Statement S/PRST/1996/42, October 15, 1996

이모보·함안보 활동가들의 안전 귀환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4대강 공사 즉각 중단하라!

4대강 사업 중단과 검증기구를 요구하며 이모보와 함안보에 올라간 5명의 활동가들이 하늘 위에서 20일째를 맞고 있다. 심씨 40도를 넘나드는 최악의 폭염과 폭우, 나뭇 속에서 생사를 건 투쟁을 벌인 이들은, 이제 4호 태풍 '민투'가 한반도 남쪽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태풍의 위협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답이 없이 수수방관이다. 오히려 8·8 재가를 통해 '4대강 속도권'의 의지를 더욱 몰태우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장관을 유인하고, '4대강 전도사'를 자임하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내정과 김대호 전 경남지사를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등 4대강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은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였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장악 운영을 바꾸라는 준엄한 심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자체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구조차 묵살하며 막무가내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를 보다못한 5명의 활동가가 자연과 자신의 생명을 하나로 묶고 '강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며 고공 농성이라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토론에 나서기どころ, 농성중인 활동가들에게 식량과 물을 제한해서 올려 보내고, 식벽에는 석치라이프를 끼고 매카본 사이렌을 울리는 등 거대 국가권력이 일개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하는 정도의 처참하고 약탈한 행태들이었다.

자신을 내어놓고라도 자연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절기가 이 정부에는 풀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모보와 함안보 활동가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태풍의 위협 속에서 자신의 복수를 내놓고 저항하고 있는 '당신의 국민들'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한다. 우리 여성들은 국론을 분열하고 지면을 죽이고 지각공통체를 파괴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 사업 검증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3. 한나라당은 아당이 시민사회, 종교계와 합의해서 제안한 '국회 검증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2010년 8월 10일

한국여성당연립합 정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총) /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여성상을어는전주교여성공동체 새우리 성매매문제 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주회 평화중심드레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인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전화 한국여성경제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참여하는 추모모임 학교교육위한국학부모회

6.15민족공동위원회 8.15공동호소문

<세대의 온 거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지 65년,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단된 지로써 이 연 65년이 되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를 강탈하고 우리 민족에게 해야 할 수 없는 잔혹한 불행의 시련을 가져온 일본은 본 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은커녕 역사왜곡과 독도 강탈 기도 등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일제의 잔기뢰가 수백여기 폭립부탄을 뿌루지 않았던 불일행영들의 해국의 일대 침투를 그리고도 이어져나 오날의 민족 분열을 내뿜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적 국영을 연어나기 여과 분대의 온 거레에게 다음스 온이 호소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과 단장자수원전 평화헌약, 통일선언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민족 복고의 통일통일인 남북공동선언을 아합하는 그 강에는 다른 길만 있다 남북공동선언이 이땅에 평화수 있고, 농일로 있으며, 민족의 두드려 공동선언도 있다

온 거레가 말해 일거나 남북공동선언을 철저의 이행하고 실현해나가자! 자들 이 말라게는 관속적 긴장이 고조되고 나날이 전쟁 위험이 자중되고 있다. 전쟁으로 얻을 것은 결국 적 제국뿐이다. 이 땅 위에서 전쟁 위험을 가중시키는 일체의 군사의 적대당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6.15가 열어놓은 국제적층의 대항과 접촉, 단합의 길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접촉과 대항까지 중단하고서야 어찌 평화와 통일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종교적과 여성계는 물론이요, 인본, 문화계승, 학술개문 비롯,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 부문단체 들 간의 접촉과 대항, 연대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자!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더욱 강화하고,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국제가층의 연대와 단합의 중심에 확고히 세워나가자!

올해는 일제의 <한일합병조약> 날조 100년, <윤사5조약> 날조 105년이 되는 해이다. 그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저친 역사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거레는 일본이 지난 세기 동안 우리 민족에게 저친 역사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영웅들의 지주독립정신은 오늘 우리 모두의 심장 속에 자주적 평화통일의 디운 피로 새겨져 고동되고 있다.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한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애국선열들의 뜻을 이어 민족의 분단을 끝장내고 기원코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기치 아래 분열의 8.15를 평화와 통일의 8.15로 바꾸어내자.

2010년 8월 15일

6.15공동선언선봉 남측지위회 6.15공동선언선봉 북측지위회 6.15공동선언선봉 해외지위회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합동 전쟁연습 중단하라!

태평 65년,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한반도 일대는 전쟁이후 최고의 평정한 군사적 긴장상태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한안함 침몰사건을 빌미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8월, 동해와 서해에서 한미합동 전쟁연습을 했다. 핵전쟁포함 포지워싱턴호와 F-22 전투기 등 최첨단 무기가 동원되었고 동해와 서해의 폐북단에서 대대적으로 진성되었다.

이에 대해 북은 8월 3일 '올라지 대응노선'을 공표했고 서해의 전쟁연습이 끝난 8월 9일 120여척의 배안보를 냈사였다. 중국 또한 이번 훈련이 자신들에 대한 무력도발이라고 간주하고 러시아와 함께 3단계 합동전쟁연습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눈에는 눈, 코에는 코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이나 전쟁연습에는 전쟁연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8월 16일부터 3만여명의 미군과 우리나라의 단군군 40여만명이 참여하는 '올지프리덤가디언'전쟁연습이 진행되고 여기에 더해 9월에는 대대적인 한미합동 전쟁연습이 또다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고 전쟁의 영향력은 반복주의, 군사주의 등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참상으로 민족의 존립과제가 위협받을 것이다.

이 나라의 몇몇 정치인과 군인들의 짓이 아니며 지구나 화제가 되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민중들이 나라의 주인이며 그들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더하여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라는 것이 전쟁의 역사에서 생생하게 증명되고 있는 바, 우리 여성단체는 절대로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결렬한 심정으로 한국과 미국정부에 전쟁을 부르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덧붙여,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세계의 양심 있는 여성과 민중들이 모여 콜롬비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기지화를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미국은 남미의 경우, 콜롬비아에 자국의 군사기지를 급속하게 건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고자 무력시위를 하고 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 한국여성단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과 군사적 팽창 주의를 단호히 반대하며 전 세계 민중과 함께 전쟁반대, 평화수호를 위해 굳게 연대할 것이다.

-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합동 전쟁연습 중단하라!
- 세계 평화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 반대한다!
- 콜롬비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군사기지 건설을 반대한다!
- 한국여성이 단결하여 '전쟁반대, 평화수호'의 세계여성 연대투쟁에 앞장서자!

2010년 8월 17일

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경기)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구리여성회 남해여성회 대구여성당장 다함께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동여성위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여성회 부산새시대여성회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사천여성회 서울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지여성회 안성여성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의정부우미여성회 이천여성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연합 전국여성연대 지구불살리는청주여성모임 진주여성회 창원여성회 창원희망여성회 원안여성회 청주여성회 (준) 통일여성회 광덕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남여성회 함안여성회 함원여성회 화성여성회

무의미한 4대강공사.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

- 죽음의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국민이 나서야 할 때 -
- 국민의 뜻을 거부한 무도한 권력을 심판하기 위한 직접행동 풀림 -

<고통의 절반, 남은 고통>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권'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불통 정권'이 취임한 지 이제 무려 2년 만이 흘렀다. 그리고 또다시 국민의 엄청난 고통이 예상되는 '무소불위 정권'의 군림 기간이 아직도 2년 만이 남아있다.

지난 2년 반의 세월동안 우리 사회는 엄청난 역사적 후퇴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충분히 경험하였다. 그 시간동안 한반도 평화의 초석은 무리 채 뒤흔들며, 친리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중오의 정치를 경험하였고, 사사로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언론미디어가 장악되는 사태를 경험하였고, 서민은 생각지도 못하는 위장전입과 투기 등 범법행위를 태연히 저지른 무도한 자들이 '송구스럽게도' 총리와 장관으로 임명되는 황당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운하의 악몽으로부터 이어진 4대강 삼질 공사의 통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듯이 어명박 정권 임기 절반의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은 '불통정권'으로 인해 하루도 평온한 날을 맞이한 적 없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군림 기간 동안 '어명박 정권의 독단과 독선의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 새긴에서는 걱정부터 앞서고 있다.

<토전시대의 시험관, 4대강 사업>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어명박 정부의 남은 군림 기간이 가능한지, 가능해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일인지 질문하고 행동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것의 리트머스는 바로 4대강 삼질 공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사실 그동안 합리적 권력의 속성을 거부한 어명박 정부를 개탄하면서도, 4대강 공사 종단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국민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탄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표출하였다.

운하반대전국고수도임을 필두로 한 학계의 시업 타당성 부재를 지적하는 다양한 학술활동, 양심적인 법조인의 동물 속에 진행되는 사법소송, 농민과 관료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축구 및 공사 공단을 축조하는 단축투쟁과 수당 농성, 종교계론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및 생명 존엄성 회복을 위한 전국 각지의 기도회, 우리 강의 생명성을 노래한 문화예술제와 환동, 북회 및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경의 및 대안 제시, 환경단체들의 4대강 공사 현장 모니터링 및 공사 문제점 지적 활동, 사회 원로들의 공사 감정 중단을 통한 합리적 대안 도출 촉구 활동, 국민과 함께 진정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내각로 집회 등이 수없이 진행되었다. 끝까지!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환경운동가들의 목소리를 잘 고종능성이 된 답을 넘어섰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여명파 정부는 약 80%의 시민이 국민의 공사 중단 요구를 강력히 무시하고 있다. 우리의 공사 감회도가 유일한 자원이었던 약 30% 권력도를 앞당기기 위해 수기 중 공사를 강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한 1%의 사업 타당성도 찾을 수 없는 이 땅에서 살생을 그대로 지시하며, 하는가? 정말 이 삼강오륜을 위수하는 것이 출질은가?

<시대의 정연정명을 따라가>

이제 4대강 사업에는 시대세대를 위한 교육과 국민의 공공의료, 사회복지, 지방재정 등의 소중한 국가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든 유수스님의 초선공약에서부터 정을 도회도 갈아가는 전국 각지 농민과 노동자와 및 평명의 싸움이 저러있으며, 민심이 천분임을 알려줄 민주주의 공군이 새려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죽음의 살점을 멈추어야 한다. 이것은 시대의 정연정명이다.

우리는 그간 각각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명파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이제 4대강 사업을 정반 끝내야할 시점이 도래하였음을 밝힌다. 더 이상의 추위의 삼정은 무의미하며, 지금 이 시점에서 즉시 중단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막중한 시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혼란은 소중한 사회적 역량의 낭비에 불과하다.

우리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활동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총회시켜 나가고, 각계의 위임을 결집시켜 당국의 4대강 사업을 끝내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거리농성에서부터 대규모 집회까지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이 사업을 끝내기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필요하다면 C20기간에 이르기까지 '4대강사업 중단' 및 '국회간중 특위 구성', '공동조사단 구성'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할 것이며,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반대하! 국민의 의지와 민심은 분동정권에 편입되지 못할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민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명파 정권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 오늘부터 거리농성에 돌입하! 내일 촛불문화제! 내주 토요일 정회하던 김중 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 9월 11일 10일

명이 모이는 대당모 대중 집회(인간피켓팅)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더 이상 무도한 집단체에 우리의 미래인 국도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국토생태계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직접행동으로 무의미한 참전을 임하여야 합니다. 나라 이름으로, 주민의 이름으로, 서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4대강공사 중단하라'를 분명히 외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권력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4대강 공사가 즉각 중단되기를 바라는 국민자 함께 하는 범국민대회를 9월 11일(토) 직운광장에서 개최합니다. 국민의 뜻에 맞서 4대강사업을 강행하는 어법적 정권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9월 한 달간 이명박 정권의 4대강 공사를 끝장내겠다는 의지로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해 매일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9월 11일 서울광장에서 만났시다. 바로 그것이 국민의 힘으로 4대강사업을 끝장내는 역사의 장이 될 것입니다.

2010. 8. 25

4대강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종교, 노동, 학계, 정당 등 제단체

한일합병 100년에 즈음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 호소문

올래는 한일합병 100년이 되는 해이다. 온 겨레에게 고통과 회성을 안겨준 일본의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놓여있고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갈등 속에서 100년 전 나라를 빼앗긴 경험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하다.

특히 원안할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대결도 더욱 가열되고 있다. 정치적 위기를 협상과 소통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주변 강대국에 의존해 서로를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 강대국에 의해 식민지와 분단을 경험한 남북은 언제까지 원지 한 장 보낼 수 없고 가족을 만날 수도 없는 이 비정상적인 세력을 지속할 것인가?

우리 여성들은 지금까지 식민지, 분단, 전쟁, 냉전을 경험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민주주의를 성취해 여성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정점은 평화가 생명이며 또한 가장 기본적인 인류의 임원이자 보편적 인간권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오늘의 한반도 현실을 통탄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 및 동북아 각국 정부 및 각국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지난 시기 일본이 저지른 식민주의와 패권양면성의 과오를 인정하고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진정한 화해'를 추구하기를 희망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아픈 기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국제적 무리분쟁에서 여전히 여성폭력은 반복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함께 전쟁 상태에서 체계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는 중단되어야 한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법률적 책임을 지어하며,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생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며, 일본 교과서에 군 '위안부'체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루 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

2. 우리는 남북을 포괄해 동북아 각국이 군사적 역지력에 기반을 둔 안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과 화해협력에 근거한 공동안보와 포괄안보를 추구하기를 촉구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평화적 수단이 아닌 군사력 증대와 경제체제를 통한 "힘에 의한 정치"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어떠한 국가도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일방적 신뢰만으로 안보를 성취할 수 없다. 항구적 평화는 상호불신에 입각한 군비경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생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남북 사이에 상호의존성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적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안보는 남북이 서로를 위협해서 얻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더불어 성취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공동안보와 포괄적인 안보개념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3. 여성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다.

천안함 사태는 한반도에서 휴전체제의 불안정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현재 한반도를 규정하고 있는 휴전체제를 전쟁의 위험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 상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재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한반도의 근본적 정상화가 불가능하며, 북미관계 정상화 없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미 사이에 적대관계 해소와 실질적인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이고 평화적인 해결과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선(先)비핵화 원칙'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6자회담, 남북회담 및 북미회담 등 정치적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4. 남한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할한다.

우리는 통일부의 주장대로 "준비 없이 맞이하는 통일은 시행착오와 혼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 준비를 위해 남북 사회·경제·문화 협력은 확대되어야 한다. 남북 사이에 대립이 격화될수록 남북 민간이 만나 상호 신뢰를 쌓아 한반도 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후 남북 민간의 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한적이며 선택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률은 2008년 18.1%를 기록한 데 이어 2009년에는 8.6%로 떨어졌다. 여성의 남북교류 경우, 정부가 승인을 유보해 2009년 남북 여성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수 없었다. 또한 2010년 4월 일본서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여성의 만남조차 불허하였다. 통일을 준비하겠다고 통일서

신선을 주장하기 전에 기존에 남북 사이에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남북 사이에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를 희망한다. 특히 북한 수해와 식량난을 고려하여 인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5. 동북아시아 각국 정부는 평화형성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라.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할 남북회담과 6자회담과 같은 평화의 인보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은 평화형성과정에 기회, 자원, 존중의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평화·외교·국방 분야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느 한 성에 의한 권과리이고 불균등한 흐름을 막고 남성과 여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하기 위해 모든 정책의 수준과 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남녀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affirmative action)이 필요하며, 정부는 정책결정태이론과 외교·통일·국방정책 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30% 이상 보장해야 한다. 이는 여성들도 자여성 무력갈등과 분쟁상황에서 희생자가 아닌 갈등해결과 평화형성자, 화해지도자 평화과정에서 여성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의 정신을 구현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 동북아 여성과 인대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증진할 것이다. 국경을 초월한 동북아시아 여성 연대는 긍정적인 공동의 기여를 받아 남과 북, 동북아 각국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정책결정의 차이를 뛰어 넘어 새로운 정책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여성 연대를 통해 동북아시아 분단을 넘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평화의 상상(희망)의 문화를 창출하는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2010년 8월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6.15민족공동위원회 경술국치 100년 동등성명

일제의 <한일합병조약> 날조 100년을 맞으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0년 8월 29일 일본제국주의는 자신의 군사력을 앞세워 <한일합병조약>을 합법인양 날조하여 발표한 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한 국가적 범죄행위였다.

일제의 강압적인 <을시5조약>과 <합일합병조약> 날조로 인해 우리 민족은 역사상 다시없을 참혹한 불행과 고통, 재난을 겪었다.

40년에 걸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통치 기간 동안 100여만 명이 넘는 우리 겨레가 일제의 총칼 아래 희생당하였고, 840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강제 연행되어 노예노동을 강요당하였으며, 20만 명의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무참히 유린되었다. 또한 일제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역사문화유적과 자원을 파괴 약탈하였고, 심지어 우리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 하였다.

이러한 야수같은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날까지도 용당한 사죄와 배상 대신,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우리 민족에 대한 최대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본 당국은 과거 식민 통치의 죄상자이며 그 후손들인 재일동포들을 벌려, 도덕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지는 대신 박해와 차별, 인권유린, 적시적인 위협과 폭행 등 온갖 정치적 탄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재일동포 탄압은 그 자체로서 우리 민족에 대한 심각한 최대와 모독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일제의 <한일합병조약> 날조 100년을 맞아 해내의 온 겨레와 함께 다짐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첫째, 일본은 우리 민족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배,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고통에 대해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두번째로 먼저 일본은 <을시5조약> <한일합병조약> 등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통치를 강요한 각종 <조약>들이 원천 무효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해야 한다. 또한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강제징병과 집단학살 등 온갖 야수적 만행을 비롯하여 한 세기 이상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며, 약탈한 문화유산들을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둘째, 일본은 재일동포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정치적 탄압, 박해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은 재일동포 탄압, 동포학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하며,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존권, 민족교육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 당국의 정치적 탄압과 박해에 반대하고 민족적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재일동포들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셋째, 일본은 식민지 역사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군국주의 부활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은 식민지배의 강압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과거사를 미화하는 각종 역사 왜곡행위의 중단은 물론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를 통해 진정한 과거사를 단정하는 후속조치들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일본은 독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인권에 더 이상 장애물로 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민족적 존엄을 지키며 일본의 역사적 범죄행위를 청산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운동에 해외의의 온 겨레가 굳게 손잡고 함께 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2010년 8월 29일

6.15광둥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광둥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광둥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10.4 남북정상선언 발표 3주년 남북해외공동결의문(전문)

오늘 우리는 10.4남북정상선언 발표 3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2000년의 역사적인 6월 상봉에 이어 7년만인 2007년에 또 다시 남북정상들의 정상상봉이 이루어지고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된 것은 6.15시대의 전진을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킨 민족적 사변이었다.

10.4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권력과 대화를 활성화하고 선언 이행을 위한 공동의 추진기구들을 구성하여, 분단 이후 알뜰히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활짝 열어 놓았다. 선언 발표 이후 불과 몇 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일어난 놀라운 성과들은 10.4선언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인시켜주었으며, 합의된 남북선언들을 이행해 나가는 길에 평화와 통일, 민족공동의 번영이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입증해 주었다.

우리는 역사적인 10.4선언 발표 3주년을 맞아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는 온 겨레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현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향을 밝힌 통일의 장전이며 10.4 선언은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을 위한 실천방도들을 포괄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다.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키고 실천하여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각지각층의 광대와 접촉을 활성화하고 다방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이익을 철저히 지켜내며,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전횡에는 결연히 맞서나갈 것이다.

2. 우리는 동족 사이의 대결을 반대하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10.4선언은 남북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한 평화선언이다.

우리는 민족적 합의를 초래하는 그 어떤 형태의 무력증강과 전쟁행동도 반대하며,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민족 내부에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는 모든 적대행위들을 배격하며, 이 땅에서 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3.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국내외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의 단합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남북 공동선언은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를 하나로 묶어세우는 단결의 기치이며, 6.15년 북공동위원회는 민족단합 실현을 위한 통일 운동의 구심체이다. 우리는 남북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국내외의 모든 통일세력들과 관계 손잡고 있던 이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남과 북, 해외의 각 지역위원회들을 더욱 확대하고 단합을 강화하며 계층별, 부문별, 지역별 단체간 사이의 다양한 연대활동과 공동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6.15년 북 공동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계속 높여 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적 화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직함이며 의지이다. 모두 다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통일운동에 함께 나서자!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풍요를 얻어나가자!

2010년 10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차 회담 참가국에 드리는 제안서

2010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참가 여성들은 친안함 사대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긴장, 군사적 갈등과 전쟁의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이 한반도 내부와 주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전쟁도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상호신뢰와 함께 화해, 경제적 협력, 사회문화교류, 그리고 외교적 정상화를 통해서 평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강력히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남북 사이에 인도적 지원과 대화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노력이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대화로 발전할 것을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60년, 6·15 공동선언 채택 10년,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 채택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한반도가 평화의 발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6자회담 참가국 정부에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1. 각국 정부가 북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을 지원하기 위한 식량과 의약품 등 포함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평화에 실현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2. 경제재해와 군사훈련보다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기를 요청합니다. 남북회담, 북미회담, 북일회담 및 6자회담은 가능한 빨리 재개되어야 합니다. 당사국들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로인 구성 및 북미-북일 정상화를 포함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전협정의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갈등해결, 평화유지, 평화형성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촉구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이행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작성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다자협상에서 주요 협상대표, 워킹그룹 참가자와 관찰자(observer)로서 여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6자회담을 위한 여성협의회를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 북미, 북일 대화를 포함한 공식적인 양자회담 및 6자회담을 지원하는 여성들의 트랙 II (Track II) 활동과 여성 NGO 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노력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자원을 제공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의 관점이 통합되기를 촉구합니다.
5. 각국이 수행하는 북한 지원 모든 프로그램에 자력이 잘 갖추어진 여성 지원 중원을 요청합니다. 경영자와 프로그램 직원에 여성이 최소 30%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력을 모색할 것이며, 관련 국가에서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고 행동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0년 10월 6일

2010 동북아 여성평화회의의 참가자

Northeast Asian Women's Peace Conference

October 6th, 2010

Recommendations : to the Six-Party-Talks Countries

Women at the 2010 Northeast Asian Women's Peace Conference express our concern with the reappearing tensions, military conflicts and dangers of war in Northeast Asia, especially after the Cheonan Incident. Military exercises have increased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We oppose any kind of war and other threatening actions. We strongly believe that with mutual trust we can achieve peace through reconciliation, economic cooperation,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and diplomatic normalization.

We applaud the recen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efforts to promote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We hope such activity will not cease but develop into dialogue to build sustainable peace. This year i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the 10th anniversary of 6.25 Joint Declaration, and the 10th anniversary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We call on the Six-Party-Talks countries to increase efforts to make the Korean Peninsula a home of peace.

We recommend to the Six-Party-Talks countries:

1. Increase humanitarian assistance including food and medical supplies to North Korea, which will assist towards the realization of peace.
2. Promote dialogue and cooperation instead of economic sanctions and military exercises. Resume inter-Korean, US-North Korean, Japan-North Korean dialogues and the Six-Party-Talks as soon as possible. Implement the agreement in the 9.19 Joint Communique, including pursuing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malizing the US-North Korean and Japan-North Korean relations. Take concrete steps to move on from the Armistice Agreement to a Peace Agreement for the Korean Peninsula.
3.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which calls for the full participation of women at all levels in peace processes, peacekeeping and peace building. Adopt National Action Plans and include women as chief negotiators, representatives of working groups, and observers in the process of multi-national negotiations in Northeast Asia.
4. Establish a Women's Council for the Six-Party Talk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women's Track II efforts and women NGOs' activities in supporting the official process of bilateral talks, including inter-Korean, US-North Korean, Japan-North Korean dialogues, and the Six-Party-Talks. Resource women's efforts and incorporate their views in decision-making.
5. Reinforce the number of qualified female personnel in all assistance programs for North Korea, so that at least 30 percent of the management and program staff are women.

We will seek ways to cooperate with the Six-Party-Talks countries to buil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We recommend the respective countries to accept and act on our proposal.

Participants of the 2010 Northeast Asian Women's Peace Conference

Organizing Committee: peacejmg@gmail.com

※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평화물만드는여성회의 의견서를 1차, 2차 여성가족부에 전달하였다. 이 의견서는 10월 13일 여성가족부에 전달한 내용이다.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화물만드는여성회 2차 의견서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성평등과 여성의 지위발전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력을 주지하며, 본단 및 본강 지역이라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평화물만드는여성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개요

1-1 법안 명칭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명칭을 '여성정책기본법'으로 한 것에 대해 반대하며, '성평등기본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1-2 개정안에 나온 일부 조의 제목을 변경한다.

제2장 제6절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간 협력>을 제2장 제6절 <평화·통일·국제협력과 여성 참여 증진>으로 변경한다.

1-3 개정안에 나온 일부 조의 순서를 변경하고 일부 조·호·항을 추가한다.

- 44조 여성친화도시를 제4절(성평등 촉진시책)로 옮긴다.
- 45조 (국제협력)에 항을 추가한다.
- 46조(평화·통일과정의 여성참여 증진)는 44조로 변경하고 항을 추가한다.
- 48조와 50조에 각각 호를 추가한다.

2. 제언과 이유

2-1 법안 명칭

2-1-1 법안 명칭 변경

| | |
|----------------|--------------|
| 여성정책기본법시안(개정안) | 수정안 (평화여성회안) |
| 여성정책기본법 | 성평등기본법 |

·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명칭을 '여성정책기본법'으로 한 것에 대해 반대하며, '성평등기본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1-2 법안 명칭 변경에 대한 이유

- 1)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성주류화'로 이전되면서 단순히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넘어 넘어 공히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과 의무를 함께 나누는 실질적 평등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정책기본

법'이라는 명칭은 지나치게 소극적 개념이다.

- 2) 여성발전기본법은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법으로서 성격적 한질짓는 것이 아니었음. 이에 비해 제정안은 그 범위를 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존 법안보다 후회하였다.
- 3) '성평등기본법'으로 법안 명칭을 바꾼다면 법 제정의 취지와 지향성, 범정부적 과제라는 측면이 보다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음. 법을 통해 국가가 적극적인 현실을 파악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때 '성평등기본법'으로 법안 명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제2장제6절 제목 변경

1-2-1 절의 제목 변경

| | |
|--------------------------------------|-----------------------|
| 여성발전기본법안(개정안) 제2장제6절 | 수정안(성화여성회안) 제2장제6절 |
|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간 협력 강화·통일·국제협력과 여성참여 촉진 | |

-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발전은 평화·안보·성장증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절을 인정하고 갈등 해결과 평화정책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제2장 6절의 제목을 <평화·통일·국제협력과 여성 참여 증진>으로 변경하고 다른 조항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1-2-2 제2장 6절 제목 변경에 대한 이유

- 한반도의 특수성과 국제사회에서 평화, 안보에 대한 여성의 영향력 확대를 고려하여 <평화·통일·국제협력과 여성 참여 증진>으로 제목이 변경되어야 하며 조항도 확대되어야 한다.

① 남북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관계를 정경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합의한 상황에서 통일 문제를 제2장 제5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 협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1)

② 한반도의 특수성과 평화, 통일, 국제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증가 수용

한반도는 분단 및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쟁지역으로 평화정착과 통일 실현 과정에서 여성참여는 성평등과 여성의 발전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여성과 남성은 전쟁, 분단,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서로 다른 충격과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평화, 통일, 국방, 외교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아주 낮다. 분쟁을 겪은 타국의 경험을 볼 때 갈등 해결 이후 여성의 요구를 대변하는 여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평화 형성(peace building)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았기 때문에 갈등 해결이후에도 여성의 요구를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③ 국제적 기준에 부합

-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유엔 4차 여성세계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에서 “무장 갈등을 포함한 여타 갈등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한 관심영역(Critical Areas of Concern)2)으로 정했다. 또한 전략 목표와 행동에는 “여성과 무장 갈등”(Strategic Objectives and Action E)이 포함되어 있다3) 북경행동강령의 ‘여성과 무력갈등’에서는 국가안보와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인권, 민주주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보호하는 환경은 여성의 지위향상에 중요한 요인이며, 평화는 남녀 간의 평등 및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0년 10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4)를 채택하여 모든 갈등 관리, 해결, 예방 활동과 전략에 걸쳐 포스텍티브를 의무화할 것을 합의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는 전쟁이 여성에게 주는 영향, 여성이 갈등해결과 지속가능한 평화에 하는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안전보장이사회 최초의 결의안이다. 결의안에서는 갈등의 예방, 관리, 해결을 위한 국가, 지역, 국제기구와 메커니즘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대표성 증가를 확보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결의안 1325를 이행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 행동계획5)을 작성하여 유엔에 보고하고 있으며, 안보리 결의안 1325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UN 조차, 국제단체, 회원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가능한 지표(indicators)6)를 제출하였다.
- 2010년 현재 18개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를 실행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채택하였다.7) 2004년 코피 아난은 유엔 사무총장 1325 이행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이 1325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회원국들이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여 이를 집행하고 있다.

③ 한국정부는 UN안보리 결의안 1325호를 지지하는 국가모임 (Friends of 1325)에 소속되었으며, 2003-2007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10대 핵심정책과제에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2.3. 조 변경 및 항 추가

2.3-1. 조 변경

| | |
|-----------------|--|
| 여성정책기본법 시안(개정안) | 수정, 신설안 (명화여성화안) |
| 제44조(여성친화도시) | 제44조를 제43절(성평등 촉진시책)에 포함시킨다. |
| 제45조(국제협력) | ①-③항은 유지하고 ⑤항 신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갈등 예방·해결·관리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에 국내외 여성단체와 협력한다. |

| | |
|--|--|
| <p>제46조(평화·통일과정의 여성참여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평화문화 정책과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 <p>44조(평화·통일과정의 여성참여 증진)로 변경하고 항을 내용을 변경하며 추가한다.</p> <p>① 국가는 평화정책·갈등해결·예방에 여성참여와 성인지적 접근법의 구현을 위한 “여성·평화·통일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 정책과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와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남북한 여성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평화·통일 관련 여성단체와 협의한다.</p> |
|--|--|

제44조(여성인력도약)는 6절에 들어가 있는 것 보다는 제4절(성평등 촉진시책)로 옮기고, 46조(평화·통일과정의 여성참여 증진)를 44조(평화·통일과정의 여성참여 증진)로 변경한다. 제2장 6절의 제목을 <평화·통일·국제협력과 여성 참여 증진>으로 변경한 결과, 46조(평화·통일과정의 여성참여 증진)는 제45조(국제협력)의 앞 조로 변경한다.

2-3-2 항 신설 이유

1) 제45조(국제협력)에서 항 신설

국제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평등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성평등 관련 조약 이행 및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 (평화·통일과정의 여성참여 증진)에서 항 신설

· 평화통일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항목을 신설한다.

① ①항은 국제사회에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인보리결의안 1325”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평화정책·갈등해결·예방·관리에 여성참여와 성인지적 접근법의 구현을 위한 “여성·평화·통일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평화 정책과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와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시책과 여성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에 대한 항목을 별개로 둔다.

③ 남북 사이에 편지 문제와 여성권리와 관련된 관련 여성 집단들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 인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기 위해 관련 여성단체들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2-4 호 추가

2-4-1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48조 아래와 같이 호를 추가한다.

| 여성정책기본법 시안(개정안) | 수정, 신설 안 (평화여성회안) |
|--|---|
| 제4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아래항목을 호에 추가한다. - 평화·통일사업의 여성참여 증진 지원 |

- 이유: 현재 평화통일관련 협상과정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율은 낮다. 향후 남북관계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실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협상과정에서 여성참여가 증진되는 것을 고려하여 여성참여 증진에 대한 기금 지원은 포함되어야 한다.

2-4-2 제5장 여성정책관련 시설 및 여성단체지원 등 제50조에 아래와 같이 호를 추가한다.

| 여성정책기본법 시안 (개정안) | 수정, 신설 안 (평화여성회안) |
|--------------------|--|
| 50조(한국여성평등원의 설립 등) | ①항 밑에 아래 호를 추가한다. - 평화·통일사업의 여성 활동 증진 및 지원 사업 |

- 이유: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에서 권리 문제와 여성권리와 관련하여 분쟁지역의 여성 및 국제 여성 집단들과 협의하는 것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1991년 12월 13일에 남북 사이에 채택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 · · 남북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였다.
- <http://www.un.org/womenwatch/daw/beijing/platform/plat1.htm#concern>
- <http://www.un.org/womenwatch/daw/beijing/platform/index.html>
- http://www.un.org/events/res_1325e.pdf
- S/2005/636, S/2007/567
- S/2010/173 예방(prevention),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구호와 회복(relief & recovery)이라는 4가지 주제로 지표를 작성하였다.
- Denmark (2005), Norway (2006), Sweden (2006), UK (2006), Austria (2007), Switzerland (2007), The Netherlands (2007), Spain (2008), Iceland (2008), Côte D'Ivoire (2008), Uganda (2008), Finland (2008), Liberia (2009), Belgium (2009), Portugal (2009), Chile (2009), Sierra Leone (2009), Philippines (2010)

<여성·평화단체 PSI 군사훈련 반대성명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PSI 훈련을 반대한다

한국이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인 '동방의 노예 10(Eastern Endeavor 10)'이 10월 13일부터 이틀간 부산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며 특히 해상 피난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공동작전을 통해 직접 참가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참관 형식으로 참여한다.

우리는 이번 PSI 훈련이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기본적으로 범세계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전략으로서 PSI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논란이 없다. 국제법이 연안국 영해에서 보장하고 있는 외국 선박의 이른바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 침해 가능성, 공해에서의 피폭선박 차단 권리행사 문제, 차단 대상의 차별적 선정과 도관에 따른 배상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방부는 "훈련 시나리오가 북한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는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침전형정에 대한 부정"이라며 남북의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며, 중국은 한-미가 원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해역에서 벌였던 연합훈련을 두고도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성격이라며 경계심을 표출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주관으로 한국해역에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중국의 의구심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 자위대의 참가는 지극히 우려스럽다. 대량양 전쟁에 대한 철저한 반성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은 일본의 군사훈련 참가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번 훈련은 더 나아가 한-미-일 대 북한-중국의 대결구도를 굳히고 동아시아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PSI 훈련을 중단하는 한국 및 미국 정부, 그리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군사적 봉쇄와 제재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조치를

당장 자제하고, 6자회담을 비롯한 정치군사협상을 재개하기를 촉구한다.

- 동북아시아 각국 정부가 군사훈련과 군사력 강화를 통해 역내 긴장과 대립을 고조시키지 않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과 공동안보를 추구하기를 촉구한다.
- 군사훈련과 군사력 강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군사비를 상호경제협력, 인력 개발, 교육, 복지에 투자하기를 촉구한다.
- 평화와 안보 영역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촉구한다.

우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와 상생의 동북아시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 군사비로 소모되고 있는 자원을 생존과 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평화세력과 협력할 것이다.

2010년 10월 14일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 정부의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연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이행'에 관련한 질의서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000년 10월 31일 유연 안전보장이사회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5/RES/1325)를 채택했습니다. 올해는 유연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10주년을 맞아 국제적으로 1325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향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1325는 유연 안보리 최초의 여성과 평화에 관한 결의안으로서 갈등해결, 평화과정에 여성의 등용한 참여와 완전한 거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엔은 유엔차원에서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유엔과 회원 국가들의 1325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indicators)(5/2010/173)를 작성하였습니다. 2004년 유엔 사무총장 1325 이행 보고서에서 코피 아난은 유엔 회원국이 1325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여 2010년 10월 현재 유엔 회원국 25개국은 국가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작성하여 1325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Friends of 1325에 속해 UN 안보리 결의안 1325를 지지하였습니다. 결의안 채택을 지지했던 한국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1325 이행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아보고자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음 질의내용은 유연 안전보장이사회 1325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제시한 지표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5/2010/173) 이 지표는 한국정부가 지지한 유연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89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5/RES/1889) 이 지표는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참여(participation), 구호와 회복(relief & recovery)이라는 4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10월 12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0년도 성 격차 지수(GGI)'는 한국 여성의 지위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계 134개국에서 10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G20 정상회담을 주최하는 한국의 남녀 격차 실태는 우리 여성들을 정약케 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 분야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남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각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2010년 11월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질문 1. 1325 이행 국가행동계획에 대하여

- Friends of 1325에 소속되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를 지지했던 한국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 질문의 근거

- 2004년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2010년 10월 현재 유엔 회원국 23개국에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31일 현재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한 23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Denmark (2005), Norway (2006), Sweden (2006), United Kingdom (2006), Austria (2007), Switzerland (2007), The Netherlands (2007), Spain (2008), Iceland (2008), Côte D'Ivoire (2007), Uganda (2008), Finland (2008), Liberia (2009), Belgium (2009), Portugal (2009), Chile (2009), Sierra Leone (2009), Philippine (2010), Canada(2010), Rwanda (2010), Bosnia-Herzegovina(2010),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2010), Nepal(2010)

○ 질문 2.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의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활동 강화에 대하여

평화, 안보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할 것을 요청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이행을 위해서는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정부 여러 부처의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 1325와 관련된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의 전략과 계획은 있습니까?

- 현재 여성가족부가 1325의 이행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활동을 강화할 전략과 계획은 있습니까?

- 정부 부처 안에 성인지적 관점을 확산하는 데 주도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1325의 이행을 조정, 감독, 보고할 계획은 있습니까?

○ 질문 3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하여

1991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대한민국은 유엔의 요청에 따라 1993년 최초로 소말리아에 공병대대를 파견한 이래 파견한 이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현재 해외 파병된 한국군은 총 14개국 17개 지역 1,196명 을 파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외 파병된 군인 중 유엔평화유지군의 숫자는 얼마입니까?

- 유엔 평화유지군 중 여성 군인의 숫자와 비율은 얼마입니까?

- 한국군이 현지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현지에서 여성과 여아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는 없는지요?

- 과별하기 전에 여성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질문의 근거

- 이 질문은 1325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유엔이 제시한 지표 (5/2010/173)의 4가지 범주 중 예방(Prevention)에 속한 지표에 따른 질문입니다. 예방에 속한 지표들은 모든 분쟁 예방 활동과 전략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고 효과적인 성인지적인 조기 경고 기제와 제도 개발, 여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입니다. 이 지표들은 갈등예방과 여성과 여아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안보리 결의안 1325의 제11, 14, 17, 18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 질문은 구체적으로 “지표2, 유엔 평화유지군과 특별 정치 임무는 여성과 여아의 인권 위반에 대한 정보 보호정도”를 보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우리의 입장

우리는 평화유지활동과 전미물에는 평화유지활동군인의 숫자에 여성 승권을 확대하는 문제 또는 여성의 군인화가 아니라 평화 유지라는 지의 주선들에게 실제적인 긴급안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과별하기는 군인에게 성폭력과 여성인권유린에 대한 예방, 인식, 대응을 할 수 있는 센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미우회, 남녀 동등한 승진, 전미훈련이 끝날 때, 끝날 후 상황에서 여성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실리적 안보, 교육관련 여권, 능력 개발, 여성인권 증가 등으로 긍정적인 역할 모델과 여성 리더십을 가져와 평화유지 활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 질문 4. 평화협상에서 여성의 참여 수준에 대하여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협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협상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공식협상입니다. 이 협상과정에 공식적인 대표와 관찰자로서 여성 참여 비율은 얼마입니까?

㉣ 질문의 근거

- 이 질문은 1325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유엔이 제시한 지표 (5/2010/173)의 4가지 범주 중 참여(Participation)에 속한 지표에 따른 질문입니다. 참여에 속한 지표들은 모든 수준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정책 결정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의미 있는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국제적인 여성단체와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을 향상시키고 유엔에서 고위 직위에 여성을 지명하고 군대, 경찰, 민간인을 포함한 평화유지 활동에서 고위 직위에 여성을 지명할 것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참여 범주에 속한 지표들은 1325 이행과 관련하여 갈등의 예방, 관리, 해결에 관련된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과 여성의 이해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안보리 결의안 1325 paragraph 4-6, 8, 15, 16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평화협정을 합의하고 평화협정을 위해 여성들의 참여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이 질문은 구체적으로 "지표11 a 공식적인 평화협정에서 여성의 참여 수준", "지표11 b 평화협정의 시작과 말미에 공식적 참관자와 협의 자격을 가진 여성의 참가"를 포괄적으로 작성한 질문입니다.

◎ 우리의 입장

평화협정에서 여성 참여는 여성의 권리와 우리에 관한 이슈를 포함하고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협정의 내용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1325, 1820, 1888, 1889에서 평화과정의 모든 단계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비공식 평화과정에 참여했지만 공식적인 평화과정에 거의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992년 이후 공식적인 협상 대표의 10% 미만이고 평화협정 서명자의 2.1%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은 유엔이 지정한 평화 과정 내에 주요 조정자로서 경연도 없습니다. 평화과정과 협정은 변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이며 촉매입니다. 이 평화과정 초기에 완전한 개입이 여성의 권리와 욕구에 대한 인식 제본과 대응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여성이 참여함으로써 평화협정 내 남녀문제(젠더) 규정을 포함하고 분쟁 이후 정치, 경제, 법, 안보 구조에서 성평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화협정에서 여성의 이해를 포함하는 적절한 규정이나 주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평화협정과정에 참여가 갈등 이후에 정치과정, 다양한 조치, 메커니즘에 여성의 기본 욕구를 담아낼 수 있게 합니다. 냉전 이후 300개의 평화협정 중 18개가 성폭력, 젠더관련 촉매를 언급했습니다. 1991년에서 2001년 평화협정의 30%만이 평화협정에서 여성의 이해에 적절한 규정이나 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 질문 5. 안보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 수준에 대하여

- 국방, 통일, 외교, 경찰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정도는 얼마인가?
- 위 분야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직위에 있는 여성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 질문의 근거

- 이 질문은 1325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유엔이 제시한 지표 (S/2010/173)의 4가지 범주 중 보호(Protection)에 속한 지표에 따른 질문입니다. 보호는 여성과 여아의 인권, 물리적 정신적 건강, 복식, 경제인보급 보호하며,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력의 강화와

법률적 제도의 개혁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를 추구합니다. 이 지표는 여성과 여아의 인권 보호 및 신체적 안전, 건강과 경제적 안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지를 측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지표는 1325의 패러그래프 1, 7, 9, 11, 12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지표16. 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서 사법과 안보 부문에서 여성과 여아 수준"을 토대로 작성한 질문입니다.

○ 질문 6. 국가 전략계획에 성인지의 분석, 목표, 지표와 예산 통합문제에 대하여

- 한국 정부는 외교, 국방, 통일 관련 계획과 전략에 성인지적 예산 시행, 성인지적 메이 터 발표, 성인지적 목표 설정, 구체적인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표 22)

○ 질문 7. 젠더이슈에 관여하는 여성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 남북교류협력기금과 해외개발원조(ODA)의 사용에서 젠더이슈를 다루는 여성조직과 시민사회조직에 재정지원 현황은 어떠한가요? (지표 23)

- 북한지원과 해외원조지원에서 구호, 회복, 평화와 안보관련 프로그램에서 여성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현황은 어떠한가요? (지표 24)

- 구호와 회복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과 여아가 받는 이익의 숫자와 비율, 이익의 유형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지표25)

◎ 질문의 근거

- 질문 6과 7은 1325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유엔이 제시한 지표 (S/2010/173)의 4가지 범주 중 구호와 회복(Relief & Recovery)에 속한 지표에 따른 질문입니다. 카테고리 구호와 회복은 모든 구호와 회복 활동에서 구호지원 분배 기계와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촉진하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구호와 회복 분야에 나타나는 여성과 여아의 특별한 요구를 나타내기 위해 이 지표가 사용됩니다. 이 카테고리는 안보리 결의안 1325의 패러그래프 7, 9, 13, 17, 18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질문 6은 "지표22. 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서 전략계획프레임이 젠더 분석, 목표, 지표와 예산을 통합한 정도"를 토대로 작성한 질문입니다.

질문 7은 "지표23. 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서 젠더이슈에 관여하는 여성조직을 포함한 시민사회조직으로 예산 할당과 분배 비율", "지표 24. 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서 젠더와 관련한 구호, 회복, 평화와 안보 프로그램(gender sensitive relief, recovery, peace and security programmes)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의 할당액", "지표 25. 구호와 회복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과 여아가 받는 이익의 숫자와 비율, 이익의 유형"을 토대로 작성한 질문입니다.

※ 위 질문서에 대한 답변은 공화여성회 홈페이지 평화자본실 밑에 있는 기타자료실에 있습니다.

<헌법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성계 기자회견문>

독단적 운영으로 제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후퇴에 앞장서는 헌법질 위원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이 동반 사퇴한 후로부
터 일주일이 지났다. 두 상임위원들은 일기가 날았음에도 헌법질 위원장의 인권옹호와
독단적, 파행적 운영을 이유로 동반사퇴를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권위의 현현을
우려하며 지난 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헌법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하
였다. 위원회의 수장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함에도 헌법질 위원장은 지
금껏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다. 한국의 인권과 인권위의 앞날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만 보전하려는 헌법질 위원장의 편협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
다.

헌법질 위원장은 인권 문화인, 인권 감수성 제고, 위원장으로서의 자질 등의 논란 속에서
지난 해 8월 취임했다. 당시 헌법질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 노력하겠다' 고 했다. 취임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헌법질 위원장은 사회
적 약자들의 인권 문제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취임 초기 '아리도 여성 차별이
있느냐'고 말했던 헌법질 위원장의 인권의식은 위원장의 지평을 이룰까 했다.

제대로 된 인권의식 하에 그에 상응하는 인권정책과 인권 분야의 해원을 도출할 수 있다.
인권의회인 인권 문화에 대한 바른 시기와 부단한 성찰을 통해 제화되는 것이기에 인정
하나하나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인권위의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제대로 된 인권
의식을 지녀야 함에도 헌법질 위원장에게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도 보이지 않
는다.

헌법질 위원장은 독립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인권위에 대해 독립기구인지 행정부
소속 기관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밀 바꾸기만 일삼았다. PD수첩 사건, 박원순 변호사 병
예해산, 민간인 사살 사건 등을 부정시키고 윤상봉사 의견제출도 독단적으로 막았다. 인권
위가 어떻게 해야 할 역할은 과감히 눈 감아버린 채 '생활민족형 인간'에 집중하겠다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였다. 헌법질 위원장이 말한 '생활민족형 인간'은 무엇인가?
나태 불행하고 인해 고통 받는 여성들의 진정,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진정 등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여성 차별 사안들은 해결하지 않은 채

어떻게 '생활민학적 인권'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어느 누가 자신의 차별 문제를 인권 위에 팔릴 수 있겠는가.

현명철 위원장의 독단과 독재적 운영은 멈추지 않고 상임위원의 권한 축소, 위원장의 권한 강화를 담은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상정하며 결국 두 상임위원의 동반사퇴 사태까지 초래했다.

그간의 행보를 보았을 때 현명철 위원장의 인권의식은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었던 취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현명철 위원장은 반인권적인 행보와 독단적 운영을 통해 모두의 위원회가 아닌 자신만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인권위의 문제는 이제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현명철 위원장은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현명철 위원장이 사퇴하기 전까지 우리 여성은 각급의 인권위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위원장 자리 없음을 스스로 증명할 현명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2010.11.10

현명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성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인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서울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언니네트워크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여성동맹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통일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지평회 한국여성경제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G20 여성행동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 "G20, Listen To Women's Voices!"
G20대응 여성행동 공동성명서

"금융위기는 여성의 위기, 빈곤·차별 대책 없는 G20 반대한다"

한국정부가 위장국이 되는 제7차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합의와 실천을 유도한 채 '개발(development)' 의제를 제안하여 저소득국가를 위한 '성장중심(Growth-oriented) 개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국내의 시민 사회 단체들은 10월 12일 G20 고위급 개발 컨퍼런스와 15일 Civil Dialogue를 통해 G20 의제에 실질적 관심을 종합하라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G20 준비위원회는 'G20 의제에 전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복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빈곤의 여성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책임당사자인 G20 정상들은 이에 대한 책임과 문제해결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G20대응 여성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여성단체들은 실업률 이슈를 전자의 예제이고 있는 G20 정상회의의 금융위기 대응정책 및 성장중심 개발 논의에 반대하며, 빈곤과 차별 해소를 위한 G20 정상회의의 책임 있는 논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 고용·복지

빈곤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좋은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라!

세계 각국 정부가 실행한 경제위기 대응은 거시 경제 부양을 목표로 금융, 자동차, 건설 산업 등에 정부지원이 집중되었고, 실업대책 역시 산업의 선별분업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어 위기 해결 과정에서 여성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2009년 ILO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위기 직후, 실업한 남성 노동자의 회복이 여성보다 월등히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세계 여성 실업률은 7.4%인데 반해 남성은 7.0%로 조사되어 공식노동만 보더라도 여성 실업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여성 취업자감소율이 남성에 비해 3배가량 높게 나타났고, 이 중 대다수가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점·박업자였다.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여성,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우리사회 취약계층이라는 의미이다. G20 정상들은 금융위기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복지비용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직정한 임금과 노동안정성이 보장되는 '행복한' 여성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여 채우재조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여성의 무보수 돌봄노동 증가시키는 복지비용 축소 반대! 부가증세로 복지예산 확충하라!

G20 토론도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성장 친화적 재정건전화 방안은 각각 정부위 복지비용 축소,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감소시켜 여성의 부모수 돌봄노동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세계적일 통제조각 없는 여성 가사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국경을 넘나들고 있지만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여성의 69.4%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고 정규직이라도 남성보다 임금을 38% 적게 받으며, 양육 또는 가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수는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고용처 질 저하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젠코의 여성화' 현상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방식의 G20 재정적자 축소는 경제위기 비용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여성을 의제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서 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건무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다. 복지비용 축소가 아닌 부가증세를 통해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여성과 연금층의 고용의 질을 보장하라!

○ 빈곤 개발

금융거래제 도입에 신속히 합의하고, 금융거래세의 70%를 여성을 포함한 금융소외계층의 빈곤 퇴치와 역량강화에 할당하라!

G20 정상들은 '금융위기를 여성의 위기'로 인식하고, G20 의제에 성평등 이슈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G20 회원국은 여성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조속히 합의하고 효과적인 위기대응책으로서 금융거래세의 징세 및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금융거래세의 70%를 위기 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여성과 금융소외계층의 빈곤퇴치와 역량강화에 할당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과거 유엔과 OECD의 인간중심 지속가능한 원조 사례들이 입증하듯 여성에 대한 투자는 가장효과적인 빈곤완화 방안이며, 성평등 실현은 지속가능 성장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G20 개발 이슈에 성평등 목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유엔 새천년개발목표와 일치하라!

한국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G20 내의 개발 이슈는 '성장중심', '무역중심', 경제선진국의 경험을 후진국 경제에 일방적으로 주입하고자 하는 시대착오적인 접근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오만한 발상으로 유엔, OECD 등 국제기구들이 오랜 경험을 토대로 형성해온 '권력에 기반한(right-based)' 성인지적 개발원조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조속히 'G20 개발 이슈 패이퍼'를 보완·수정하여 젠디 이슈를 모든 영역에 통합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나아가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시너지를 내는 방식의 원조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 농업

여성농민을 빈곤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농업 정책을 폐기하라!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으로 식량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농업은 대규모 농식품 기업들에 의해 장악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농업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여성농민들의 피해는 심로 막대하다. 농업의 위기는 단순한 산업의 위기가 아니다. 농업위기는 식량뿐만 아니라 환경과 공동체 문화까지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에 맞서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종 다양성을 지키며 환경 친화적인 방향의 농업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농업과 환경을 살릴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농업은 여성농민이 담당해왔고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부흥해 왔다. G20 대응 여성행동은 여성농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G20 정상들에게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평화-인권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안보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하라!

세계 경제위기와 재정위기와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군비지출과 전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쟁은 대다수 민중의 생명과 성폭탄전을 파괴할 뿐 아니라, 보복적이고 잔인한 살육을 수반하기 때문에 여성과 여아의 인권을 심각하게 파괴한다. G20 정상들이 전쟁으로 세계 평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전쟁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외국군을 철군해야 한다. 또한 UN 안보리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에 따라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참여(participation), 구호와 회복(relief & recovery)의 전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여, 전쟁으로 인한 여성의 상처를 회복하고 인권을 향상시켜야 한다.

세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입국을 방해하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G20 여성행동은 연공과 차별을 강화시키는 G20의 필수스런 행태와 서울국제 민중회의를 위해 입국할 예정이었던 세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입국을 방해하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성인지적 협력체계

G20 의제에 성평등이슈 통합을 위한 성평등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설치하라!

G20은 경제위기 대응책에 경제위기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여성과 연공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충,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적투자 확대를 반드시 포함하고 경제위기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시화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와 위기대응책의 성인지예산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G20 의제에 성평등 이슈의 통합을 이끌어 내고 중장기 이행 전략 마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성평등 실무그룹(Gender Equality

Working Group) 활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위기로 인한 피해를 조사·예방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하라!

G20이 금융위기 대응시스템이라면 금융위기 과정에서 특별히 위험에 노출된 계층과 피해의 정도 및 패턴을 분석하고 그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대안적 시스템을 제시해야 한다. 폭물가파 인상으로 인한 이주민의 증가 및 기아의 증가, 기후 변화로 인한 여성의 무모수 활동노동의 증가 등 가속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통계 자료 확보 및 실태조사용 통해 대응 및 예방책을 추가 마련하라!

우리 <G20 대응 여성행동>은 반복되는 세계적 경제위기가 세계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혁과 대안 없이는 언젠가 재발할 심각한급담임을 경고한다. 세계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돌봄경제(Care Economy)를 배제하고 인격자원에 대한 부각 없는 단기적 경제성장은 사회적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다. G20 정상회의는 지금 당장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적 세계 경제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G20 대응 여성행동>에서 여성들이 리스크를 보다 다양한 방안의 귀류 기울어야 한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평등 관점이 접착된 G20의 금융위기 대응 및 재발 정책에 반대한다! 2. 빈곤여성의 경제사회적 대안정책을 위해 종손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안전망을 확충하라! 3. 여성의 무모수 활동노동 증가시키는 폭력적용 축소 반대! 부자중재로 복지예산 확충하라! 4. 금융거래에 도입에 신속히 합의하고, 금융거래세의 70%를 이상을 포함한 금융소비계층의 연금회차와 역강화세 할당하라! 5. G20 재발 이슈에 성평등 목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후연 새천년개발목표와 일치하라! 6. 여성농민을 빈곤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농업 정책을 재가하라! 7. 경제 불안을 중폭시키는 건설을 중단하고, 평화·안보 사안에 여성참여 확대하라! 8. 세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압력을 강제하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9. G20의 세계 성평등 실무그룹(Gender Equality Working Group) 설치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피해를 조사·예방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라! |
|---|

2010. 11. 10

G20 대응 여성행동 Gender Justice Action

기독여연회, 경기여성단체연합, 상대대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전국여성연대, 광복을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주회, 한국여성회전회, 한국여성경제인연합

Joint Statement for Gender Justice Action against the G20 Seoul Summit
November 10, 2010 Seoul

Korea has placed the issue of development at the top of the agenda for the 5th G20 Summit to be held in Seoul on 11- 12 September. Though civil groups at home and abroad officially delivered their message on 12th of October at the G20 High-level Development Conference and on 15th of October via the Civil Dialogue of integrating gender equal perspective into the G20 agenda, the G20 Preparation Committee stuck to its initial position saying, "Gender issue will not be considered as the G20 agenda".

Amid worsening situation of 'feminization of poverty' due to repeated occurrence of economic crisis, the G20 leaders-alleged main culprit of the world financial crisis-now turn a blind eye to responsibility and problem-solving effort for this matter. We, Gender Justice Action group, oppose the G20'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financial crisis and its growth centered development agenda and strongly urge the G20 Summit to have a discussion to solve poverty and discrimination problems in a responsible manner.

Work and Welfare

Create decent jobs and expand the social safety net for women's economic and social empowerment!

Measures taken by each nation responding to economic crisis have been concentrated on giving government aids to finance, automobile, construction industries for the purpose to stimulate macro economy and, for unemployment, carried out without consideration on gender division in labor of the industries, resulting in complete exclusion of women during the problem solving process. According to 2009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men laboers returned to a job much faster than women laboers right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2009, global unemployment rate was 7.4% for women comparing to 7.0% for men, and the difference in the official record indicates that women's employment recovers at a slow pace. In Korea, women's employment decrease rate is as three times higher as men's after the crisis, and most of them were employees in manufacturing and whole sale or retail food and lodging industries. This means that a direct hit from the economic crisis are taken by the vulnerable, including women, the small-scale businesspeople, and temporary workers. In this vein, the G20 Summit has not to cut down on welfare budget under the pretext of solving the financial crisis, but to create 'decent'

jobs for women that guarantee reasonable salary and labor security. It also should build further social safety net for those who have no or little income and cannot manage living even with debt restructuring.

We oppose a cut in welfare budget causing increase in women's unpaid care work!

Expand welfare benefits as raising tax on the rich!

It is highly probable that growth-friendly policy for sound fiscal having agreed on at the G20 Toronto Summit will lead to a cut in welfare benefits and social welfare service by each government, causing more women to provide free labor in the care service sector. Immeasurable and invisible home based women workers over the world are traveling across national borders for living without any social and legal protection. In the case of Korea, 69.4% of women work as a temporary employee with a low salary and women in permanent job positions earn 62% of monthly wage of men in the same position, while more and more women take full charge of child care or household. Lower quality in women's employment leads to lower quality in living, intensifying 'feminization of poverty'. The G20's budget deficit reduction in this manner shifts its responsibility on women and neglects the present conditions having no social safety net for women by excluding women in its dialogue. So, we insist that the G20 Summit should secure welfare budget not by reducing welfare benefits but by raising tax on the wealthy and guarantee decent work for women and the poor with expanded social service.

We urge the G20 Summit to reach promptly to an agreement on the introduction of financial transaction tax and to allocate 70% of the tax collected to anti-poverty and empowering programs for women and the financially marginalized.

The G20 Summit should consider 'a financial crisis as a women's crisis' and has to make an effort specifically and in earnest to integrate gender equality issue into its agenda. For this, we claim that the G20 membership nations be prompt to agree to adopt 'financial transaction tax', core issue as an effective and feasible measure, and draw up a plan for its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as an effective countermeasure to the crisis. We further demand that 70 % of the tax be used for anti-poverty and empowering programs for women and the financially marginalized, the most vulnerable groups upon the economic crisis. The investment to women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sures to relieve poverty as having confirmed in those cases in the UN's and the OECD's humanity-centered sustainable aids program, and gender equality is a critical el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overty and Development

The G20 Summit must include gender equality goals in its development framework and support the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e Korean government's growth-oriented and "Aid for Trade" development agenda is an outdated approach that forces less-developed nations to enact policies that are not in the best interest of their citizens. Claiming that the G20 nations will now 'teach' impoverished communities 'how to fish' is arrogant and ignores the rights-based and gender-responsive development principles, which are widely agreed-upon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OECD and UN. The Korean government must promptly revise its 'G20 Development Issue Paper' to mainstream gender equality issues as well as create synergies that result in the achievement of the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Abolish neoliberal agricultural policies, which impoverish women farmers

Crops are degenerated as the target of speculation through the neoliberal agricultural policies. Agricultural sectors are becoming more and more dominated by international corporations. Among farmers who are losing their means of living, women are the majority and the damage is immeasurable. The crisis of agriculture is not mere crisis of industry, but a crisis which might destroy environment, community and culture. Protection of food sovereignty and biodiversity from neoliberal agricultural policies and promoting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olicies is the solution. Traditionally,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e and food production has been conducted by women. This is the reason why women are acting against neoliberal agricultural policies. Gender Justice Action against G20 expresses solidarity toward the women farmers' struggle and urges G20 to immediately abolish its neoliberal agricultural policies.

Peace and Human Rights

The G20 should stop the wars worsening economic instability and increase women's seats in the peace negotiation table

The G20 member countries should stop wars and expanding military spending which are the major causes of the world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Not only war destroys

numerous lives and livelihoods of civilians, but also entails atrocious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nd deterioration of the rights of girl children. If the G20 leaders really want overcoming the current economic hardship, they should stop expanding military spending and political supports to the wars, and they should withdraw troops from foreign countries. Further, following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the G20 member countries should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in prevention, protection, relief, and recovery process of war and improve conditions of human rights of women.

Gender Mainstreaming

We urge the G20 to conduct a research to measure and prevent damages caused by the economic crisis and to set up a Working Group for gender equality.

The G20 Summit, if it is a system to handle the financial crisis, has to analyze the scope and pattern of damages on victims of the financial crisis in particular and suggest an effective model to prevent and counteract. It is urgent to prepare for preventive countermeasures through statistical data and research on actual conditions concerning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cluding increase in migration and starvation due to rise in the price of grains, and in women's free labor in care service due to climate change. The G20 Summit should incorporate in its countermeasures issues of expanding the public investment to create decent jobs, wider social safety net, and care service for the most affected groups like women and the poor, and conduct an analytical study on gender influence estimation for visualizing impact on women caused by the economic crisis and on gender sensitive budget responding to the crisis. To cope with these issues effectively, we strongly urge to set up a 'Gender Equality Working Group' in order to integrate gender equality issue into its agenda, map out middle and long term strategies to implement, and continue to conduct monitoring.

The repeated, global economic crisis requires an alternative to make fundamental reform in the world economy system. It will speed up a social crisis if the world moves in the direction of short-term economic growth that Care Economy, heavily conducted by women who make up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investment on human resources are neglected. The G20 Summit should start visioning the long-term alternative global economic system and listen to women's voices of wisdom collected at Gender Justice Action in Seoul.

The Financial Crisis is the Crisis of Women!

The G20 should summit measures against poverty and discrimination!

We oppose the G20's measures and development plan completely excluding gender-equal perspective.

The G20's plan for sound fiscal policy is based on measures of cutting down on welfare budget, and it will lead to increase in women's labor in care service for free and exacerbate poverty problem, thus resulting in shifting costs caused by the financial crisis to women.

The G20 Seoul Summit should include plans responding to the economic crisis to create better job for women, safer social net for the poor, and expanded public fund investment on care service.

The G20 Summit should be prompt to make an agreement on introducing financial transaction tax and 70% of the tax should be allocated to budget for antipoverty and empowering measures for women and the group alienated from the financial sector.

The G20 development agenda should include gender equality issue and be connected to the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order to generate a synergy effect.

The G20 should abolish neoliberal agricultural policies putting more women farmers into poverty.

The G20 should stop the wars worsening economic instability and increase women's seats in the peace negotiation table

For this, we strongly urge to establish a Gender Equality Working Group to prepare for strategies for integration of gender equality issue to the G20 Summit agenda and to monitor its implementation.

Gender Justice Action against the G20 Summit

Korea Association of Christian Women for Women Mirjung, Gyeong-gi Women's Associations United, National Solidarity for Solution for Sexual Trafficking,

Working Women Academy, National Solidarity of Women, Korea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Korean Womenlink, Korea Women Hotline, Korea Women Workers Association, Differently Abled Women United, Women Making Peace

-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여한 모든 '작'을 사퇴하며 -

현행철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자리로 돌아오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인권시민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명동성당에서 한겨울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부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공개 서신을 보냈고 국제 인권단체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인권기구가 정권의 영향이나, 정부의 입장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인권의 기준으로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결국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화 방침을 철회할 수 밖에 없었지만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23% 축소해버리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평생 '인권활동'의 근저에도 가본 적이 없었던 현행철 위원장을 임명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어버렸다.

현행철 위원장 취임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총테기구, 식물위원회, 고사(枯死)위원회 등으로 불리며 그 존재의 의미조차 희미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현행철 위원장은 취임 이후 독단적인 조직운영과 정부 논의 보기로 일관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무시시키고 있다.

홍산왕사 진압과정에 대해 재판부 피견포명을 취하는 안전을 외치는 전원위원회에서 "독자라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며 일방적으로 전원위원회를 폐회하였고, MBC PD수첩 제작권이 대한 정호언 권 농민수산물 장관의 명예훼손 건, 국정원이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건, 아간서위 위원법을 실패청구 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건 등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변칙적인 방식으로 부적을 시켜 왔다. 김보인인권특별전문의회의 위원장이 열상을 다쳐 참아왔던 <정보인권 특별보고서>는 이미 전원위원회에서 누더기 보고서로 전락시킨지 오래이다.

급기야 지난 11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문경진, 유남영 상임위원이 현행철 위원장의 독단적인 조직운영과 반인권적인 결정들에 반발하며 총만 사퇴하였고 이후 비상임위원인 조국 교수(서울대)가 국가인권위원회 피행 사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인권위원직을 사퇴하였다. 야당 국회의원 41인이 현행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현행철위원장 사퇴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에까지 이르렀다. 전직 국가인권위원 15인, 전직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18인이 현행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250여명의 법학교수와 변호사들, 여성단체들과 장애인단체들이 강력한 입장을 밝히며 현행철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주요 행사인 '사회권 심포지엄'의 발표가 10인 중 6인이 서면을 통해 심포지엄 불참 의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 했고 인권단체들을 오늘날 잃을 날까 국가인권위원회 절거 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유례없는 전국 660개 인권시민단체들이 현행철 위원장의 사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

했다.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현행헌법 위원장의 능력부족과 잘못을 지적하며 사퇴를 종용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격려하는 메일을 많이 받고 있다는 현행헌법 위원장의 변변한 얼굴을 보며 회가 나지 않았을 국민은 없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축을 받은 우리 언론·사문·상당 의원 57명은 이병덕 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위축되었고 현행헌법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국가인권기구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우리와 인다케유를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용례를 걸출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었다. 그러한 진심이 있었기에 두 상임위원의 동반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균형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해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현행헌법 위원장이 국정유사에서 그토록 변변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위장하는 것을 보았고, 여기에 화살이라도 역시 인권가는 전혀 자리가 없고 권관형 정치의 활동은 해왔던 김영태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하는 총리내외 독선을 확인했다. 김 내정자 또한 현행헌법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인권과 관련된 어떠한 경력이나 활동도 찾아볼 수 없는 인사이다. 오히려 전교조 병단을 공개한 조진희 의원의 헌법소원 소송 대리인을 맡았고, 정치적으로 민감적인 활동을 일삼고 있는 “뽕치주려수호국인연대”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등 인권과는 거리가 먼 인사이다. 좀 더 나아가기는커녕 더욱더 빠지나올 수 없는 늪으로 깊이 빠져 참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현 상황을 보면 참담한 마음이 들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야 더 이상 이병덕 정부의 인권정책이나 현행헌법 위헌을 제재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우리는 현행헌법 인권위원장의 추가 사퇴,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하여 인권위위 인원을 위한 총각은 인신시스템의 마넨, 국가인권위위와 독립성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좌측받은 모든 직을 통행 사퇴한다. 이번 우리들의 사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버리고 들을 돌리겠다는 것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성원을 탓에 세 구성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또, 현행헌법 위원장 사퇴와 국가인권위원 회기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 민하고 있는 다른 권투, 차부, 상당 위원님들을 생각하면 송구할 뿐이다. 우리는 이 분들의 관 단을 존중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켜내기 위해 계속 애써 주시기를 부탁한다.

겨우 1년 현행헌법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인권활동가들과 이 병의 양심들이 한결음씩 발전시켜 온 이 땅의 인권을 단박에 평토다으로 곤두박질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우리가 괴담으로 생허한 민주주의와 인권이 이토록 허약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 아프다.

현행헌법 위원장은 하루빨리 사퇴하여야 한다. 국제적인 명성을 저조하고,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거구는 물론, 이땅의 인권을 푸너드려고 있는 헌법질 위원장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또 헌법질 위원장 보다 모자라지 않은 반인권 발언과 어이없는 피견 표명을 일삼는 다른 인권위원들도 깊이 반성하고 자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기를 권고한다. 우리는 비록 국가인권위원회회가 우리에게 부여했던 우리의 역할을 내려놓고 떠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우리의 애경과 관심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제 헌법질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 자리로 돌아오라.

2010년 11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여한 모건·직을 사퇴하는 57인 일괄

정세자문위원 (15인) 고형일 (교수,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김의직 (한국여성민주회 상임대표), 박찬은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순길 (한국연출인수평가위원회 회장), 손 은 (현 헌법무 장관, 단국대학교 연구총화과 초빙교수, 한성대 (오일 어머니회 회 운영), 이대연 (경찰신문 논설위원), 이미경 (한성상회 이사장소 이사), 이수호 (전 권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기택 (평화교 상주전담교수 교수장), 손우근 (교수, 경주대학교 원동광교대학), 조흥식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동진 (교수,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성위원 (5인) 신상현 (화성문화연구원 소장), 이미경 (한국경제리상연구소 이사, 정치신문위원 총괄), 이용경 (변호사, 법무법인 한), 정순수 (한국 여성회 대표), 조영희 (평화환 만드는 여성회 대표)

행정실장위원 (1인) 이상희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정보인권특별위원회 (5인) 권진호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미경 (전보여회원의 전자 상인 활동가), 권종희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자유연전문위원 (12인) 김희진 (사단법인 민주인권연립회 사무국장), 김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그린), 오병주 (교수, 홍익대학교 법학과), 이상형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이재승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보훈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태훈 (군인복지회 소장), 임준영 (한국언론교육센터 소장), 정승환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영수 (교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최승민 (교수, 중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동언권전문위원 (1인) 최수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방)

외국언권전문위원 (5인) 김현이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찬은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자문위원 총괄), 박원영 (과국인이주노동자 인권옹호 위원 보임 대표), 소라리 (변호사, 공익변호사 그룹 총괄), 양태우 (전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 최순진 (변호사, 법무법인 이세)

장애차별전문위원 (3인) 박승윤 (변호사, 법무법인 소양), 배윤호 (사단법인 장애를 잃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사무총괄), 조문진 (교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고용차별전문위원 (2인) 박석운 (민주연동시민연합 공동대표), 이훈진 (변호사, 제철철동법률사무소)

성차별전문위원 (2인) 김도균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 진 (변호사, 법무법인 이한)

입장보조근 사업실사위원 (1인) 양영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제연대위원장)

전문상담위원 (12인)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 소장), 김 민 (노무사, 평등노동상담소), 김재용 (변호사, 김재용 법률사무소), 나현정 (임상심리사), 박현희 (노무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남), 송현순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이학진 (노무사, 이석진 공인노무사 사무소), 임태훈 (군인복지회 소장, 자유연전문위원 총괄), 유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겸), 최순진 (변호사, 법무법인 이세, 과국언권전문위원 총괄), 조영민 (임상심리 전문가), 최지일 (노무사, 노무법인 행정 입진지사)

남북 화해와 평화의 디딤돌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도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어 왔고, 급기야 군사적 충돌까지 있었습니다. 남북간 대화가 중단되고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각종 경협사업들이 축소, 중단되면서 슬픈 기업들은 물론이고 고성, 강원도 앞대의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남북 화해와 신뢰 회복을 위해 금강산 관광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은 남북 국민들이 부담 없이 복된 땅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 통일 제협상 역할을 해 왔습니다. 바닷길과 땅길로 분단선을 넘나들며 200만 명 이상의 남북 사람들이 금강산과 복된 사람들을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고를 활성화는 고사하고, '경관 붕괴를 공공연하게 저변하면서 복을 대화의 상대로 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박으로는 결코 평화가 오지 않으며 관계가 좋아질 수도 없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 토대 위에서, 공통점을 찾고 서로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관계 개선, 평화 민영의 유일한 길입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가 취한 5.24 조치 이래 6개월간 민간교류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남북관계를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의 진실 규명이 남북관계 정상화와 병행하여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길을 다시 여는 것은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절실한 일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됨에 따라, 남측 관련 기업 및 강원 지역 손실이 1조 8천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관광 사업이 가져 왔을 분단비용 감소,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그 손실이 더 클 것은 분명합니다. 평화, 신뢰 회복과 같은 중요한 토대가 훼손되고 있는 것도 매우 뼈아픈 일입니다.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강산 관광은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초기에 관광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한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문제는 지난 해 8월 원대아산 현정은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 회담에서 사실상 정부 요구 대부분이 이미 수용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강산 일대의 정부 시설 압수 문제 역시 이번 이산가족 상봉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남북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륙 압박 수단으로 금강산 관광 중단을 연계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은 남북관계만을 손상시킬 뿐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비핵화와 실질적 성과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관련 협의의 문턱을 지나치게 높이지 말고, 관광 재개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의 지난 역사가 말하듯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라, 남과 북이 우리 안의 분단선을 지워가며 함께 만들어 가는 화해와 신뢰의 디딤돌입니다.

분단과 대립의 오랜 장벽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과 북, 어느 사회도 순조롭게 발전해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일관되고 꾸준한 화해, 협력 실천으로 남북간 신뢰를 다지고 평화, 통일의를 시대를 역류해 열어 나가야 합니다.

'정권 붕괴 정국'을 중단하고, 남북이 그동안 함께 약속했던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에 함께 나섭시다.

비록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짧고도 소박하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처럼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밝히고 향여서 앞으로 교류의 큰 길을 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2010년 11월 2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북지국가외교보대통합석연회의, 다음Cafe '다시가자 금강산'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시국선언

이명박 정부 이래 남북관계는 나날이 악화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이산가족 상봉의 성사 등 약간의 변화 조짐이 보이기는 있으나,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달 사태 이후, 그리고 정부의 5.24조치 이후 이미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북한의 사과와 책임과 처벌 없이 남북관계 발전도 없다'는 일관적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입장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민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 스스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자기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이지 '북한 일부를 통한 정권 자존심 해소'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제 지난날 식대의 책임과 진상 규명을 남북관계 발전과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선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구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정책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6자회담 재개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고 있으며, 미국도 하루 빨리 지난날 국면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결 국면으로 넘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 개월 이내에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관계의 악화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세와 현실을 냉엄하게 직시하고, 지금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선순환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한 당사자로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실현하는 절실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그 이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온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정부의 주축되는 '남북공동선언 부정'이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이 부정되면서 남과 북은 신뢰와 상호 협력은 보장하는 어떠한 근거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상호 불신과 대립단 낄만을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은 공동선언의 약속들을 지키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둘째, 남북관계의 전환을 위해 과감하게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나서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등장 이래 쌓여온 남과 북 사이의 갈등은 개별적인 현안관련 접촉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연지연 관계조건을 일색수기보다는 핵심문제 타결을 위한 최고위급 차원의 대담하고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이 필요합니다. 결국 후반기를 넘어서는 지금의 시

이들 중저연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책임있는 합의와 합의 후유리도 볼 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남북관계 전환을 위하여 급박한 선봉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급박한완강사업은 남북교류의 고루보이지, 평화와 협력의 상징입니다. 급박한 선봉이 중단됨에 따라, 남북 관련 사업 및 정부 지원 중단에 따른 1조 8천억 이상의 손실이 있습니다. 정부와 관영사의 조건으로 제기된 시차와 선진적인 보상문제 등은 지난 해 8월 현대아산 원정은 최장가 결정일 위원장 회담에서 사실상 대부분이 이미 수용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이유를 내세우지 않고 조속한 급박선봉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는 합니다.

넷째, 정부 지원의 대폭 늘 지원을 재개해야 합니다.

대북 쌀 지원은 일방적인 '과제가 아닙니다. 대북 쌀 지원은 별다른 부담에 내뿜은 우리 농민들을 살리고, 아울러 시장 부흥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돕는 상로, '한-한'의 대표적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의 시장 안보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대북 쌀 지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쌀 지원도 적극 승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30만 톤 규모의 대북 쌀 지원을 조속히 재개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년도 평화로 통일여도 다른 당사자인 민간의 남북교류에 전인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교류는 남북관계 발전의 또 다른 동요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시대 이후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편안한 시대 이전에도 이미 이 경우 해외 민간교류는 개별기업 상대였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의 외교 주체로 인정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5.24조치 이후 6개월이나 지난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간교류 복원을 계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으로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전면적인 해산을 촉구합니다.

이념과 정부리 등장 이래 계속되어온 '북한 붕괴 일변도의 정적이 최하의 남북관계를 하기에 온 안 본,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전면적 해산이 불가피 합니다.

오늘의 이 서국선언은 남북관계의 후회와 민주주의의 후회기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는 현상을 불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담은 것입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빠른 조치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할 것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민주당, 연평도농민, 국민참여당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여성단체 논평>

어떤 이유로든 전쟁은 인된다.
무력충돌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라!

11월 23일 우리는, 북한군이 1시간가량 서해 해안포 기지에서 연평도로 해안포를 발사하고 남한이 대응 사격하는 국지전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군 2명이 사망하고 연평도 주민을 포함한 10여명이 부상당하였다는 경악스러운 소식을 접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분쟁지역인 서해5도 근처 바다에서 남북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있었지만 어떤 식의처럼 북한이 남한 영토에 직접 포격한 사례는 없었다. 남북 군인 사이에 대립을 넘어 단간인이 부상당하고 가족이 불에 타는 등 한국 전쟁이후 가장 심각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우리 여성들은 남북 사이에 '말'의 전쟁이 현실적인 '국지전'으로 비화된 오늘을 사색을 심각히 우려한다. 어떤 사례는 남북관계 악화와 대화단절이 일어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칫 전쟁이 현실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최정호 한국군과 피해를 입은 무고한 주민들에게 비참한 선전으로 조지와 위로를 전하면서, 남북 내전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희망한다.

북한군이 남한의 호국헌원을 이유로 연평도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공격하여 피해를 준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전사해도 지켜지야 하는 민간인 보호 규정을 어긴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한편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를 방지해온 것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서 '국지전'의 반복·확대가 아니면 분쟁의 근본적 해결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 비상한 상황에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 해소를 감행하며 남북한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임중히 촉구한다.

첫째, 현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남북양국은 더 이상의 무력충돌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이미 동족 사이에 군사적 대결과 전쟁이 가져왔던 참담한 공멸의 역사를 경험했다. 남북 사이에 더 이상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위기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아가 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물론,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쟁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무력충돌이 거듭되고 있는 서해는 남북 사이의 최악의 곳이다. 남북은 이미 104천천으로 서해지역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북 합의에 기초하여 서해분쟁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장구하기를 요구한다.

옛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남북관계를 강력히 밀당한다. 연평도 사태는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경제에도 크나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더 이상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국지전이 재발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인 한반도 정권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획기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를 요구한다.

우리 여성들은 한국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남북정부가 군사적 대립과 대방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 통일의 길로 나아가 한반도 주민과 세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남북이 상호 공격하고 민간인까지 희생당하는 불행한 현실을 두려운 심정으로 목격하고 있다. 남북 당국이 대화에 당장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평화의 방법'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의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1월 23일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단체 일동

장기여성단체연합, 광주권남여성단체연합, 대구중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회, 기록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일북여성단체,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수취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센터, 충북여성민주회, 평화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주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미성년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일대여성노동조합총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7 South Korean Women's Organizations' Statement on North Korea's Artillery Barrage on Yeonpyeong Island

November 23, 2010

Under no circumstances can war be tolerated.
Armed conflict must be stopped and dialogue started!

On November 23rd, we received shocking news on the outbreak of a localized skirmish after North Korean forces launched an artillery barrage against the South Korean island of Yeonpyeong from a coastal artillery base in the Yellow Sea followed by a round of return fire from the South. During this exchange, two South Korean marines were killed and approximately 10 or more were injured including the residents of Yeonpyeong.

Even though this conflict region of the five islands near the Northern Limit Line has seen inter-Korean military clashes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re is no precedent of a direct bombardment from North Korea on South Korean territory. Considering the civilian injuries and the damage done to homes, this is the most serious armed conflict since the Korean War.

We women are gravely concerned with today's incident which has ignited the 'war of words' into a reality of 'localized warfare.' This incident is an extreme demonstration of what tragic results the deteri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a rupture of dialogue can bring about. We cannot refrain from fearing that the slightest provocation could escalate this situation into the reality of war. Expressing our deepest condolences and sympathies to the innocent victims of Yeonpyeong and the Korean marines, we genuinely hope that the inter-Korean confrontation will not generate anymore victims.

The attack on Yeonpyeong, an area with civilian residents, by North Korea in response to South Korea's military exercise is rightfully deserving of censure. Violating security rules of civilians that are followed even in times of war is by no means tolerable. Meanwhile, our government's negligence of the deteriorating inter-Korean relations cannot help but be noticed. Inter-Korean relations must be fully re-examined and improved.

We are currently standing at a critical crossroads of either a repetition/expansion of this 'local war' on the Korean peninsula or finding a fundamental resolution to this conflict. In thes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we yearn deeply for a solution to the military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strongly press the government of both Koreas with the following demands.

First, we insist on the halt of all armed clashes lest the situation becomes further aggravated, and we demand that the two Koreas immediately enter into dialogue with each other. This year commemorate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We have already experienced the tragic lose-lose history of one people induced by military confrontation and war. Military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ll not help anyone. We must manage this crisis peacefully through various channels and demand the immediate resumption of dialogue to find a solution to the fundamental cause of such conflicts.

Second, we must find solutions to the issues of contention surrounding the Northern Limit Line. Repetition of outbreaks of armed conflict in the Yellow Sea between the two Koreas can be likened to that of a warehouse of explosives. In the October 4th Declaration (2007), North and South Korea previously agreed to designate the Yellow Sea region as a 'special peace and cooperation zone' for the pursuit of mutual benefits. Upholding the draft of the North-South agreement, we demand for a fundamental resolution to the Yellow Sea dispute.

Third, we strongly desire inter-Korean relations that will plant hope in the citizens. The Yeongpyeong incident has aggravated the anxiety of citizens and is also inflicting great damage on the economy. We hope that inter-Korean relations do not deteriorate further and that the localized skirmish does not recur. In order to prevent another dispute from reoccurring, we demand the establishment of a ground-breaking and active measure to address the fundamental cause of this conflict to transfer the armistice of the Korean peninsula to a peace agreement.

This year marks 60 years sinc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We women anticipate that the governments of both Koreas will seek to give hope to the citizens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he people of the world through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reunification rather than military confrontation and calamity. Today,

we are observing, with a fearful heart, a miserable reality where civilians are being victimized through reciprocated attacks by North and South Korea. Again, we strongly urge the authorities of North and South Korea to, without delay, enter into dialogue; and we press for the attain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peaceful methods, bestowing hope in the hearts of citizens.

Women Making Peace

*Kyunggi Women's Association United,
Gwangju-Jeonsan Women's Association United,
Daegu-Kyungbuk Women's Association United,
Busan Women's Association United,
Kyungnam Women's Association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Women for Women Minjung
Daegu Women's Association
Daejeon Women's Association
Busan Counseling Center Against Sexual Violence
The Korean Catholic Women's Community for a New World
Sewon Women's Association
Ulsan Women's Association
Jeju Women's Association
Jeju Women's Human Rights Solidarity
Chungbuk Women's Association
Pohang Women's Association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Korea Women Workers Association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orean Womenlink
Korea Women's Studies Institute
Korea Women's Hotline
Korea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National Solidarity for the Solution for Sexual Trafficking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arents for Charm/education
Women' Social Education Center*

The Need for Talks to Avoid Escalation of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Statement
November 25, 2010
GPPAC International Steering Group Meeting
Beirut, Lebanon

In response to the artillery exchange which took place on Yeonpyeong Island near the border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on November 23, 2010, the International Steering Group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extends its deepest condolences to the families of all those, including civilians, who lost their lives and to the communities affected by this tragic event.

This exchange of artillery comes as part of an ongoing conflict deeply entrenched in remnant Cold War structures. This situation has repercussions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hroughout the wider Northeast Asian region.

GPPAC strongly calls for an immediate cessation of hostilities to prevent escalation into another tragedy as has been experienced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ast. Furthermore, as an international civil society peacebuilding network, we advocate non-violent, non-military approaches to find a peaceful solution to this crisis, and emphasise the need for civil society involvement in this process. GPPAC is offering the expertise of its network to contribute to the facilitation of dialogue between the relevant stakeholders.

GPPAC calls for:

1. An immediate cessation of hostilities to be declared.
2. A further investigation to be held into all aspects of the artillery exchange before any judgment or action is made.
3. All sides to refrain from military provocation that could lead to further escalation of tension or violence, including military drills in the area.

4. An emphasis on dialogue, both bilaterally between the DPRK and ROK, and regionally, including the resumption of the Six Party Talks as the only existing framework for dialogue on peace and securit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5. Civil society participation in dialogue processes related to this conflict.
6. World leaders to build bridges to calm the situation rather than react the language and barriers of the past.

* GPPAC is a global civil society-led network which seeks to build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peacebuilding and the prevention of violent conflict. It was established in 2003 in response to a call made by UN Secretary-General Kofi Annan, and has since worked to strengthen civil society networks for peace and security by linking local,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of action; and to establish effective engagement with governments, the UN system and regional organisations.

*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 네트워크에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성명서를 12월 2일 발표했습니다. GPPAC은 2005년 유엔 북극이남 사무총장이 국제사회의 진정과 무장갈등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청해 와 국제 시민사회단체가 이 제안에 대응해서 만든 국제적인 네트워크입니다. GPPAC은 국제적으로 16개 지의 지부가 있습니다. 이 성명서는 GPPAC 동북아시아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 남북한, 중국과 대만이 분단되어 있어 도시별로 focal point를 두고 만나고 있습니다.

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the undersigned member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shocked at the artillery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n November 23, 2010, that caused the tragic killing of and injuries to the people of Yeonpyeong Island. We extend our deepest condolences to the families of all those who lost their lives and to the communities affected. We categorically condemn the attack that caused the tragedy, no matter what background there might be for the respective governments.

We are also gravely concerned about the developments after the incident. The tension caused through military activities and provocative behavior among policy makers and even the public is growing. While we understand the emotions behind these reactions, an escalation of tension would only lead to further violence and confrontations. We must ease tensions, and work together to find creative, peaceful solutions. Dialogue is the only way to proceed. The people of Northeast Asia should be united in calling for peace.

We hereby call on all the governments and people concerned to commit to the following:

1. Stop military activities now.

A ceasefire must be declared by North and South Korea immediately. Military exercises in and around the area are counterproductive and should be stopped. All the parties must refrain from any acts that increase tension in the region.

2. Work to start dialogue.

The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must arrange diplomatic talks as soon as possible, and other governments should work to make such talks a success. Regional dialogue should also be pursued, including an early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3. Investigate the inciden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fact that the area of this incident has long been disput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ll the parties should therefore have fully refrained from provocation and military actions. International investigation needs to be carried out to clarify exactly what happened.

4. Do not start an arms race.

No government should use this event as an excuse for military build-up or an increase of military expenditure. Build-up of military capability would not prevent conflicts, but rather trigger an arms race. An arms race would not only deprive the people in need of their limited resources, but also risk additional confrontations. Regional cooperative disarmament measures and security arrangements should instead be developed.

5. Create and expand Demilitarized Zones.

We call on the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to work to establish a Peace and Cooperation Zone in the West Sea/Yellow Sea as agreed in the Joint Statement of the North-South Summit of October 4, 2007, with a view to preventing conflicts in the area. We further call for the creation and expansion of Demilitarized Zones (DMZs) in other disputed areas in the region. In such zones, military activities, including exercises, should be prohibited,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such as dialogue and transparency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6. Civil society has a critical role to play.

Civil society actors such as NGOs, academic institutions and the media can play a critical role to facilitate the processes outlined above. Governments should allow and encourage them to play their legitimate roles. The media has a special responsibility to refrain from any provocation. Rather, the media should promote a balanced analysis and facilitate dialogue.

This tragic incident reminded us of the fact that our region is still divided and suffering from the remnants of the Cold War. More than half a century since the armistice was declared in the Korean War, a peace regime needs to be realized on the Korean Peninsula, along with a peace mechanism in Northeast Asia as a whole. Recalling the North-South Declarations of June 15, 2000, and October 4, 2007, and the Joint Statement of Six-Party Talks of September 19, 2005, we call on the governments concerned to make further efforts, and reaffirm our commitment to strive to achieve these goals.

December 2, 2010

Initial Signatories:

ANDO Hiroshi, Nonviolent Peaceforce, Tokyo
HUANG Haoming, China Association for NGO Cooperation, Beijing
HSU Sau-chien,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Academia Sinica, Taipei
Meri JOYCE,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Liaison Officer, Tokyo
JUNG Gyung-Lan, Women Making Peace, Seoul
KAWASAKI Akira, Peace Boat, Tokyo
Anton KOSTYUK, Maritime State University, Vladivostok
LEE Jae Young, Korea Anabaptist Center / 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Seoul
LEE Taeho,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eoul
Kathy R. MATSUI, Hague Appeal for Peace Global Campaign for Peace Education, Tokyo
SASAMOTO Jun, Japan International Lawyers Solidarity Association (JALISA), Tokyo
SHEN Dingli, Fudan University, Shanghai
YI Kiho, Hanshin University, Seoul
YOSHIOKA Tatsuya,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Initiator / Peace Boat, Tokyo

*This statement was drafted and initially signed by the members and affiliates of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Steering Group, and made open for endorsements.

*Affiliations are for identification purposes only.

우리 여성들은 모든 군사적 도발을 반대하고 남북대화를 촉구한다.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해안포가 발사된 이후 한반도는 전쟁위기에 놓인 채 16일이 지났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병사와 민간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이 조속히 쾌유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밀정병에서 생활하신 주민분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연평도가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고 평화의 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처할 때이다.

1.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적 행동과 도발은 중단해야 한다.

연평도 사태 이후 남북 긴장과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11월 28일 미국의 핵함모가 서해안에 들어와 무력시위를 벌이고, 신임 국방부 장관은 교전 규칙을 개정해 항공기 공격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서해 지역에 대대적인 전력증강을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하였고, 연일 북한 규탄집회가 열리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도 강력한 보복과 응징을 천명하고 있으며 DMZ 주변의 군사적인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고 한다. 이처럼 군사행동과 갈등적인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는 순식간에 전쟁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 남북한의 호전세력이 만나면 확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아산정책연구소 조사(11.30)에 따르면 65.2%가 '전쟁은 피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어 확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추가적인 무력 충돌 및 확전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일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려면 남북대화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것이 일차적 의무이다. 이번 연평도 사태는 군사적으로 인이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지만, 전쟁억지력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남북대화가 중단된 것이 사태를 키웠다. 얼마전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이번 연평도 사태로 남북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다. 그러나 전쟁 국민의 안녕을 생각한다면 정치적인 대화로 전쟁을 막는 것이 가장 최선이므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서해안을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협력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3. 주변국은 군사훈련과 군비 경쟁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의 전쟁사나리오는 새삼스런 이야기가 아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득을 볼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무력갈등은 남한의 군사비 지출을 늘리게 되고 미국의 군수산업은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일본은 북한의 공격을 이유로 자위대 무장을 강화 하면서 평화헌법 수정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한반도의 위기는 동북아의 위기도 확장될 개연성이 크다. 미, 일, 중, 러 4개국은 6자회담의 당사국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우리 여성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전쟁만큼은 원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비 긴장고조는 군비 경쟁을 유발하고 미묘한데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군사비 지출 증가는 여신아동, 노인 등의 공과금을 재전하는 사회복지비 지출을 억제하게 된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국가에서 여성의 대한 공격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은 평화형성자로서 평화만대 행동을 전개할 것이며, 국내외 여성평화세력과 연대하여 한반도의 평화지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에 평화를 존중하는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남과 북은 한반도를 전쟁상태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군사적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
2. 주변 4강은 남북이 한반도 평화구축을 통해 동북아 평화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3. 우리 여성들은 전쟁없는 한반도를 위해 남북대화 계개를 촉구한다.

2010. 12.9

한국여성단체연합 다문화평화한세상살여는여성모임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한여인의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살여는원주요여성공동체 새올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부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통일단은 여성회 보람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래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매매문제 해결을위한한국연대 학교육육위원회한국학부모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호소문

연평도 포사격 훈련 계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발적 전쟁발화를 불러 올 수 있는 일체의 긴장고조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1. 정부가 연평도에서 포사격훈련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북측은 이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포사격 훈련이 '통상적이고 정당한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포사격훈련은 이미 일종의 무력시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훈련은 단순한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응포격과 확전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군사적 초기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냉정을 되찾고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지 자극적인 포사격 훈련을 강행하여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굴복시키는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포사격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우선, 군 당국과 정부가 강행하려는 사격훈련은 결코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경찰상이 포사격 훈련은 무장 갈등이 예고되는 지역에서 확전까지 감수하는 공공연한 무력시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확전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정부의 교전방향이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전은 남북 주민들의 인명피해까지를 감수하는 군사적 사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확전 의지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확전가능성을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동의와 합의 없이 대통령이 군에 전쟁을 감수하는 행동을 지시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러한 성격의 군사작전에 동의했습니까? 확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중대한 문제가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안이하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포사격 훈련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 훈련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3. 또한, 이 훈련이 반드시 정당한 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군 당국과 정부는 북의 공격을 받은 지역에서의 자위적 의미의 포사격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비태세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군의 의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11월의 연평도 사건이 불분명한 서해경제선으로 인한 남북 간의 오랜 군사적 갈등의 맥락에서 일어났고, 직접적으로는 연평도에서의 포사격 훈련을 빌미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연평도 인근 해역은 한국전쟁 이래

남한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NLL(북방한계선)은 유엔사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항해제한구역으로서, 유엔사 스스로도 시해상의 정계선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인정도 인근 해역으로 포 사격을 감행하는 것은 남북간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모호한 경제 내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4. 포사격 훈련을 둘러싼 남북간의 갈등은 서해 5도 지역은 물론 한반도를 국제적인 분쟁 지역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과 정부는 동시에 이 문제가 가지는 국제적, 정치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연평도 포 사격 훈련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제안으로 12월 20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남북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성격의 사안이 국제적인 분쟁사안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 사안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남북 당사자의 지용적 역할으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와 공간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해 5도 주민들은 물론 한반도 주민 모두에게 결코 이로운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 당국과 정부는 포 사격으로 야기될 국제적 논란과 또 다른 무장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5. 국민들은 전쟁에 반대합니다. 정부는 군사적인 대비태세가 확고해야 전쟁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미 연합군사력이 군사적 우위를 과신하여 북한 급변사태 대책과 같은 자극적인 군사계획을 발전시킨 것이 도리어 북으로 하여금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기습적이고 비대칭적인 군사계획 개발에 몰두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정부가 내건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무시정책이 북을 궁박시키기보다 도리어 최소한의 한반도 위기관리 장치조차 폐기해 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해의 평화는 군사적 과시가 아니라 남북 관계의 개선과 대화채널의 복구 같은 평화적 방식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서해에서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남북 사이에는 서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합의가 있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위한 남북 회의를 재가동해야 합니다.

2010년 12월 19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전쟁을 부르는 언쟁도 포격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남과 북은 군사 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나서라

사해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현실로 되고 있다.

정부가 연평도에서의 포사격훈련 개지를 선언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제2, 제3의 예상하지 못할 자위적 타격을 공언함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천에까지 고조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도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며 연이어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급기야 유엔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원리를 일체의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연평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남과 북 모두에 될 수 없는 막대한 후과를 남길 뿐이다. 남과 북은 강등과 대결을 격화시킬 일체의 행동을 도수 중단하고, 즉각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연평도에서의 포사격훈련은 보다 확대된 군사적 충돌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미 '동상적인 훈련'의 의미를 넘어서 버렸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연례적인 훈련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해상 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첨예하게 고조된 관측 상황에서 이번의 포격훈련은 '외래적인 훈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전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어떤 국어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외래적인 훈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쟁으로 귀결된다면, 어떤 국어도 그것을 간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명의 생명과 안전, 자산을 지켜야 할 정부가, 선무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연례적인 훈련'을 강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만약 정부가 이번 훈련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살생을 담보로 한 포행수위적 군사행동에 다를 아니다.

전쟁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풍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군사 훈련을 강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억제하기 위한 절제되고 이성적인 행동이지, 자존심을 앞세운 두들ิติ기가 아니다. 정부는 전쟁으로 이어질 군사 훈련이 아니라, 군사적 대치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대화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군사대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정부 본연의 이성적 태도로 이 위기의 해소에 나설 것을, 우리는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

2011년 12월 30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호소합니다.

지난 20일 국군의 연평도 작격훈련에 북한이 군사적 행동으로 응수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군사주의로 치달고 있는 좌파의 북한 움직임은 매우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때일수록 냉평은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어떤 군사행동도 확연으로 밀려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 전쟁의 역사가 보여주는 지중은 모든 전쟁은 의도하지 않은 채 우발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평화를 지켜낸다는 우리 사회의 굳은 지오와 노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자극하는 일체의 공격적 군사행동과 도발적 언동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작격훈련이 큰 불상사 없이 넘어갔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대응사격은 없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타격을 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군사 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히 큼니다.

먼저 북에 요청합니다. 군사적인 행동은 물론이고,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언사조차도 삼가 해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들은 우리 국민들의 강한 반발만 부를 뿐입니다.

우리 정부도 민감한 서해의 남북 대치 수위에서 필요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평화는 무력안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의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도 우리가 지혜와 자제력을 발휘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단긴한 안보태세의 책일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1990년대와 2002년에 있었던 연평도 인근에서의 군사충돌과 2009년의 대청도 근해 충돌, 그리고 올해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서 보듯이 서해는 한반도 군사 충돌의 서발점이 되어왔습니다.

서해의 평화적 판리를 위한 필요조건은 투입할 필요도 없이 굳건한 안보태세의 유지입니다. 북군의 부러움에 대해 우리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침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역 충돌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나 비핵화의 실현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은 남북대화의 복원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넘기면 기회가 생기듯이, 대화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시설단을 수용하겠다는 북한의 '말은 무뎠지만, 최소한 대화의 시작을 위한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한반도 북쪽은 서해의 군사증진을 예방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이나 나산섬 구상에 담긴 완충지대 구상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서해의 분쟁수역을 완충지대로 만들어 남북간 군사증진을 방지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물론 상호 불기원 경제선과 구역에 대해 "계급차지 방법이 관할해 온 구역"을 유지하기로 한 남북기본합약서 조항은 확고히 지키려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전쟁은 생명을 파괴하고,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절대악'입니다. 우리는 일체의 차이를 넘어서서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의 존엄 앞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는 오직 한마음으로 이렇듯 호소합니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됩니다."

2010년 12월 29일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 범 종교계, 시민사회 원로·지도자 일동

서명자 명단

<종교계>

[가톨릭] 김병삼 몬시뇰 (인천교구), 황상근 신부 (인천교구), 김용길 신부(서울대교구), 안충석 신부 (서울대교구), 양승 선무(서울대교구), 함해승 선무(서울대교구), 김동진 선무(서울대교구), 안승길 신부(민주교구), 안재석 선부(청주교구), 차동길 선부(청주교구)
[개신교]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차기 대표회장), 김영석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광관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김기태 (감동, 성령교회), 김남석 (한국종교인명회회의 사무총장), 김상복 (합평무야교회), 나혁범 (평화공동체운동본부 대표), 박종화 (경동교회 당회장), 손인웅 (덕수교회), 이영훈 (대외도순복음교회), 이정민 (기독교방송 이사장, 신촌성결교회), 이종복 (인천은혜감리교회), 권병규 (장남교회), 권병호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정태선 (세계교회협의회 중앙, 심령위원), 최복규 (한국공인교회), 한기양 (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불교] 자승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인공 (한국불교 대교종 총무원장), 정산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해경 (대한불교 진각종 총무원장), 필년 (영국대학교 이사장), 보진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승려회), 범담 (대한불교 조계종 호계원장), 현을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장), 태승 (대한불교 조계

장 로고인장), 정우 (물보장한 풍도사 주지, 신라 (물보장한 해인사주지), 영조 (승보장한 송광사 주지), 영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불교방송 이사장)

[원불교] 김주현 (원불교 교정원장), 김 현 (원불교 중앙교구장), 성도홍 (원불교 서승교구장), 김계봉 (원불교 대한교구장), 김정덕 (원불교 평양교구장), 김대진 (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천도교] 임순길 (천도교 교명), 이상민 (천도교 총무원장), 정정숙 (천도교 교화국장), 박남수 (총학인 즉통원회 상임대표)

[성공회] 최근덕 (성공회장), 여 학 (성공회 수석 부회장)

[민족종교] 김재관 (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

<시민사회 - 여성>

김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강성규 (홍은복지기성민운동원장 회장), 장영숙 (그레코리아포럼 공동대표), 장길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태국 (한국NGO연대 상임고문), 권근술 (어린이재단 이사장), 권이희 (한국여성민주회 상임대표), 김련희 (건강증진실현협회 이사장), 김동준 (미얀마두승호수살리기시민연대 공동대표), 김광원 (직립유골재유족회 회장), 김삼근 (K15공통선원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성우 (한국여성유권자연회 회장),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 김은숙 (전경화물안정추진여성회 이사장), 김일식 (민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남윤진 (한국여성차별철폐 상임대표), 박경조 (대한성공회 대우교, 녹지연합 공동대표), 박영규 (서울대 교수), 박양중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고문), 박윤진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영순 (피양재학소 상임이사), 박연걸 (홍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인숙 (피코리디스프린 회장), 박재순 (연호사, 전 대한연호사협회 회장), 박희상 (아시아 피양재 YMCA 연명 회장), 박지철 (홍사단 이사장), 박희정 (서울대 명예교수), 박승현 (전 민주사회통일연호사모임 회장), 박 찬 (평화재단 이사장), 박형규 (피양재원안도시사랑의민남나눔운동 이사장), 석영훈 (전 대한복지자사 총재, 한우미공통선원연합 총재), 송봉호 (루든 아시아 이사장), 신경원 (서인), 신영자 (평화3000 이사장), 양영영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 염두문 (문화재단 이사), 오영숙 (신진화재학수진회연합회 공동대표), 오재석 (아시아교육연구원 회장), 권인호 (한국발명원 회장), 손경로 (역사문화교육진흥재단 상임대표), 윤은자 (전 경기도지역연합회 총무), 손성원 (고리아포럼 회장), 윤이준 (평화연구원 원장), 윤준희 (K15 민주포럼 회장), 이광순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상임대표), 이근식 (서울시립대교수), 이길현(한국여성평화연구원 전 원장), 이명희 (자유교육연합 대표), 이문순 (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석대(연호사, 시민평화포럼지도위원), 이진표 (원불교 교무), 이은중 (천도교여성회 회장), 이순환(연호회 공동대표위원장), 이시지 (한정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용현(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은영 (꽃고리성지발전회),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임달진 (우리민족서초등기초운동 상임공동대표), 임종원 (어린이의학용기부본부 이사장), 원대원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고문), 정광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성현 (한국DMZ 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정인성(한국종교인명학회회, 남북교과위원회), 정원복 (봄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은 (서울총사단 회장), 조영희 (평화물안정추진여성회 상임대표), 조광희 (소설가), 조홍근 (지속발전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조희순 (주사), 정 희 (불인불교승가회 회장), 최이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 최영도 (민호사), 최영희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대표),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최유원 (도산봉시단 상임대표), 최일남 (소설가), 최장우 (전 서울연호사회 회장), 황승헌 (연호사), 현기영 (소설가), 홍정길 (남북나눔운동 이사장), 황석영 (소설가) 이상 137명

【 부록 】 여성평화 뉴스레터 부록

| 월 | 목차 | 소개록 | 필자 |
|----|-------------------------------|-----------------------------|-----|
| 2월 | 2010년 평화여성회 사업방향 | 한반도 평화체제형성을 앞당기기 위한 여성평화운동 | 조영희 |
| | 2010년 평화여성회 총회 | 여성의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내자 | |
| | 사진으로 보는 평화여성회 총회 | 사진으로 보는 평화여성회 총회 | 오영주 |
| | 모범의원상 수상소감 | 모범의원상을 받고서 | 김영민 |
| | 김동해결과 평화 | 부도교사 교육 안내 | 오영주 |
| | 김동해결 자료집 소개 | 2009 평화캐뮤니티만들기 활동에서 | |
| | 평화포토갤러리 | 포아라 | 이승현 |
| 4월 | 함께 걷는 평화길을 | 희미를 남부해 주신 회원들 | |
| | 여성의 참여로 회당을 헌신코 | 사진으로 보는 38 여성대회 | |
| | 우리 아이를 용서해주세요 | 최복직 사업 조정과 양성 프로그램 | 기보니 |
| | 최복직사업 조정과 혼란 마쳐 | | |
| | 김동해자료집 | 21세기 소년사범 개혁의 방향과 과제 | |
| | 평화포토갤러리 | 상처 | 이승현 |
| | 시가 있는 평화의 길 | 자유 | 김남주 |
| 5월 | 함께 걷는 평화길을 | 희미를 남부해 주신 회원들 | |
| | 모듬우물터에서 | 고운 일흔 한살 변함시대 | 홍승희 |
| | 이명박 대통령 326 천안함 격침 참화문에 대한 논쟁 | | |
| | 평화여성회 이사입니다 | 평화롭만드는여성회 사무실 이전 안내 | |
| | 일본내 조선학교 차별 반대 연대사 | 일본내 조선학교 차별 반대 연대사 | 정경란 |
| | 평화의 길에서 지지지 말자 | 김동해결과 평화교육 참가 후기 | |
| | 시가 있는 평화의 길 | 비무장지대 | 윤익환 |
| 6월 | 평화포토갤러리 | 봄나날 | 이승현 |
| | 함께 걷는 평화길을 | 희미를 남부해 주신 회원들 | |
| | 모듬우물터에서 | 혼자는 광사꾼 소관? | 홍승희 |
| | 평화여성회 이사입니다 | 평화롭만드는여성회 이사 일차 변경 및 개소식 안내 | |
| | 누가 '죽고 사는 문제'를 독점하려 하는가? | 참여연대 보고서에 관한 논쟁 | 정경란 |
| | 제 삶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 김동해결과 평화교육에 참가하니 | 안향숙 |
| | 다시 6.15! 여성 평화의 배머우기 | 다시 6.15! 여성 평화의 배머우기 | |

| 월 | 목차 | 소제목 | 원자 |
|--------------------------|-------------------------------|----------------------|-----|
| 7-8 월 | 평화포도궤리리 | 담배 | 이승환 |
| | 시가 있는 평화의 길 | 길 | 신경림 |
| | 함께 걷는 평화길음 | 희비를 남부해 주신 회원들 | |
| | 모듬 우물터에서 | 선우해 관계 | 홍승희 |
| | 다독 습습계 평화를 노래하기-- | 평화극상회 여성미래센터 입주 | 여혜숙 |
| | 평화여성회에 도움을 주신분들 | 이경미회원터 입주해 도움을 주신 분들 | |
| | 평화는 목표가 아니라 여정이다 | 김오발리리집 역량강화 과정을 다녀와서 | 김선혜 |
| | 마스런 사람 내용이 그리워지... | 김선영 간사 | 김선영 |
| | 평화포도궤리리 | 담배 | 이승환 |
| | 시가 있는 평화의 길 | 임기해보 | 김영환 |
| 함께 걷는 평화 길음 | 희비를 남부해 주신 회원들 | 이덕경 | |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새로운 접근 | 모래 조경 | | |
| 평화글쓰기 | 책임자도 짐작도 넘어 그대로 인정하며 지켜주는 평화 | 윤수경 | |
| 모듬우물터에서 | 미국 해군의 길 | 홍승희 | |
| 9월 |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맞이하며 | | 장경란 |
| 활동을 통해, 입장을 통해 평화로 이르는 길 | | | 여혜숙 |
| 2010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 | | | 김선영 |
| 강동 모꼬지에 다녀와서 | | | 김영지 |
| 평화 포도 궤리리 | 실재와 보기를 모르는 당신, 사랑합니다 | | 이승환 |
| 시가 있는 평화의 길 | 길 | 신경림 | |
| 함께 걷는 평화 길음 | 희비를 남부해 주신 회원들 | | |
| 버들길에서 | 분단비용 통일비용 | | 홍승희 |
| 10월 |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 |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만남 | 장경란 |
| 사건으로 보는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 | | | |
| 평화 안보 모든 영역에 여성 적극 참여하길 | 유엔 안보의 걸리안 1325 채택 10주년 맞아 촉구 | | 장경란 |
| 2010 회의 진행과 훈련자정 안내 | | | |
| 평화포도궤리리 | 각자의 길 | | 이승환 |
| 시가 있는 평화의 길 | 갈대가 불리온 가을 | | 김영환 |
| 함께 걷는 평화 길음 | 희비를 남부해 주신 회원들 | | |
| 평화 글쓰기 | 장세식에 관한 고경관님 | | 홍승희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56-037 서울시 양동포구 임동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401호

전화 02-929-4846/7 fax 02-929-4843

이메일 wmp@peacewomen.or.kr / www.peacewomen.or.kr

후원계좌: 300-810005-03104(하나은행) 예금주: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